

第215回國會 (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5號

國會事務處

日時 2000年11月27日(月)
場所 第2會議場

議事日程

- 1.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2. 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審査된案件

- 1.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 2
2. 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2

(10시24분 개의)

○委員長 張在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 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 법조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立法調査官 孫忠憲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張在植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 변 경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文喜相 위원께서 사임하 시고 대신 宋錫贊 위원께서 새로 보임되었습니다.

宋錫贊 위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委員 대전 유성구 출신 宋錫贊 위원입니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張在植 위원장님 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나라의 살림 의 양과 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으로 새로이 참여하게 되어서 개인적 으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어려 운 재정 여건하에서 위원으로서 책임 또한 막중함 을 느낍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귀중한 조언을 받들고 긴 밀히 협력하여 우리 국가재정의 현 여건하에서 가 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張在植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말씀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국회 일정이 잠시 중단되어 1999년도 결산과 2001년도 예산안 에 대한 심사가 예년에 비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국회가 정상화됨으로써 결산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게 되어서 매 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2일까지 국회의 의결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 년에는 부득이 법정기일을 넘겨서 12월8일 본회의 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교섭단체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정기일 내 예산안을 처리하 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국민 여 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드 립니다.

위원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불안과 국제유가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 니다. 이러한 시기에 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 고 사회 각 부분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활력을 조속히 회복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의 심의에 임하는 저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소속 상임위원회의 국 정감사와 또 예·결산 예비심사 등으로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또 이 자리에서 결산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힘드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과 우리 위원회의 결산과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유념하시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교섭단체간에 합의된 일정 내에 예산·결산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의진행과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과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해서는, 오늘 현재 결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은 12월4일까지의 일정에 대해서만 간사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부별심사를 포함한 남은 일정에 대해서도 협의가 확정되는 대로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들께서 남은 일정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안 심사에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출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관례에 따라서 결산과 예산안 상정일에 출석하시어 인사를 하시고 종합정책질의 마지막 날 출석하시어 그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하시기로 간사 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자치부장은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까 잠깐 나왔다가 나가시기로 되어 있고 외교통상부장관은 현재 아세안 회의에 참석 중이어서 대신 차관께서 나오셨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 2. 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32분)

○**委員長 張在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

랍니다.

○**國務總理 李漢東** 존경하는 張在植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부를 대표하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1999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 그리고 2001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많은 노고를 겪으실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승인해 주신 지난해 예산을 당초의 편성취지와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정부는 99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IMF 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보여주신 예결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편달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집행과 국정운영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적과 질책을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張在植** 다음은 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존경하는 張在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결산내용 설명에 앞서서 우리 경제의 현 상황과 당면과제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간추려서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 국민 모두가 합심단결하여 경제를 정상화시키고 위기의 근본원인을 치유하기 위하여 구조개혁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는 연간 9%의 성장에 3% 이하의 물가상승률, 110억불 내외의 국제수지 흑자 그리고 4%대의 실업률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체력을 갖추고 활력을 찾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시경제를 뒷받침하는 하부구조가 튼튼하지 못함에 따라 대내외 여건변화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등 외환 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제유가의 급등, 반도체 가격의 급락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대우차와 한보철강의 매각 실패, 기업·금융구조조정 지연에 대한 우려, 산업 간·지역 간·계층 간 격차 그리고 소비심리의 위축 등 대내적 불안요인도 상존해 있으며 특히 최근 나타나기 시작한 개혁 피로감과 제몫 챙기기 경향은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 우리 경제는 도약과 좌절이 판가름 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 개혁을 완수 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해 나가야 하겠으며 무엇보다도 먼저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조속히 완결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을 두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1999회계연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중 일반회계는 세입액이 84조 2,806억원, 세출액이 80조 5,099억원이며 다음연도로 1조 3,983억원을 이월하여 2조 3,724억원의 순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보다 5,955억원이 많은 84조 2,806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중 조세수입은 경기의 빠른 회복으로 인한 소비 및 수입의 증가와 증권시장 활황 등에 따라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증권거래세 등이 전반적인 호조를 보여 예산액보다 2조 6,814억원이 초과된 65조 670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예산액 21조 2,995억원보다 2조 859억원이 적은 19조 2,136억원의 징수실적을 보였는데 이는 조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채발행 규모를 예산보다 2조 4,000억원 축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84조 4,984억원의 95.3%인 80조 5,099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것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경제개발비는 금융산업 구조조정 지원과 국채이자 지급 등이 늘어

남으로 인하여 98년보다도 5.9% 증가된 23조 4,990억원이 지출되었고 사회개발비는 사회안전망 확충, 저소득층 보호 등 사회복지확충하고 실업대책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98년보다 27.7%가 증가한 9조 2,003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외 일반행정비와 방위비, 교육비, 지방재정교부금 등으로 47조 8,106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용자특별회계와 통신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22개 특별회계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65조 7,044억원이며 세출액은 61조 6,706억원으로 4조 338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조 9,735억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2조 608억원입니다.

동 세계잉여금은 예산회계법과 각 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거나 관련기금에 적립하게 됩니다.

특별회계 중 조달사업특별회계 등 4개 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먼저 통신사업특별회계에서 체신예금의 금융영업수익 등으로 1,504억원, 조달특별회계에서 조달사업 및 비축물자 판매수익으로 447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양곡의 이중가격제 운영에 따라서 342억원, 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철도운영수익 감소로 2,51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901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회계연도에 종료된 계속비 사업은 기간국도 4차 건설사업으로서 당년 지출액 3,261억원을 포함하여 그 지출누계액은 1조 4,768억원입니다.

다음은 1999회계연도의 예비비사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 예산액은 2조 5,300억원으로 그중 지출된 금액은 1조 9,619억원입니다.

지출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비 1조 2,706억원, 실직자지원대책비 949억원, 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에 의한 봉급부족액 등으로 674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각 소관부처의 세출예산에 편입되어 지출되었습니다.

한편 특별회계는 11개 회계에서 1,792억원의 예비비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그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만 정동진 무연탄 비축장 이전비로 3억원이 지출되고 나머지는 지출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모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니다.

1999회계연도 결산대상 기금은 국민주택기금, 국민연금기금 등 모두 37개 공공기금이며 연도 말까지 운용된 기금은 35개로서 외국환평형기금에서 환차평가손으로 7,412억원, 농지관리기금에서 차입금 이자지급 등으로 2,089억원 등 6개 기금에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국민연금기금에서 자산운용수익등으로 4조6,281억원, 국민주택기금에서 용자금 이자수익 등으로 3,384억원 등 31개 기금에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5조 4,665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회계연도 말 현재의 국가채권총액은 전년도 말에 비해서 8조6,791억원이 증가된 126조7,372억원입니다.

이는 주로 재정용자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와 국민주택기금 등 각 기금에서 용자금이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국가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회계연도 말 현재 국가채무총액은 89조7,146억원으로 그 내역은 차입금이 21조3,862억원, 국채가 65조8,060억원, 국고채무부담행위가 2조5,224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채무가 증가한 것은 IMF 위기이후 금융구조조정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고용창출 등을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IBRD 등 국제기구로부터 차관이 도입됨에 따른 결과이며 전년 말에 비해서는 18조2,773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한편 1999회계연도 말 현재 국가가 채무를 보증한 액수는 전년도 말에 비하여 9조5,513억원이 증가된 81조5,046억원이며 이는 주로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 등의 보증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끝으로 국유재산과 물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회계연도말 현재 국유재산총액은 98년도 말보다 8.4%가 증가된 163조1,370억원입니다.

국유재산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출자 및 정부투자기관 출자에 따른 유가증권 취득 등이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1999회계연도 말의 물품 현재액은 98년도 말보다 4,856억원이 증가된 4조6,649억원입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張在植** 다음은 감사원장 나오셔서 1999년도 결산검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院長 李種南** 존경하는 張在植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9회계연도 국가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원은 헌법 제97조, 제99조와 감사원법 제21조, 제22조 제1항,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회계를 검사하고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한 다음 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난 9월1일 국회에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기금관리기본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작성한 각 검사보고서는 별책으로 작성해서 위에 말씀드린 결산검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보고서에는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의 확인, 예비비와 계속비의 지출에 대한 검사결과,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사항 등에 대한 처분요구내용과 함께 감사원의 주요감사활동내용을 실었고, 그밖에 공공기금의 예산상태와 손익상황, 국유재산과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 채권 현재액 총계산서, 그리고 국가채무에 관한 계산서에 대한 검사결과를 함께 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22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49조9,851억원, 세출결산액은 142조1,805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이 7조8,046억원이 발생하였으며, 한국은행이 제출한 국고금출납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정부결산서를 검사한 결과 일반회계 행정자치부 소관에서 고정자산매각대 징수결정액과 불납결산액 중 일부금액이 많이 계상된 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 잡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의 지출에 대한 검사결과 정부의 예비비 사용 총괄서상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2조5,300억원 중 지출결정액이 2조693억원, 지출액이 1조9,619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854억원이고, 불용액이 4,827억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재정용자특별회계 등 11개 특

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 1,792억원 중 지출결정액과 지출액이 각각 3억원이고, 불용액이 1,789억원이었습니다.

계속비의 지출에 대한 검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최종연부액의 지출이 본 연도에 속하는 계속비사업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기간국도 4차 건설사업으로 예산액 1조5,400억원 중 지출액이 1조4,768억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575억원, 불용액이 7억원이었고, 재해복구비로 50억원이 이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37개 공공기금의 재산상태 및 손익상황은 정부결산서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195조238억원, 부채총액이 133조8,852억원, 자본총액이 61조1,385억원이고, 수익총액이 30조2,970억원, 비용총액이 24조8,304억원, 당기순이익이 5조4,666억원이었으나 검사결과 자산은 38억원이, 부채는 28억원이 각각 실제보다 많거나 적게 계상되고, 수익은 78억원이 비용은 79억원이 각각 실제보다 많거나 적게 계상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 잡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 물품, 채권 및 채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정부의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상 본 연도 말 현재액이 162조5,287억원이었으나 검사결과 국민주택기금 등 6개 기금과 일반회계 국방부 소관에서 모두 6,141억원이 실제보다 적게 계상되거나 많이 계상되어 이를 바로 잡도록 하였습니다.

물품은 정부의 물품 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상 본 연도 말 현재액은 4조6,667억원이었으나 검사결과 일반회계 국무총리실 소관 등 2개 소관과 고용보험기금에서 19억원이 실제보다 적게 계상되거나 많이 계상되어 이를 바로 잡도록 하였습니다.

채권은 정부의 채권 현재액 총계산서상 본 연도 말 현재액이 126조7,447억원이었으나 검사결과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등 2개 기금, 일반회계 건설교통부 소관 등 7개 소관과 조달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에서 모두 117억원이 적게 계상되거나 많이 계상되어 이를 바로 잡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채무는 정부의 국가채무에 관한 계산서상 본 연도 말 현재 국가 채무가 89조7,154억원, 보증채무가 81조5,046억원이었으나 검사결과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행정자치부 소관에서 국고채무 부담행위 채무액 8억원이 많이 계상되어 이를 바로 잡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활동과 그 결과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원은 그간 국가 최고감사기구로서 조직기강의 근본을 다지고 회계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이나 정책 시행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시정함으로써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국정개혁의 실효성 확보와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공기업 전반의 경영구조 개선 실태를 점검하여 공공분야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금융산업을 종합 점검하여 금융부실의 책임규명과 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경제 규제완화에 대한 이행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국정개혁을 촉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투자사업과 수익사업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였고 대형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과 원자력발전소 등 각종 건설사업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설계 및 시공상의 문제점 시정과 아울러 불합리한 건설관련 법령의 정비와 부조리의 요인이 되는 건설관행의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그밖에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와 민생안전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활기찬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허가 등 취약업무에 대한 강도 높은 직무감찰과 각종 비리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창의적인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 공무원을 모범공직자로 선발하여 포상하는 등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활동 결과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 감사원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본 연도에 처리한 것은 모두 6,014건이었고 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 금액은 모두 6,333억원으로서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추가징수하거나 회수·보전하도록 요구한 금액이 2,975억원, 환급 또는 추가지급하도록 요구한 금액이 167억원, 그밖에 예산을 절감하거나 국민부담을 경감한 금액이 3,191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리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문책 등을 요구하거나 고발한 인원은 모두 942명에 달합니다.

위의 처리사항 6,014건 중 국가기관에 대한 조치 건수는 모두 2,053건에 변상판정이나 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 요구금액은 4,439억원, 징계 문책 등을 요구한 인원은 176명으로서 분야별로 주요 지적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과세자료를 제대로 수집 활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계산을 부정적하게 한 것 등이 217건에 974억원이었고 농지전용부담금 등 조세의 수입을 잘못 부과 징수한 것이 74건, 49억원에 달하는 등 모두 291건을 지적하여 1,023억원을 추가 징수결정 또는 환급조치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예산을 편성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이용 또는 전용한 것이 564건에 271억원, 보조금·용자금을 기준보다 많이 지원하거나 보조·용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이 74건에 26억원이었고 229건의 공사를 과다 설계하는 등으로 사업비 236억원이 낭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이 있어서 예산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많이 지원된 보조금이나 용자금은 회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련된 주요 지적내용을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 편성 및 심의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감사결과가 국가의 예산편성과 연계되도록 조치하는 등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예산이 국회의 의결 취지를 살려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기관에 대한 처분요구사항의 집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연도에 처분요구한 1,432건과 전년도에 미집행사항으로 이월된 385건을 합친 1,817건 중 2000년10월31일 현재 1,616건이 집행되고 나머지 201건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감사원은 지난 1년간 감사 운영의 기초를 국가적 당면과제인 국정개혁을 촉진하는 감사, 국가 주요시책이나 사업의 효율성 및 사전예방과 지도를 중시하는 생산적 감사 그리고 국민화합과 여망에 부응하는 열린 감사에 두고 국가사회 발전을 위하여 모든 감사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또한 감사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감사의 생산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감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수 전문인력을 확충함과 아울러 감사원 기구를 개편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였고 감사활동과 원 운영상황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과 함께 하는 감사원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국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희 감사원은 국정개혁의 완수와 부정부패의 척결을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원은 국가예산회계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것으로써 1999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張在植** 다음은 방금 감사원장께서 보고하신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그 집행현황을 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존경하는 張在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원장께서 보고드린 199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정부 각 기관이 처리한 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공무원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공직자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으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서 감사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법 부당한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정부 회계제도를 정비하여 공무원의 부조리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공무원에 대한 정신 및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회계처리와 업무집행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999회계연도 중에 감사원이 국가기관을 감사한 결과 지적된 위법 부당한 사항은 총 2,053건이며 감사원은 이 중에서 621건은 사안이 경미하여 각 기관이 자체 시정토록 권고하거나 통보하였고 2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1,432건, 금액으로는 1,555억8,071만원에 대해

서는 각 기관에 징계 등의 처분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변상판정이 2건에 8억 1,519만원, 감정 및 업무태만 등에 의한 징계처분이 67건에 114명, 징수결정 불합리 및 과다지급 등에 대한 시정이 674건에 1,547억6,552만원, 불합리한 규정 및 기준에 의한 개선이 4건이며 그 외에 주의가 685건입니다.

감사원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면 1999년도에 처분 요구한 1,432건과 98년도 이전에 처분 요구한 것 중 미처리된 385건을 합한 1,817건이 그 처리대상으로서 이 중 2000년도10월 말 현재 1,616건, 금액으로는 1,631억5,034만원이 처리되었고 나머지 201건, 538억7,187만원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 중에 있는 201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변상판정 요구가 6건에 13억6,991만원, 징계처분 요구가 14건에 25명, 시정요구가 176건에 525억196만원, 개선요구가 5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책임하에 조속히 완결토록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집행현황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원의 199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집행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張在植**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199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基泰** 전문위원입니다.

1999년도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은 새 정부 출범 2년째로서 98년에 이어 IMF체제 극복을 위해 진력하는 한편으로 Y2K 문제 해결 등 새 천년 준비에 노력한 한 해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지난 97년 말 외환위기로 유발된 국가 부도 위험에 직면하여 IMF와 고금리 정책과 재정긴축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합의하였고 동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초기의 고금리 정책에 대한 신용경색과 경제기반의 상실에 대한 우려와 대내외 비판이 제기되면서 98년5월 이후 고금리 정책이 사실상 후퇴하는 가운데 재정정책에 있어서도 긴축

적인 재정정책 프로그램에서 재정 적자폭의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재정역할 증대로 전환되었으며 외환시장의 안정에 힘입어 점차 금리가 인하되면서 98년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반등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여 99년 1/4분기부터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98년의 마이너스 6.7%의 성장에서 99년에 들어와 플러스 성장으로 회복의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99년2월에는 실업률이 8.6%의 최고치를 기록하게 됨에 따라 또다시 재정적자 및 국채발행 규모를 확대하여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그리고 중산층 및 서민층 지원을 위해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추경예산을 편성·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총체적인 면에서 99년에 우리 경제가 연간 10.7%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실업률이 4.8%로 인하되었음을 볼 때 99년에 우리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증대 요청에 부응하여 대체적으로 이를 적절히 수행하였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재정운용 과정에서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등 부분적으로는 미흡하였거나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이 없지 않았고 아직도 IMF체제의 극복과정에서 급증하게 된 국가채무에 대해 이를 적절히 관리·통제해 나감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할 실효성 있는 제도마련이 지연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시급한 재정의 역할 증대를 우선한 나머지 예산회계법의 개정 등 예산 및 결산제도의 전반적인 제도개혁 노력은 미흡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및 결산제도 개혁의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체제 이후 정부는 나름대로 예비 타당성 제도의 도입, 조기 결산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 기금의 통폐합, 예산성과급 제도의 도입 및 재정사업의 외부위탁 실시 등 재정 개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재정개혁이 공공부문 개혁 중의 제1차적 과제였을 뿐만 아니라 IMF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누적된 국가채무의 관리에 있어 재정의 효율성 증대가 최대 관건이 되고 있으며 향후 생산적 복지, 남북경협 등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예산 및 결산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시급한 실정임에 비추어 볼 때 그간 정부의 노력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재정개혁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委員長 張在植** 전문위원!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읽겠어요. 요점만 얘기 하세요. 시간이 부족하고 또 위원들 질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專門委員 張基泰** 앞부분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까지 어떻게 읽는다는 말이에요?

○**專門委員 張基泰**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드릴 부분은 25페이지 부분까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委員長 張在植** 간단히 하세요.

○**專門委員 張基泰** 알겠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개혁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혁추진이 미루어져 온 것은 IMF체제 이후에도 여전히 제도개선보다는 현실적으로 재정운용 측면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 왔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국가기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예산관계법령의 특성상 제도에 대한 비판·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관계법령의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일부 학계나 연구기관 등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이 있어왔으나 다른 부문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것이었음을 감안해 보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개선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가장 적절한 기관은 다른 아닌 국회라는 점에서 조속히 예산관계법령의 전반을 재검토하고 제도개혁을 추진할 국회 내 특별기구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현행제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 예산의 과목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권은 정부에 속하고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에 따르게 되는바 동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한다. 세입예산은 제2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이에 대하여 법률로부터 구체적 위임이 없이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세입예산의 관·항·목의 구분과 설정, 세출예산 및 계속비의 장·관·항·세항·목의 구분과 설정,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사항구분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을 뿐 실제 예산집행상 이용과 전용의 준거가 되는 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이에 대한 정의가 없음으로 인하여 각 부처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그 자율성과 신축성 제고를 이유로 점차 여러 개의 항이 1개의 항으로 통합되어 1개의 항 또는 1개의 세항으로 운영되는 부처가 생겨나고 있으며 점차 하위의 과목구조로 편성되는 까닭에 실제 예산안에서는 법령에도 없는 세항이 생겨나 이것이 사실상 구체적 사업단위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상당한 부분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 행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재량권을 확대하여 줌으로써 재정운용의 신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행정부가 당해 사업에 대한 구체적 준비나 계획을 소홀히 한 채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관행의 요인으로써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보다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예산의 과목구조상 항을 어떻게 정의하여 설정할 것인지를 예산회계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일반적 정의와 함께 당해 사업의 중요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항으로 설정해야 되는 사항에 대한 예외적 규정을 두어 실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항의 전면적 재설정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委員長 張在植** 전문위원!

○**專門委員 張基泰** 예.

○**委員長 張在植**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하고 있는 것은 제도를 어떻게 해야겠다, 또 법의 내용을 어떻게 고쳐야겠다는 것인데, 지금 전문위원의 보고 대상은 1999년도 결산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 어디에 잘 되었나, 못 되었나, 또 예비비지출이 우리가 승인한 데에 대해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이것만 간단히 설명해야지 지금 여기서 예산제도나 법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99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것만 검토보고해 주시고 나머지 법적으로 고쳐야 될 사항 또 미비점은 이 다음에 서면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基泰**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타이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 이번 결산을 해보니까 예산의 형식에 따른 결산서의 제출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에 또한 제도상으로 현재의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고 있는 현물출자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고 예산 내의 제도로 흡수하거나 적어도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것 아니냐, 특히 금융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그러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 총액예산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법령의 근거가 상당히 미약한 것 아니냐,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 이것이 계속 확대된다면 적어도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상당히 침해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이 현행 예산회계법에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별도 조문으로 명백하게, 전용의 경우에도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페이지 기본사업비의 이월에 대해서 99년도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마는 이 규정도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모호한 점이 있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 비목을 정해 가지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조기결산체계의 구축, 공공기금의 예산제도화, 특별회계의 정비 부분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중요성과 적정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세입 없는 세출이란 있을 수가 없고 흑자든 적자든 예산이 형식적 균형을 이루어 편성되는 점에서 보면 세입예산이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며 특히 현재와 같이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는 세입예산이 더 이상 단순한 추계의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 그 중요성이 재인식되어 특별한 적정계상과 징수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99년의 경우 세입결산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첫째, 99년 제2차 추경편성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99년8월 제2차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 주요 경제지표를 다음과 같이 재전망하고 99년5월까지의 세수실적을 바탕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등 내국세와 관세·교통세의 세입을 재조정하였으나 주세·전화세·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이를

조정하지 않은 것은 세출예산 소요에 맞추어 세입 예산의 항목을 임의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추경편성에 있어 이미 환율전망을 1,300원에서 1,180원으로 조정하면서도 세출부문의 외화표시 예산을 조정하지 않음으로써 환차에 의한 불용 및 전용액을 발생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등으로 추경에 반영해야 할 세출내용을 미리 정한 추경목적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과 세출항목이 제2차 추경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다라면 추경 편성단계에서부터 재정적자 부분을 계측하여 보다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정부가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 임의적인 세입항목의 조정 등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세 연말 납기분의 2000년도 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교통세수는 예산액 9조2,176억원에 비해 1조9,619억원이 감소한 7조2,557억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 세목에서 제2차 추경시 세입조정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세수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연말납 부분이 Y2K문제로 납기가 다음연도로 연장됨에 따른 세수감소가 2조3,000억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2000년도의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발생한 교통세의 납기 연장분을 포함하여 세입징수 실적을 예의주시하면서 국채발행 규모를 수시 조정해 나감으로써 이자부담을 최소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근로소득자의 상대적 세부담 가중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99년에 들어와 경기상승 국면에 불구하고 2월의 실업률이 8.6%에 이르자 실업대책을 중심으로 한 제1차 추경을 편성하였고 8월에는 실업률이 2월의 최저점을 지나 실업자수가 줄어들고 명목임금상승률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중산층 및 서민층 지원을 위해 제2차 추경을 편성하는 한편 중산층 대책의 일환으로 연도 중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1조450억원 상당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99년의 경우 연도 중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근로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시급하고 불가피

하였던 것은 99년5월의 근로소득세 진도가 예산 대비 45.2%에 이르러 97년의 35.2%, 98년의 42.0%의 실적진도비에 비하여 지나치게 급상승하고 있음에 따른 것이었으며 이와 같은 사정은 98년말과 99년의 연도 중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부담의 경감조치에도 불구하고 2000년의 경우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IMF사태 이후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소득세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왔고 소득의 분배구조 왜곡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이 적자재정과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계층간 세부담 배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의 경우와 같이 경기회복 국면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상대적 세부담이 특히 가중되는 문제가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도 당해연도 근로소득세수가 예산액을 일정수준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99년의 예와 같이 그 즉시 세법개정을 통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하 총괄부문의 검토의견과 부처별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괄질의의 경우에는 15분이며 일문일답으로 하는 경우에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입니다마는 시간이 부족한 위원님께서서는 당일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10분간의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간사 간에 합의가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간에 합의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일문일답의 경우 장관들께서는 답변을 짧고 명확하게 해주어서 위원들의 질의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허비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위원들의 질의시간이 될 수 있으면 길고 장관의 답변이 짧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한나라당의 李在昌 위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昌委員 한나라당의 李在昌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그간 우리의 재정이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현실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먼저 지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년 전의 IMF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금융구조조정이 진통을 겪으면서 제2의 경제위기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던 기업들이 줄줄이 퇴출되고 있고 금융시장은 얼어붙어 있습니다. 정점을 지난 경제성장은 하향추세에 접어들었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1,200원 대에 육박해 외환시장을 불안케 하고 있고 종합주가지수는 연중 최저치를 경쟁이라도 하듯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만, 일본에서의 증시하락세가 심화되고 있고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호주 등지에서는 통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져 아시아 지역 위기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경제여건을 볼 때 IMF 환란위기 수준을 뛰어넘는 본격적인 경제위기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의 경제상황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히실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97년12월과 2000년11월말을 대비해 보았을 때 이 경제위기와 관련된 몇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97년12월보다도 더욱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외환에 있어서는 우리가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말에는 외환보유고가 높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시 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컸는데 현재는 우리 재정이 적자재정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도 그때에는 펀더멘털이 건전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 상당히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간에 이 기업들도 많이 매각이 되고 어느 기업 하나 견실하다고 할 만큼 자부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소득도 그때에는 1만불 시대에 살았고 또 중산층이 두텁기 때문에 경제의 흔들림이 적었습니다마는 3년이 지난 현재에 있어서는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중산층이 무너졌습니다. 또 무엇

보다도 중요한 국민의 의식이, 그때에는 그래도 금반지도 내다 팔 정도로 우리나라에 대한, 이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컸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상은 오히려 그때보다도 훨씬 우리 공동체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떨어지고 또 사회의 모델이 구석구석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 IMF위기를 극복했다고 하는 현정부의 경제정책이나 재정운용 정책은 실패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여기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지난 3년간 구조조정을 주도하면서 IMF 위기를 조기에 졸업했다고 삼패인을 터뜨렸지만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손도 못 댔고 시장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금융·기업구조조정이라는 대의명제의 달성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 110조는 깨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소진됐고 앞으로 얼마의 공적자금이 더 투입돼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매켄지 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앞으로 200조원이 더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정도로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IMF관리체제 이후 본격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수술을 하려고 배를 절개했다가 수술할 자신이 없자 이를 그냥 봉합하고 진통제를 놓아서 문제를 오히려 키운 꼴”이라고 혹평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

지난 3년간은 우리 경제의 건실한 체질개선을 위해서 절호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해놓은 것이라고는 국민의 혈세를 들여 부실한 기업과 금융기관을 그대로 연명시켜 준 데 불과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장관은 정부에서 추진한 구조조정 대책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었다고 보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빛게이트’, ‘동방게이트’에 이어 최근에는 ‘열린게이트’까지 자고 일어나면 대형금융 비리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구조조정의 실무 사령탑인 금융감독원의 간부 공무원과 청와대 기능직 직원까지 여기에 합세를 해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칭하면서 기업 비리에 기생하는 파렴치

한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받고도 부실책임을 저야 할 퇴출 금융기관과 기업의 대주주들이 수십억 원 대의 재산을 은닉해 오다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왜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습니까? 이것은 정부의 책임이 또한 크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사회 전반의 모델 해저드 현상에서 연유된 총체적이고 말기적 도덕불감증과 사회기강해이의 원인은 현정부의 법치주의를 뒤로 한 국정운영에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일련의 권력형 대형금융비리사건에 대해서는 또 다시 단순 사기극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검제를 도입하여 진실규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정경제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요된 110조원의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그 사용처, 용도, 투명성, 책임 그리고 적법·적합성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가칭 공적자금관리특별조치법과 같은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결특위의 상설화에 맞춰 구태의연한 과거의 심의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첫째, 현행 결산은 사실상 다음해 예산을 편성, 심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 채 그저 통과 의례로 여겨져 왔습니다. 따라서 결산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6월로 앞당겨 조기결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예산결산위원회로 하여금 상반기에는 결산심의를, 하반기에는 예산심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6월에 정기적으로 임시회를 열어 결산국회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다음연도 예산에 결산결과를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내실 있는 예산·결산심의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원의 감사업무 중 예결감사와 관련된 업무는 국회로 들어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행 결산검사기관인 감사원의 기능은 국회의 예산통제권의 기능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일반 감찰업무를 제외한 예산감사 기능은 당연히 국회직

속으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지적입니다.

이에 앞서서 국무총리 산하 각 연구기관 중 정책 연구·평가를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한국개발연구원을 과감히 국회의 국책연구소로 이관해서 심도 있게 정책적 평가와 연구를 하도록 해서 실효성 있는 예산결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결산은 다른 어느 해보다 더 결산에 신중을 기해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의합니다.

99년은 98년에 이어 IMF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수요의 증가로 적자재정이 편성되었으며 두 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해서 4.4%의 추가 재정규모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IMF관리체제 이후 금융구조개편과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야기된 방대한 재정수요로 어느 정도 적자재정이 불가피했던 특수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해의 예산편성이란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재정운용이 너무 방만하고 안이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만도 모두 2,053건으로서 관련 금액만 4,439억원, 징계 등을 요구한 공무원도 17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방부는 거래내역 등을 직접 조사·확인하지 않고 정유회사가 제출한 가격대로 계약하여 1,230억여원이나 비싸게 구매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2,600억여원을 선급받은 61개 업체가 이를 주식투자 등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장기 공사부진 상태에 있는데도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농림부는 상수도사업 계획이 수립되었거나 계획 예정인 지역에 암반관정을 설치하도록 하고 암반관정의 이용시설을 상주인구 수에 맞도록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설치하여 710억여원의 추가부담을 졌습니다.

이 밖에도 소요시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이월·불용된 경우, 예산을 부당하게 이용·전용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물품구매를 잘못하여 예산을 낭비한 경우, 사업추진을 잘못하여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경우, 지원대상이 아닌데

도 보조금·융자금을 지원한 경우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예산낭비 실태가 전반적으로 있었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께 묻습니다.

99년은 국민 모두가 IMF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가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운영해 온 것은 정부 스스로가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해 주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앞에 깊이 사과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채무와 세계잉여금의 처리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99년 말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쳐 107조7,000억원입니다. 여기에 보증채무를 더하면 189조원에 달합니다. IMF 이전인 97년 말에 비하면 무려 140%의 수직상승이 있었던 셈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다루고 싶어하지 않기는 합니다마는 4대 연금관련 암묵적 채무와 준공적기관 채무까지 합할 경우 정부 채무규모는 584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습니다마는 국가의 부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나쳐서는 안될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정부채무 규모와 앞으로 예상되는 세출증대요인을 감안할 때 과연 정부가 200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2004년부터 국채상환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중기재정계획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의문시됩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재정경제부장관의 견해와 아울러서 국가채무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9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조3,724억원의 37.5%에 해당하는 8,898억원이 2000년도 추경재원으로 사용되는 등 매년도 발생한 세계잉여금이 추경재원으로 충당되는 구태가 계속해서 재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발생하는 세계잉여금은 예산회계법상 우선 사용용도인 국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명문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 의향에 대해서

문졌습니다.

최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예산낭비의 근절을 위해서 국민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범위한 예산낭비가 행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주무부장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鄭哲基 위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哲基委員 존경하는 張在植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국무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은 전남 광양시·구례군 출신 민주당 鄭哲基 위원입니다.

먼저 총리께서 안 계시지만 국가채무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께 물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채무국인지 채권국인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왜 채권국인지 또는 채무국인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 정부의 경제예측능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99년 예산편성 당시 경제지표기준은 경제성장률 2%, 소비자물가 상승률 5%, 경상수지 180억불 흑자였으나 실제결과는 성장률 10.7%, 물가상승률 0.8%, 경상수지 흑자 250억불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예측능력을 의심받아야 마땅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가장 큰 세입항목인 국세의 경우 본예산에서 71조2,000억원이 계상이 되었으나 실재는 75조7,000억으로 무려 4조5,000억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정확한 경제예측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으며 앞으로 이런 불확실한 예측을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재정경제부장관께 묻습니다.

내국세중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98년에는 19조3,900억에서 99년은 25조9,800억 즉 34%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직접세는 상대적으로 98년 29조1,100억에서 99년 27조1,400억으로 7%나 줄었습니다. 따라서 내국세 중 간접세 비중이 98년 40%에서 99년에는 49%로 대폭 증가했는데 이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세를 통한 소득분배 구조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입니다. IMF사태 이후 심화되는 소득분배구조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간접세의 비중을 낮추는 획기적인 세제개편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입결산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96조4,400억 중 87.4%인 84조2,800억이 수납되고 12.6%인 12조1,600억이 수납되지 않았습니. 원인별로는 납세의무자의 무재산이 6조8,600억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납세의무자가 무재산이었는지, 은닉재산은 없었는지,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첫째,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예산집행이 매우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국비보조로 주로 개발촉진지구를 연결하는 도로건설인바, 99년말 현재 전국 7개소 20개 지구 중 전라남도 2차 지구인 구례·곡성의 경우 국비투자실적이 8.6%로 지극히 부진한 실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하천개수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하천 구간중 홍수피해가 빈발하거나 노후제방으로 제방의 개·보수가 시급한 지구의 재해취약 시설물 등을 우기 전에 조기 개·보수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섬진강수계 치수사업도 그 일환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시행주체가 건교부산하 각 지방국토관리청과 시·도로 나누어져 있고 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에는 일반예산에서, 시·도의 경우에

는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어 이것을 모두 일반예산으로 통합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시·도가 사용하는 예비비의 경우 이월액, 집행액, 불용액 등의 결산자료가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으며, 99년의 경우 일반예산은 763억인데 비해서 예비비는 무려 3.3배에 이르는 2,542억으로 이것은 예비비 본래의 취지에도 위배되는 실정입니다.

다음 여수공항 확장사업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여수공항은 금후 조성될 180만평에 이르는 아시아 최대의 항만물류배후단지인 광양항관세자유지역의 중심공항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공수요에 맞추어 확장되고 있는 여수공항확장사업이 99년에 총예산 399억 중 317억만 집행되고 22억이 이월 및 불용처리된바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고 공기내에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 문제입니다.

99년 교통세 계정별 배분은 8조1,700억 중 도로 5조3,500억으로 65.5%, 철도 1조4,900억으로 18.2%, 공항 4,900억으로 5.9%, 광역시설 1,700억으로 2.1%, 항만 6,700억 8.3%로 교통세 배분에 대한 시행규칙 2조에 정한 비율을 대부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만 유독 항만부분만 미달한 수준에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의 중추국가로 건설하는데 있어서 항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99년도에 미집행된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을 항만부분에 추가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할 의향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부장관께 질의드립니다.

첫째,공단폐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2000년 상반기 현재 지역별 공단폐수종말처리장 가동률이 경기도 21%, 전북 40%, 경남 47% 등 전국 평균 59%에 불과합니다. 낮은 가동률은 환경부의 처리용량산출의 부정확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바 종말처리장 설치사업성 검토를 보다 엄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촌산단 내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의 경우 국고 지원금이 27억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착공이 2년째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은 무엇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9년8월 남해화학이 관리하고 있는 석고처리장에서 석고침출수가 광양만으로 유출돼서 환경 및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 환경부가 지금까지 취한 행정조치를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에 매설된 지뢰 문제입니다.

2000년10월 현재 후방지역 대인지뢰매설현황에 의하면 오대산 국립공원내인 평창군 도함면 차한리 일원 즉 황병산 주능선 한가운데 다량의 대인지뢰가 묻혀 있어 산불이 나도 접근할 수 없고 자연보호구역인 이곳을 전혀 관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지리산 국립공원 부근인 경남 하동군 금남면 일대에도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바 환경부에서는 군당국과 협조하여 지리산 국립공원 내의 지뢰 존재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金貞淑 위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貞淑委員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金貞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결산심의에 앞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국가적 기강문란과 사회적인 도덕적 해이현상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한 젊은 벤처기업가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신용금고에서 수백억원을 불법대출해 마구 써버린 대형금융사고가 또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이른바 열린금고 부정대출사건은 대주주가 신용금고를 마치 자신의 사금고인 양 고객 돈을 마구 잡이로 유용했다는 점과 금융당국이 세 차례나 불법을 적발하고도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얼마 전 발생한 동방금고사건과 너무나 유사해 시중에서는 소위 제2의 정현준게이트라고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 국민의 혈세나 다름이 없는 100조원 이상의 막대한 공적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연이어 터지고 있는 대형 금융사고들은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심각한 국민적 신뢰의 실추로 국가기강의 문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제2, 제3의 대형 금융사고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가통치의 심장부이자 최후의 보루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는 직원들의 대형 금융비리사건 연루의혹과 함께 8급 기능직 청소원이 실세과장을 사칭하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는 전대미문의 사건마저 벌어져 이미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국가기강 확립의 중추기관이어야 할 검찰은 작년의 고급윗 로비사건에서부터 4·13총선 부정선거 편파수사와 최근의 한빛은행과 동방금고 정현준사건 수사에 이르기까지 그 불공정성과 무능함으로 국민의 불신만을 증폭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은 전면적 사정을 통한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사회를 비롯한 국민들 사이에는 정권 내부의 기강부터 바로잡으라는 냉소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사정하고 정말 사정해야 할 곳은 제대로 했느냐는 원초적 불만이 일반 공직자와 국민들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현정권이 국면전환을 위한 전면적 사정의 시행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동안 국정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데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이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가 계시면 지금 묻겠는데 안 계시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정은 우선적으로 권력의 내부 및 주변부터 실시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사정의 방향과 폭, 원칙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검찰은 그동안 각종 대형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그 능력과 공정성에 있어 심각한 국민적 불신과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한나라당이 제출한 검찰총장 및 차장의 탄핵소추결의안이 집권여당의 부당한 실력저지로 무산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국민적 심판이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현재와 같이 검찰의 권위와 공정성이 추락한 상황에서 검찰이 과연 사정의 중추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시되며 사정의 당위성과 정당성마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이 마지막 충정을 살려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입니다.

이 두 사람이 용퇴를 늦출수록 검찰의 위상과 신뢰는 더더욱 땅에 떨어질 뿐입니다. 탄핵안을 계기로 환골탈태 거듭나야겠다는 대다수 일선검사들의 절실한 소망마저 외면하는 처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 수뇌부의 용퇴야말로 만연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흐트러진 국가기강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의 분위기를 일대 쇄신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를 권유하거나 그 해임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열린금고 불법대출 사건으로 현재의 금융감독시스템과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밝혀졌습니다.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고 건전한 금융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획기적인 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금융경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물론 불신까지 받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금융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경색현상이 초래될 수 있으며 자칫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금융개혁 자체가 무산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예산처에 금융감독원의 조직과 기능 개선하기 위한 실무작업반이 구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물론 추진일정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계서는 금융감독시스템의 개선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하여 보다 신속한 금융감독체계 개선작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고 가급적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검찰이 지난 9월 열린금고 불법대출 사건의 주범인 진승현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수배한 지 석달이 다 되도록 검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진씨는 아직까지도 이삼 일에 한번씩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운영지침을 시달하는 등 실질적인 막후 경영자로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안 잡는 것입니까, 못 잡는 것입니까?

현재 시중에는 진짜가 검거될 경우 밝혀지게 될 정·관계 로비의 실체 때문에 검찰이 검거에 소극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열린금고 사건도 정현준의 동방금고 사건처럼 사건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다가 흐지부지 될 것으로 예상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이와 같은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그리고 주범인 진승현을 조속히 검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밝혀 주시고 이번 열린금고 대출사건에 대한 투명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추된 공권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밝힐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총리실 예산집행의 부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99년도 집행된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집행을 보면 한마디로 총리의 개인적이고 자의적인 목적을 위해 예비비를 비롯한 각종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무총리실에서는 국정활동 수행경비 명목으로 예비비로 5억원 공보실로부터 4,000만원 등 5억4,000만원을 추가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 13억4,400만원에서 무려 40%에 해당하는 돈이 초과지출된 것으로 국무총리의 역할이 크게 신장되었다는 표면적인 이유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예산집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1999년도 회계연도에 왜 이처럼 당초 예산의 40%나 되는 돈이 추가로 지출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 용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는 정당간부 단기연수 및 산업시찰, 안보시찰 명목으로 총 3,800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 시민단체의 국내외 연수명목으로도 6,8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국가기관인 국무총리실에서 정당의 간부 연수에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도 의문시되고 또 시민단체에 대한 국내외 연수가 시민단체에 대한 일정액 국고보조라는 면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한 예산집행이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예산집행들이 모두 국무총리에 의한 자의적인 예산계획과 집행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보는데 국무총리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집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99년도 예비비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비비로 집행하기보다는 일반예산으로 편성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예비비로 집행하는 문제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선심성·과시성·전시성 사업에 예비비를 무리하게 지출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초 예측이 가능했던 사업의 경우에는 소요액을 일반예산에 계상하여 국회의 예산 의결을 거쳐 추진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대통령의 해외순방이나 재해대책비 등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예비비의 경우 예년의 평균적 소요경비의 추정금액을 일반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고 예측이 곤란한 부분만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예산처장관께서는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예비비의 지출관행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무분별한 예비비지출의 재발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비비지출과 관련해 보다 심각한 문제는 예비비를 선심성 사업이나 전시성 사업에 유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언론 등을 통하여 비난받은 바 있는 새천년맞이준비사업 59억입니다. 제2건국 한마음다짐대회 개최 9억3,100만원 등은 예비비지출의 아무런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더욱이 민간 주도라고 누누이 강조해 왔던 제2건국운동에 정부의 지원금 9억여원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행자부장관과 문화관광부장관은 이런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한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처럼 타당성과 경제성도 없는 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민간을 가장한 관주도의 과시성 사업에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경우 99년도 교육부예산 예비비지출액 375억7,500만원의 55.9%인 210억1,000만원을 동절기 실업대책지원비로 사용하여 선심성



사업에 예비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의 세부내역을 볼 것 같으면 실업보호 실험실습보조요원 지원, 학교교무보조인력지원, 지방교육행정기관인력지원, 대학도서관 박물관 인력 지원 등으로 과연 동 사업에의 예비비 지출의 근거와 타당성, 적정성이 매우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이들 예산이 동절기 실업대책 일환으로 편성되었다고는 하지만 교육적 목적에 전혀 부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업을 예비비로 집행할 정도로 급한 사항도 아닙니다. 더욱이 이들 사업은 선심성이 농후하고 목적하는 사업의 목표와 성과가 과연 무엇인지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사업들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더구나 대학도서관·박물관 인력지원사업은 대학 자체적인 재원을 통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집행함으로써 국가예산의 적절한 배분과 집행원칙을 심하게 훼손한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장관께서는 동절기 실업대책으로 제출된 각 사업의 예비비 지원의 타당성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교육적 가치가 넘어선 이러한 선심성 사업을 집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및 건전시민단체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전시민단체 지원사업은 전국사업과 지역사업으로 구분되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동 사업의 내용을 보면 지역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한 국민통합,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 활성화, 신지식 운동, 부정부패 추방, 경제살리기 등 140개 사업에 74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2000년 예산에서 150억원이 편성이 되었고 2001년 예산에도 150억원이 올라와 있는 등 정부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국가예산으로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문제는 입장에 따라서 상이한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동 사업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이 현재 한국사회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하는 점입니다.

정부는 민간단체 사업을 사업비를 지원하여 건전시민단체를 구현하고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등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는 의문이고 현정부의 오히려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태가 오히려 더 큰 문제라는 점에서 동 예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간단체 지원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갈등 해소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국민통합 사업에 21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현정부 들어서 지역편중인사를 비롯한 여러 인사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지역감정의 골은 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위해 현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부정부패 추방 사업으로도 4억4,000억을 지원했는데 부정부패 척결을 소리 높여 이렇게 지원하고 외치고 있지만 林昌烈 지사 뇌물수수 사건, 옷로비 사건, 한빛은행 사건,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 그리고 열린금고 불법대출 사건 등 현정권 실세들의 개입의혹이 있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현정부는 국민들의 부도덕성이 한국사회의 문제인 것처럼 주장해 오고 있지만 실제로 金大中 정부의 부도덕성이 치유할 길 없는 막다른 골목에 놓였다는 것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경제살리기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5억1,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처한……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경제현실을 보면 이것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인지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행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동 사업의 추진을 통해 과연 한국사회에 어떤 바람직한 변화가 있다고 보시는지 밝혀주시고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타당성과 현실 적합성을 가진 사업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 돈 말고도 프로그램을 전부 정부가 주도해서 결정해 주고 있는데 행자부장관께서는 사업지원시에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투명하고 공

정한 심사를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더불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는 가급적 간섭과 간여를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高珍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珍富委員**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서귀포·남제주 출신 高珍富 위원입니다.

99년은 국민의 정부 출범 2년째로써 98년에 이어 IMF 체제 극복을 위한 노력에 진력했을뿐만 아니라 재정정책을 적절히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과정에서 예산회계법상의 원칙의 준용이나 예산 및 결산제도의 전반적인 제도개선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98년도 정부재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산회계법상의 문제보다는 장기적인 정부정책의 연속선상에서 그 실효성을 담보해내기 위한 몇 가지 정책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공사의료원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의 이진신축은 노후시설을 현대화하고 저소득계층 환자에 대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3년까지 5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총 2,26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99년10월에 완공된 남원의료원을 제외한 부산, 홍성, 군산 그리고 제주의료원의 현재 공정은 10 내지 15%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에서 의료원 신축비로 투입될 1,261억원의 지방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커다란 재정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방공사의료원의 현대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들 4개 신축의료기관에 대한 국고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장관은 이들 기관에 대한 국고지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료원이

적자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경영합리화를 하고 있지만 의료시설장비의 노후화로 인하여 경쟁력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의료원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방공사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장관은 지방공사의료원의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의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와 도시 시설물의 밀집에 따른 도심재난재해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는 각종 재해로부터 국가기반시설물을 보호하고 방재기술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97년9월 국립방재연구소를 설립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방재연구소는 99년도 예산액 30억 4,400만원 중에서 단지 42.7%인 12억9,9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2억4,200만원, 40.8%을 이월하였을 뿐만 아니라 16.5%인 5억300만원을 불용처리하여 그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본예산에서 12억4,200만원을 이월시키고 5억300만원은 불용시키면서 수해피해조사 및 복구체계연구비, 자연재해보험상품연구비와 광과측정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 예산집행이라고 봅니다.

첫째로 장관은 국립방재연구소의 불합리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가차원의 안전관리는 재해,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과정이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재난행정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은 재난관리의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비축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의 고유가시대에 대비하여 국제에너지 기구는 비산유국정부는 최소 60일분 이상의 비축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총사업비 6조 5,152억원을 투자하여 석유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축유 구입예산은 738억1,500만원이 편성되어 단지 325억9,400만원이 비축유 구입을

위해서 사용되고 나머지 412억2,100만원은 이월되는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보유 비축물량은 29일분인 5,800만배럴 규모로 비축기지의 저장능력 9,600만배럴의 60% 정도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정부보유 분량 55일분, 독일의 77일분과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99년도 비축유 구입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된 것은 적절한 정책판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장관은 비축유 구입예산의 미집행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비축유 60일분 확보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부채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99년 농가소득은 2,232만3,000원으로 IMF 당시보다는 나아지고 있으나 반면에 농가부채는 전년 대비 8.96%가 증가하여 호당 평균 1,853만5,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의 총 부채규모는 97년에 18조7,372억5,000만원, 98년에 24조365억4,300만원에 이어 99년에는 25조6,153억7,000만원 규모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협과 축협에서 금융자금을 대출 받은 후 이를 상환하지 못해서 농지나 건물 등 담보물에 대해 경매처분을 받은 건수가 98년 이후 올해 7월까지 1만1,35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장기연체 대출금에 대한 농업인의 계좌수도 6만6,852구좌가 될 뿐만 아니라 파산상태에 있는 농가수가 1만2,576농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장관은 98년 이후 농가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예산액 177억7,400만원 중에서 142억6,300만원이 집행되고 35억1,100만원을 재해대책비로 전용하는 등 예산집행상 개선점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96년부터 99년까지 예산집행실적은 평균 79.8%로 저조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자금지원은 영세농가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시·군의 읍·면지역과 시의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경지소유규모 1ha 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

는 임가·양축가·어가의 자녀중 실업계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학자금지원사업이 비실업계 고교생은 제외하고 실업계 고교취학 학생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장관은 비실업계 고등학교 학생까지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부족문제와 수해상습지구 대책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영월다목적댐 건설사업은 수도권의 용수수요와 홍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2001년까지 총 공사비 5,10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99년말 기준으로 총사업비 107억4,8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월댐 건설은 계획초기부터 환경문제, 철차상의 문제 등에 대해 환경단체와 언론 등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여 사업착수가 지연되었을뿐만 아니라 수몰 예상지역 주민들의 보상 및 이주문제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댐 건설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예산낭비로 끝난 것이 아니라 향후 물부족, 홍수피해, 주민지원 문제 등 많은 후유증과 과제를 남긴 사업이 되었습니다.

장관은 대상지역 주민지원대책 및 동강보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한강수계 영월댐 건설계획이 취소됨으로써 향후 수도권에 심각한 물부족 현상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문화관광부는 99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70억 5,297만원으로서 예산 현액 대비 398.2%의 높은 수납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산 청소년국제문화교류센터, 부산 기장문예회관, 경남 양산문예회관, 경남 창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을 추진과정에서 주로 지방재정의 미확보나 건립부지 선정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보조금을 반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광부에서는 지역안배라는 방침하에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의 타당성 및 사업수행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없이 특혜에 가까울 정도로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 부담 능력, 교부조건 이행능력, 보조사업의 효과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신중히 결정함으로써 사업취소로 인한 반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예산배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99년 문화관광부의 전체 국고보조금은 총 161건에 4,100억원의 규모에 이르고 있으나 보조금의 종류와 해당사업 및 보조단체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관광산업의 경우에는 예산이 자치단체 보조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지자체 중심의 관광개발사업에만 치중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민간중심의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장관께서는 민간 중심의 관광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민간부문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산업의 경우를 보면 99년 민간부문 지원예산 316억원 중 게임과 영상산업 분야에 70%가 넘는 예산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산업 분야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과도하게 게임과 영상분야에 집중된 보조금 편성은 시정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지원예산의 사후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공연 문화재 관련 분야에도 적정한 예산분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나라당의 金文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文洙委員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몹시 어렵습니다. 국민들도 민심이 흉흉하고 절망한 나머지 이민을 가겠다는 분이 많이 늘어납니다.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 주변과 최고위 권력층의 비리부정의 문제 그 자체일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정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감사하고 사정해야 될 모든 사정기능 자체, 감독기능 자체가

또한 마찬가지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개선의 희망이 없다, 감독원에서 다 돈 받아먹고 검찰도 지금 얼마나 편파적으로 하는가 하는 것은 이미 검찰총장과 차장에 대한 탄핵안 자체가 사실상 가결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나라에 과연 검찰이 있느냐, 감사원이 있느냐, 감독원이 있느냐 또 국회는 있느냐, 국회도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 감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개선의 가능성에 대해서 절망하는 많은 국민들이 절망하고 이 나라를 떠나겠다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도 내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아시는 것처럼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감사권이 있는 것도 특별히 없습니다. 국정감사를 가도 자료 안 줍니다.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이래서 과연 국회가 돌아갈겠습니까?

제가 판공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판공비를 이야기하느냐? 많은 시민단체도 이야기하고 국민들도 궁금하게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윗물 자체가 지금 부패해 있다, 나태해 있다, 썩어 있다 그 점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총리 이하 여러 장관님들 정말 우리가 자세를 한번 가다듬자는 차원에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다른 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 냅니다. ‘국회의원들 말하는 것 안 내도 된다’, 지금 제대로 내신 데도 있습니다. 제대로 내신 데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환경부, 노동부 이런 데 잘 냈습니다. 통일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잘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소위 실세부처, 힘있는 부처 하나도 안 냅니다.

기획예산처 안 냅니다. 장관, 안 내시지요? 답변하세요. 일문일답이에요. 못 내겠습니까?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내겠습니다.

○金文洙委員 왜 안 냅니까? 제가 9월19일 예결위 요구자료를 통해서 내라고 그랬고, 10월13일 예결위 회의장에서 다시 촉구했고, 11월21일 서면질의 통해서 또 내라고 그랬는데 왜 안 내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지금 아마 작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오늘 중으로 내십시오.

또 건설교통부 안 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님 오셨습니까? 안 낼 겁니까?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오늘 중으로 내십시오.

산업자원부장관님 오셨어요? 못 내겠습니까?

○産業資源部次官 吳盈教 예,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작성이야 해놓았겠지요. 안 낼 거냐 이 말입니다.

○産業資源部次官 吳盈教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오늘 중으로 제출하십시오.

농림부장관 오셨지요?

○農林部次官 金東根 예, 제출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오늘 중으로 내겠습니까?

○農林部次官 金東根 예.

○金文洙委員 행정자치부장관님, 내겠습니까?

○行政自治部次官 金在榮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느냐 이 겁니다.

○行政自治部次官 金在榮 오늘 중에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면 언제 되겠습니까? 9월19일 요구했으니까 지금 두달이 넘었습니다. 석달이 가까워 오는데 못 내겠습니까?

○行政自治部次官 金在榮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金文洙委員 낼 겁니까, 못 낼 겁니까? 못 내면 제가 바로 고발할 겁니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12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가 바로 고발하겠습니다.

○行政自治部次官 金在榮 저희들 관계가 시민단체에서…….

○金文洙委員 그러니까 못 내겠다 이거지요?

위원장님, 못 내는 부처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님께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성실하게 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다 안 드리겠습니까마는 재경부, 법무부, 국방부,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사실상 안 낸 겁니다. 외교통상부도 외교관계상 못 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을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검찰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문

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법무부장관님 오셨지요? 그런데 검찰은 무소불위입니다. 국회에 출석하라고 그래도 오지도 않고 또 어떤 국정조사가 있어도 검찰은 빼달라고 난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빛국정조사도 하고 있지만 한빛국정조사 증인신문 대상 채택하는 데도 검찰은 빼달라, 청와대 비서실장도 와도 좋지만 검찰은 안 된다, 검찰이 무슨 성역입니까? 나는 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검찰의 무소불위의 성역과 같은 그러한 오만방자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난번 98년도에 진형구 대검공안부장의 발언으로부터 촉발되었습니다. 우리가 청문회도 했습니다. 검찰이 이래서 안 되겠다,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했다 이래서 청문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99년8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10월까지 공안대책협의회가 182회 열렸습니다. 장관님, 이것 맞지요?

○法務部長官 金正吉 예, 자료 맞습니다.

○金文洙委員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안대책협의회를 182회나 열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자주 연 것이냐? 아시겠지만 지금 한달에 13회, 이틀에 한번씩 공안대책협의회 엽니다. 이게 진짜 무슨 공안천국인지 모르겠는데 이 공안대책협의회가 꼭 필요한 것은 열어도 좋겠습니까마는 대공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공안업무는 좋겠는데 이것이 주로 노사간의 노사관계에 주로 관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사실 99년도 공안대책협의회에 관련해서 18억4,257만원 썼네요. 예비비에서 또 전용해 가면서 썼네요. 이거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2000년에는 또 4억2,694만원 해냈는데 이것도 또 예비비에서 전용하겠지요? 그래서 이 공안대책협의회는 물론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노동관계장·차관회의가 있고 행정자치부장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다 정책협의회를 부처별로 하는데 어떻게 해서 공안대책협의회를 계속해서 노사관계 다루어야 되는지 법무부장관, 간단하게 답 한번 해보십시오. 공안대책협의회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면 지난번에 조폐공사파업유도 청문회 할 때 그 결론이 공안대책협의회를 계속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法務部長官 金正吉**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안녕질서에 관해서 책임있는 관계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의견을 조정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공안대책의 의미다…….

○**金文洙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法務部長官 金正吉**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리님 주재하에서 사회안정장관회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실무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이 지금 이런 회의입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82회 전국에서 하루에 몇 번씩 말씀하셨는데…….

○**金文洙委員** 이틀에 한 번씩 합니다.

○**法務部長官 金正吉** 예, 전국에 우리 검찰이라든지 관계기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일어난 문제는 지방끼리 모여서 협의를 해가지고 합당하게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중앙에서는…….

○**金文洙委員** 과거에는 이렇게 한 적이 없지요?

○**法務部長官 金正吉** 그러니까 공공안녕질서…….

○**金文洙委員**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도 탔다 이러면서 사실상 너무, 공안대책협의회를 가급적이면 줄이고 삼가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모든 문제를 공안적 차원에서 해서는 곤란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상세한 것은 안 하고 필요하다고 보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따가 계속 토론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공안대책협의회 그 내용에 대해서 회의록이나 회의자료에 대해서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여기 뭐라고 왔느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는 비공개로 전제로 작성되는 검찰의 내부문서이므로 제출하여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검찰의 내부문서는, 어디 내부문서는 다 안 내는 겁니까? 여기 보세요. 공안대책협의회 회의록, 다른 부처에서는 제출합니다. 검찰에서는 못 내겠다는 것인데, 공안대책협의회 가는 것이 검찰 그다음에 국가정보원, 노동부, 복지부, 농림부, 경찰청 어떤 때는 문화관광부, 롯데 같은 때는 문화관광부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처가, 금융감독위원회도 있네요. 이런 부처가 가서 하는 회의인데 이것이 비공개회의라서 못 내겠다 이겁니까? 앞으로 계속 안 낼 겁니까? 이미 회의한 것 이것이 무슨 비공개회의입니까? 못 내겠어요? 장관님,

자료제출 거부하는 겁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거부보다도요…….

○**金文洙委員** 그러니까 하여튼 못 내겠다 이거지요?

○**法務部長官 金正吉** 검찰에 내가 알아봐 가지고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내줄 수 있을 만한 것은 내고 비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못 내는 이유가 있으면…….

○**金文洙委員** 이것이 지금 장관님 도장을 찍어서 온 문서인데 또 알아보니까? 지금 못 내겠다는 답변서가 장관님 도장 찍어서 온 것인데 여기 또…….

○**法務部長官 金正吉** 그것은 저희들이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아가지고 공개여부가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하는 점을 알아봐 가지고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럼 빨리 오늘 중으로 답변을 주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출하지 않을 때는, 검찰이라고 특별히 초법적인 존재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보고 또 국정원장도 국회에 다 출석해서 이야기하고 필요한 자료 다 냅니다.

그런데 무슨 검찰은 신성한 특별한 데다, 이렇게 생각하는 특권적 지위에 대해서 저는 용인을 못 하겠으니까 이것 이따가 오늘 중으로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 경찰청에서 청장 오셨어요? 청장은 안 오시고 서울청장님이세요? 차장이십니까?

○**警察廳次長 李憲晚** 예. 차장입니다.

○**金文洙委員** 청장님 어디 가셨어요?

○**警察廳次長 李憲晚** 청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金文洙委員** 뭇을 하는 것이예요, 그래? 청장은 여기 국회 안 나와도 돼요?

○**警察廳次長 李憲晚** 조금 전에 가셨습니다.

○**金文洙委員** 아니, 청장이 안 나와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警察廳次長 李憲晚** 나오셨다가 조금 전에 왔습니다.

○**金文洙委員** 왜 들어갑니까? 점심 시간에 무슨 집무가……. 어디 난리가 터졌어요?

○**警察廳次長 李憲晚** 계시다가 5분 전에 가셨습니다.

○**金文洙委員** 위원장님, 이것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오후에 나올 것이지요?

○警察廳次長 李憲晚 예.

○金文洙委員 나오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오셨지요?

저는 감사원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습니다. 환노위에 있을 때에도 감사원에 대해서 제가……. 수도권매립지 비리문제라든지 공사관계 토목관계 비리라든지 여러 번 제가 감사원에 약 수백 페이지의 감사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 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감사원을 상당히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제가 소관되어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한국자원재생공사의 보험리베이트문제, 불법적으로 3억원대의 보험리베이트를 수년 간에 걸쳐서 수수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 비리가 일어나서 내부에 투서도 일어나고 보험회사하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감사원에서는 2000년6월14일부터 7월7일까지 보험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를 감사했는데 감사원 제5국제3과 박순병 감사관과 부감사관 김영빈 감사관이 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서 결국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에 따라서 비리가 있다는 것은 적발해 놓았는데 비리가 있었던 재생공사 사장에 대해서 전혀 인사조치가 하나도 없고 멀쩡하게 지금도 앉아 있어요. 국정감사에서 다시 지적했는데 멀쩡하게 있어요. 그 밑에 담당자들도, 죄가 없는 사람은 당해서 사표를 내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진짜 책임 있는 사람은 다 앉아 있어요. 이런 감사해서 무엇합니까? 결과가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나는 참으로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監査院長 李種南 저희가 감사해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고를 하고 시정하고 권고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한국자원재생공사의 건물 등 재산에 관한 보험가입과 관련한 비위를 조사하였는데 직접적인 이사장의 말하자면 불법행위는 저희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해임을 하라고 권고한 바는 없습니다.

○金文洙委員 아니, 감사원에서 그것을 적발을 못 했다고 그러면 우리도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다 드러났는데, 또 그리고 그때 자원재생공사 내부에 신동아화재대리점 대표 임수현이라는 직원이 거기에 와서 무려 5년간에 걸쳐서 거기에 돈

주었던 것 내달라고 진정서도 내고 또 보험회사 직원이 감사원 내부에 와서 직원처럼 책상 놓고 앉아서 근무도 하고, 다 이것은 나온 사실인데…….

○監査院長 李種南 그 사실은 다 조사를 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런데 왜 그러면 조치를 안 해요? 그래 이런 일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이것 알면 완전히 기절초풍할 노릇이예요.

○監査院長 李種南 저희가 조사한 결과는 보험모집을 할 수 없는 유명대리점과 계약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하였거나 금품수수 등 비위가 밝혀진 오형근 사장하고 담당이사, 과장 등 실무자 등을 인사조치 또는 중징계조치하도록 저희가 환경부장관한테 처분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부장관이 조치할 일이지 저희 감사원이 누구를 나와라 말아라 하는 것은, 저희가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요, 환경부장관이…….

○金文洙委員 그러면 환경부에서 안 하면 가만히 두면 되는 것입니까?

○監査院長 李種南 아니요. 가만 둘 수는 없지요. 그다음에 또다른 구체적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험요율을 잘못 적용해서 과다지급한 화재보험료 4,250만원 또 회수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보험모집인이 아닌 자에게 보험을 모집하게 한 그런 보험회사들이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니까 그것도 재생공사 사장의 생질서인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자세히 안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보험회사의 대표 임수현이라는 자가 거기에 와서 근무를 직접하고 사장의 직인까지 자기가 마음대로 해서 찍고 그야말로 기강으로 봐서는 이런……. 공직기강이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알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監査院長 李種南 금융감독원에도 저희가 고발이…….

○金文洙委員 시간관계상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자체가 구조적인 부조리……. 보험회사의 약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부의 각 부처마다, 각 산하단체마다 보험료 리베이트 문제가 구조적으로 너무 많다, 그런데 왜 자원재생공사만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분들의 저한테 대한 항의이고 제가 들어봐도 맞습니다. 구조적인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감사원이 제도적인 방안을 내야 되는데 안 낸 점, 단순히 개인비리 적발로 끝나고 있는데 개인비리로 적발하는 것도 좋은데 적발해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환경부장관의 책임이지 우리는 모르겠다, 그리고 지적된 사람들이 전부 우리만 당했다는 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점, 이러한 점 때문에 저는 감사원장님께서 국가기강과 공기업 전체에 만연해 있는 보험료 리베이트를 불법적으로 수수하는 행위에 대해서 전면적인 감사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監査院長 李種南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의 사건은 5국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5국은…….

○金文洙委員 앞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만…….

○監査院長 李種南 제가 관행적인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서 보험업계 실태 등을 감사할 때 신중히 조사해서 그중 시정될 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하도록…….

○金文洙委員 하여튼 그것이 많이 있어요. 감사원에서 그것을 못 밝혀낸다는 것은…….

○監査院長 李種南 이번에 저희가 조사한 것은 신동아 등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리베이트의 경우…….

○金文洙委員 그것은 내부 투서에 의해서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監査院長 李種南 공사 상조회가 받아서 직원 후생복지에 사용해서 특정인의 비위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그 점에 대한 것은……. 5국에서 특정인의 비위만 조사했습니다. 다음번에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더욱더 심층적으로 조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구체적인 계획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계잉여금 2조원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 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그것은 재정경제부하고 앞으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앞으로 협의가 아니라, 이것이 99년도의 세계잉여금인데 아직까지 협의하고 계시면 됩니까? 적어도 이것을 통과시키려면 잉여금이 어디에 쓴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어야 통과되지 계속 협의하고 적당하게 갖고 있다나 나중에 추경편성

하는 데 쓰실 것입니까?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작년도 세계잉여금 중 1차 추경으로 국회 심의를 받아서 쓴 1조6,000억원은 국채 우선상환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이미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또 나머지는요?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1조6,000억원입니다.

○金文洙委員 1조6,000억원 전부?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1조6,000억원을 1차로 원칙적으로 국채를 조기에 상환한다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세계잉여금 중 1조6,000억원 이외의 부분은 없습니까?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저희가 1조6,000억원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 이하는 없다?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예.

○金文洙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나머지는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오신 감사원장님, 각 부처장관님, 정말 나라가 어렵습니다. 국민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우리 내부에 있는 비리와 부정을 도려내는 데 먼저 앞장서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민주당의 宋錫贊 위원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宋錫贊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委員 존경하는 張在植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대전 유성구 출신 새천년민주당 소속 宋錫贊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국무위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통합재정수지 균형유지를 위한 재정건전화의 맥락에서 기금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가의 기금은 목적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 예산집행의 어려움이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조



성되고 운영되는 것으로 통상 제2의 예산으로 불리어질 만큼 규모가 방대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금제도는 행정편의적 측면에서 설치만 되어 있지 운영 면에서는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과의 중복투자 등과의 명확한 운영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목적사업을 위해 기금이 조성되고 운영되지만 지금까지의 기금운영 행태를 보면 예산과의 중복운영, 목적 외 사용, 방만한 사업운영, 전문성 결여 등 폐해적 운영으로 최우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운영된 62개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46조원이고 운용규모만도 196조8,000억원으로 나라 예산의 두 배나 되는 방대하고 광범한 운영형태로 인해 그동안 기금의 편법 부실운영이나 방만 운영이 항상 문제시되어 왔습니다.

IMF 이후 일부 기금이 재원고갈의 위험수위까지 가는 등 99년 3조6,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금년의 경우 약 10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국민과 국회의 통제와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목적 외적인 사업추진과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얼마나 많은 재정낭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금이 운영주체의 편의적으로 사용되는 부실·부당운영의 대명사임을 감안하면 지금 당장 과감한 개혁적 조치가 수반되어 명실공히 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기타기금의 공공기금 또는 예산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주무장관의 순수 재량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과 중복투자의 가능성, 운영주체의 편의주의 운영가능성이 가장 크면서도 기타기금으로서의 존치이유를 관련법규나 사업목적 등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타기금에 대한 조치가 시급합니다.

다음 대부분의 기금 조성액이 정부지원액이면서도 기금이 국회의 통제와 감시·감독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로 국회의 통제권 밖에 있는 기금의 효율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기금의 예산외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운영에 대한 국회의 통제와 감시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과 기금 사업의 선정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고 민간이양이 보다 큰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이는 기금의 경우 과감한 민간이양, 예산과의 중복성격의 기금 또한 과감한 폐지 등의 방법으로 기금의 일대 개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정부는 2001년 기금운영계획에서 기금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상과 같은 기금문제의 경우 지금 당장 개혁되어야 할 현정부의 중차대한 과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되는 예산으로 예산회계법 제21조 규정의 예산의 신축적인 운용을 위한 제도의 하나입니다.

정부의 99년도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8%인 총 2조7,092억원으로 계상되었고 이 중 72%가 지출되었으며 지출액 대부분이 일반회계이고 특별회계는 약 3억원밖에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액의 3.1%에 해당하는 2조5,300억원이 예비비로 계상되어 이 중 81.8%에 달하는 2조69억원이 지출결정되었습니다. 전년도인 98년도에도 예산액의 약 3.8%에 달하는 금액이 예비비로 계상되었고 이 중 96.8%가 지출결정되었습니다.

언급했듯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재원소요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재정운영이 정상적인 경우 재해복구비를 제외하고는 지출소요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성격의 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의 예비비 지출결정률을 보면 매년 계상된 예비비의 대부분을 지출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행정부 스스로가 예산의 엄격한 운용을 저버리고 있다는 증거이며 엄연한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을 경시하고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98년과 99년도의 경우 적어도 일반회계의 3% 이상이 행정부 마음대로 아무런 통제나 심사없이 스스로 편성하고 심사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진제국의 통상적인 예비비 구성비 1% 미만에 비해 너무나 방대한 규모의 예산이 국민의 사전 통제권 밖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국가 예산이 합목적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실증이기도 합니다.

3% 이상의 예산이 예비비로 계상된다고 하는 자

제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예비비의 대부분이 지출된다는 사실은 예산의 3% 내지 4%는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편성하여 사용한다는 매우 후진적인 재정운용의 사례라 할 것입니다. 물론 예비비 사용은 국회가 사후에 승인하고 있지만 이는 부적절하고 부당한 지출에 대한 사전예방책이 없는 것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부의 99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예측 불가능했던 사업과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 등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은 몇 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예비비에 대한 정부의 생각이 바뀌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예산지출은 가능한 한 취소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집행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때라고 보는데 기획예산처장관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의 남용을 피하고 예산제도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서 예비비 규모를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비비의 경우 전례적으로 예비비 사용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예비비 계상으로 재원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고 특별회계 예비비제도의 폐지나 대상규모를 대폭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건설교통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金大中 대통령께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그 당시 대통령께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한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녹지공간은 그린벨트로 재지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제시킨다고 하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을 그린벨트로 재지정하더라도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입법을 만들어서 보상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견해를 밝히신 적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합리적인 재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도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해제 쪽으로 기

울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대도시에는 어떠한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소상히 앞으로 광역시 이상의 도시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어떠한 조정을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그린벨트지역과 일반 자연녹지지역과는 지가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하나를 내더라도 논두렁이라든가 구획선을 경계로 해서 개발제한구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과의 보상가격이 적어도 삼사백 정도 차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장관께서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상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 30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한 분들에게 대해서 더 보상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데 대해서 나중에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했다가 오후 3시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마는 정회하기 전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국무위원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9월1일부터 12월9일까지 정기국회입니다. 이 국회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위한 국회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께서도 특히 오늘만큼은 시간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로 12시를 넘겨서 중요한 약속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자리를 여야 간사 간에 독려하셔서 오후에는 많이 나오시도록 해주시고 국무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앉아서 자기 소관이 아닌 부서의 것도 들으시고 예산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리를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 3시 이후에 속개해서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회)

○委員長 張在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순서는 지금부터 정부 측 답변을 들을 순

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무부장관인 재경부장관께서 지금 공적자금문제로 재경위원회에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되어서 오전에 이른 질의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申榮國 위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榮國委員 한나라당의 申榮國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50여개 정부부처에서 청까지 해서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 한 30분 넘게 회의가 늦어진 데 대해서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죄송합니다마는 한국일보 정보동호회 11월1일자에 보면 ‘좌관구두, 전철 타는 짚돌이 의원’ 이렇게 나오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봐 주신다면 오늘 본 위원 질의의 상당 부분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라 살림하는 데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짚돌이 장관도 하나 올라갔으면 하는 욕심을 내봅니다.

저의 지역구가 문경하고 예천입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가면 지역의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밤늦게까지도 만나고 해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보다는 더 오늘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소개의 말씀을 드리면 저녁에 식당을 가면 많은 분들이, 어느 식당 아주머니는 저를 보고 읍니다. ‘의원님 오늘 손님 한 사람도 못 받았습시다.’ 또 어떤 농민은 ‘왜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몇백조씩 주는데 우리 농민들 1,000만원, 2,000만원 빛 있는 것 손 좀 안 봐줍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을 보면 중국의 조선족이 생선배 밑창에 타고 3일씩 숨어서 오는 것을 보면 그래도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관찮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공적자금은 金宇中 씨나 鄭周永 씨한테 돈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회사를 나라에서 빼앗아 와서 그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개인한테 돈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이소’ 하면서 달립니다마는 간혹 내가 정치권에 안 있었다면 이렇게 괴롭지는 않았을 것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또 지방의 현주소이고 서울의 현주소는 제가 며칠 전에 택시를 탔더니 택시기사가 저를 알아보고 ‘국회의원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의원님 요새 날만 새면 금고가 줄줄 썩니까? 금고는 진짜 금고여야 되는데 무슨 놈의 금고가 날만 새면 몇 백억씩 줄줄 새니 우리가 택시하면서 몇천원, 몇만원 받으려고 운전하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서 진짜 일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저께, 그저께 열린금고인가 그것이 텔레비전 뉴스하고 신문에 보면 울지로 6개의 영세상인들이 이자 조금 더 받으려고 열린금고에 넣어놓았다가 돈을 못 받으니까 내돈 내놓으라고 소리지르는 장면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있는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 중에 누군가는 그래도 금고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나 금고에 있는 것이나 똑같다 그런 심정으로 거기다 돈을 맡겨 놓았는데 어느 날 찾으러가니까 문을 닫고 돈을 안 주는 것입니다.

영세업자는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또 막아야 되는데 열린금고에서 돈을 안 주니까 자기는 부도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오늘의 현주소라고 볼 적에 99년도, 작년도 결산을 심사하면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작년도, 99년도의 나라 살림을 잘해 주었다라면 오늘 이런 결과는 안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아까 모두에…… 지금 여기에 50여개 부처에서 나와 있으면 정부가 몽땅 이리로 옮겨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에게는 송구스럽습시다마는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金大中 대통령께서 브루나이에서 APEC 회담 때 많은 다른 나라의 정상들이 노벨상 탄 것을 축하해 주면서 이참에 아예 그 실력 가지고 중동 평화하고 인도하고 파키스탄 분쟁도 나서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자랑을 하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대통령 공중에 떠 계시다 붕 떠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속된 얘기지만 요새 대통령께서는 APEC 갔다오셨지, ASEAN 가셨지, 오시면 노르웨이 또 가십니다. 그러면 계속 몸도 하늘에 떠 있고 마음도 하늘에 떠 있는 그런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아마도 국내 문제에 어려운 일은, 머리 아픈 일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좀 잘해 달라고 하고 대통령께서는 좀 위에 붕 뜨는 일, 그런 일만 관심이 많으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솔직한 본 위원의 심

정입니다.

아마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연세가 좀 높으시기 때문에 골치 아픈 일, 어려운 일, 의약분업, 한전분업 이런 데 대통령이 좀 나서서 내가 총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분은 외교에, 남북관계 이 쪽에 하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못다 하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내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하셔야 할 역할까지 국무위원들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며칠 전에는 있어서 안 될 일이 일어났었지요. 이 국회에서, 여기 법무장관 나와 계십니다마는 검찰총장탄핵안을 냈는데 여당에서 국회의장을 감금을 했으니 국회가 스톱된 것이지요. 국정이 중단상태에 들어가는 이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국무위원들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국무위원들께서 대통령께서 관심을 덜 가지고 계시는 내치에, 땅바닥 정치에, 하늘 정치는 대통령이 하시고 땅바닥 정치는 여러분들이 좀 더 책임을 가져 달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법무부장관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여기 나가시다가, 장관께서 걸어가시다가 옆 사람 어깨에 부딪히든지 발을 한 번 밟아도 아주 '죄송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간에 주변 환경이 그래서건 세상이 그렇게 되었던 간에 검찰에서 최근에 한 일은 정부의 신뢰도하고도 그렇고 또 대외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신인도도 그렇고 엄청나게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검찰총장이나 대검차장께서 본인의 잘잘못을 떠나 국가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생각을 한번 바꾸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는 재경부장관하고 예산처장관이 안 계십니다마는 계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저희 당에서 나라 빛이 500몇조라고 그랬는데 양보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숫자만 해도 114

조가 나라 빛입니다. 또 이번에 공적자금 추가하면 114조, 외우기도 좋게 114, 나라 빛도 114, 공적자금도 114, 합계 228조 그러면 10% 이자만 해도 1년에 20조를 갖다가 이제 나라 예산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 100조 중에서 1년에 20조를 이자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어느 중소기업이 100억 매출에 20억이 이자로 나간다고 그러면 그 회사는 부도난 회사입니다.

마찬가지로 100조의 예산 중에서 20조를 정부의 빚 때문에 이자로 부담해야 되는 현실, 5분의 1이 이자, 지금 기름값이 올라 가지고 작년에 기름으로 나간 외화보다는 금년이 작년도의 배가 됩니다.

그런데 기름값 때문에 금년에 작년의 배가 외화가 나가는데 그러면 다른 데서 그 정도를 벌든지 아껴야 됩니다.

아마도 금년에 350억불 정도의 석유대금이 나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5분의 1이예요. 아까 정부예산의 5분의 1이 이자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나라 수출이 1,700억불이 되면 기름값으로 350억불이면 그것도 5분의 1이 됩니다. 애써서 달러 벌으면 5분의 1이 기름값으로 나가야 되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지금 경제는 신용인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고 금고에 돈을 맡겨놓으면 돈은 다시 못 찾는데, 경제는 신용으로 되는 것인데 은행에 돈을 맡기고 금고에 돈을 맡겨서 내가 필요할 적에 찾지 못하는 이러한 나라, 이러한 현실…….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재경부장관 안 오셨으면, 은행감독원 간판 내려야 됩니다.

차라리 은행감독원에서 감독을 안 하고 검사를 안 했다, 거기는 부실금고인지 안 부실금고인지 모르겠다 그랬으면 예금주가 알아서 할 텐데 정부의 은행감독원이 감사해서 아무 이상 없다, 나쁘다고 발표 안 하면 이상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믿고서 돈 맡겼다가 못 찾는데, 이것 이따 나중에 총리가 좀 답변을 해 주어야 됩니다마는 이 은행감독원 간판 내려야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정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서 감독원에서 검사한 것을 믿고서 금고에 갖다 주었는데 몇 군데의 금고가 물이 줄줄 새고 우리가 생각하는 금고는 잠귀 놓으면 열지도 못하고 도적도 못 들어오고 불이나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 금고는 불

도 안 나고 도적도 안 들어 왔는데 줄줄 새는 이러한 금고…… 또 검찰은 어떻습니까? 왜 금고사건만 나면 검찰이 금고 편인지 국민의 편인지 어지간한 사람 해외로 다 보내고 그러니 아까 검찰 총장하고 대검차장 문제가 무슨 편파수사, 뭐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금고사고도 하나 제대로…….

나라를 우습게 보고 검찰을 우습게 보고 은행감독원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스물일곱살 먹은 젊은 사람이 겁도 없이, 법무부장관은 상당히 지금……. 두 번째 재정부장관이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마는 아까 1년에 20조씩 나가는 이자, 나라 빚 이것을 어떻게 갚을 것입니까?

나라빚 축소대책 또한 아까 에너지 문제 말씀합니다. 다마는 작년보다 금년에 배가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약하느냐,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비축하느냐, 어찌하면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느냐, 이 쪽에다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나가도 안될 텐데 지금 에너지대책 예산이 작년 대비 10% 증가했어요. 작년보다 기름 값이 배가 더 나갔는데 예산은 10% 하면 이것을 해결합니까?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柳在珪 위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珪委員 존경하는 張在植 예산결산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강원도 홍천 황성 柳在珪 위원입니다.

99년 결산심의에 있어 각 분야에 여러 위원께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본 위원은 농촌출신 위원으로 요즈음 당면한 농촌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21일 전국에서 수십만 농민들이 정부의 농가부채탕감대책에 항의하여 대규모 집회를 갖고 일부 시위대는 경부고속도로를 점거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본 위원은 이와 같은 대규모 시위는 자칫하면 근로자나 소상공인, 실업자들까지 가세하여 걷잡을 수 없는 파탄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서 정부는 이제는 더 이상 농촌문제를 미봉책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근본적인

대책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총리께서는 황폐해 가는 농촌경제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와 균형 있게 발전시킬 계획인지를 밝혀 주시고 떠나가는 농촌을 돌아오는 농촌으로 할 수 있는 구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은 소득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는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농가소득을 살펴보면 9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97년도 이후 하락세로 반전하여 98년도 IMF로 인한 급격한 감소를 제외하더라도 99년도 는 가구당 2,200만원으로서 97년도 2,300만원에 비해 100만원이 감소하였 습니다.

농가소득의 구성은 농업소득이 48%, 농외소득이 31%, 이전수입이 21%로 구성되어 있는데 농업소득은 97년 1,020만원에 비해 99년도 1,060만원으로 약간 증가하였고 이전수입도 460만원에서 470만원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농외소득은 86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폭 줄어 전체적으로 전체 농가소득은 11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농업소득이 약간 늘었다고 하나 이를 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미곡, 맥류, 잡곡, 두류, 과수 같은 농작물 수입은 1,4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축산물이나 양잠, 양축 같은 농작물 이외의 수입은 3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줄어 전체적으로 120만원이 늘었지만 자재 및 가축비,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농구비, 가축구입비, 사료비 같은 농업경영비가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증가하여 농업소득을 상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물가상승에 따른 가계비 지출 증가로 농가의 잉여는 97년 570만원에서 99년 460만원으로 110만원이나 하락, 농가의 어려움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지금 농촌에서 주민들이 조상 때부터 일궈온 논밭을 버리고 도시영세민으로 전락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도시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심지어 1년 동안 단 한 건의 출생신고도 없었다는 면이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 농촌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마저 있습니다.

이번에는 농가부채를 살펴보겠습니다.

99년말 현재 농가부채는 가구당 1,800만원으로 98년 1,700만원에 비해 100만원이 증가하였고 97년도 1,300만원에 비해서는 무려 500만원이나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를 구성요인별로 살펴보면 생산성 부채

76%, 가계성 부채 17%, 채무상환용 부채 7%로 구성되어 있는데 채무상환용 부채는 98년 140만원에서 99년도 130만원으로 7.2% 감소하였고 생산성 부채는 1,624만원에서 1,753만원으로 8.5% 소폭 증가하였으나 가계성 부채는 265만원에서 318만원으로 무려 19.9%나 대폭 증가해서 생산성과 관련 없는 가계소비지출 증가는 향후 부채상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4년 후면 쌀까지도 수입개방이 될 예정입니다. WTO협정으로 물밀듯이 밀려드는 외국 농산물 때문에 앞으로 농촌은 더욱더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99년 농가부채가 호당 1,700만원이라는 것은 통계청의 자료에 의한 것으로 농민단체가 조사한 자료에는 호당 5,000만원이 넘는 정부 통계의 3배를 넘으며 게다가 상호보증제도로 인하여 연쇄부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얼마 전 9명의 농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인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농가부채는 현재 25조원으로서 이자는 평균 11%인데 현재의 농업수익률 5% 정도로는 도저히 이자마저 갚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99년도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3,000억 중 54.6%인 1,640억원만 지출되었다는 것은 정부가 아직도 농가부채에 대하여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지난 11월21일 농민들이 전국적으로 시위를 하는 사태를 유발한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농가부채특별법에는 첫째, 정책자금에 대한 장기분할 상환문제 둘째, 11~12%의 상호금융을 5~6%의 장기저리로 대체하는 문제 셋째, 농업경영개선자금의 추가지원문제 넷째, 현재 정부는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농가에만 한해 농신보를 적용하고 있으나 모든 연대보증을 농신보로 전환하는 문제 다섯째, 연체농가에 대한 협동조합 자율의 특별지원문제, 끝으로 보증을 서서 채무를 대신 갚아준 농민들에게도 저리의 장기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치기간이 끝나는 금년말이면 농가부채를 갚기 위해 논밭이라도 헐값에 팔려는 농가가 다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설상가상으로 농지는 외지

인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되어 있어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림부장관께서는 농가부채특별법 제정과 농민에게 불리한 농지매매제도 변경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가부채를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농가부채의 해결에는 협동조합에 대한 개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농가부채의 94.6%는 주로 정책자금이나 농·축협의 상호금융 등 제도권으로부터 차입하고 있는데 농협의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1.5~2% 정도 높아 95년도 이후 99년도까지 금리차액만 계산하여도 1조600억원이 넘습니다. 이는 농협이 5~6%의 저리의 정부자금으로 농민들을 상대로 돈놀이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농민을 위하여 존재하여야 할 농협이 오히려 농민을 상대로 돈벌이나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각종 협동조합의 문제점을 고치고자 금년 7월부터 농·축·인삼협중앙회가 하나로 통합하였지만 아직도 신용사업과 판매사업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고 지방에서는 농협과 축협이 아직도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농림부장관께서는 농협과 축협이 채무 등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마무리되었는지, 신용사업과 판매사업 분리가 지방에서도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여 농·축협이 함께 화합을 다지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99년도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농가예산 배정에 대해서, 농어의 소득이 줄어들고 부채는 증가하면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농어민의 어려움을 구제해야 하는데 일반회계기준 국가예산은 98년 75조, 99년 83조, 2000년 88조로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98년 7조2,000억원에서 오히려 99년은 2,002억원이나 줄어든 7조였다가 2000년 들어 7조3,000억으로 약간 늘어났고 해양수산부는 98년 2조1,500억이었다가 99년 2조3,000억으로 늘어났으나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한 선박감축분 보상에 대한 추경 1,740억을 빼내면 오히려 2조1,000억원으로 줄어들었으며 2000년 2조800억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농어촌이 거의 파산지경인데도 정부의 예산은 감소하거나 약간 증가하는 것을 보면 정부

가 농촌에 대한 대책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농림부장관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내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을 요구했는지 밝혀 주시고, 예산처장관께서는 이러한 요구를 얼마나 반영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의 세입 중 징수결정액은 10조282억원이며 이 중 527억원이 미수납되어 9조9,754억만이 수납되었습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에 불과하지만 액수가 496억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94%에 해당하며 일반회계의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0%에 다달아 세수추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세출예산을 분석해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6.9%이나 재정융자특별회계는 91.7%로서 전체에 비해 5.2%가 낮고 불용액이 1,360억이나 된다는 것은 행정수요 예측이 매우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농림부장관께서는 이렇게 세수체계가 잘못되고 과도한 불용액을 발생시키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고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벼직과 및 발작물용 농기계 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에 대해서 벼직과 및 발작물용 농기계 지원사업은 손쉽고 노동력이 적게 드는 벼직과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벼직과 재배용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생력기계화 효과가 뛰어난 발작물용 신기술 농업기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작물용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림부의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서 인용한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예산 34억6,200만원 중 집행액은 27억6,200만원, 불용액은 7억원이나 이는 보고서상의 수치이며 실제 집행예산은 9억5,100만원, 불용액은 25억1,100만원으로 예산 집행률이 27.5%로 대단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농림부의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서상에는 이러한 자세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집행액은 단순히 27억6,200만원이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금을 지원한 벼직과 및 발작물 재배용 농기계 대수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원래 계획한 지원 대수는 1,798대이나 실적은 600대로 사업진도율은 33.4%에 불과합니다.

농림부장관께서는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사업진행을 제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면 사업을 중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委員長 張在植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朴鍾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鍾根委員 한나라당의 朴鍾根 위원입니다.

정부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두세 차례에 걸쳐 예결위원을 하면서 예산심의의 사각지대가 너무나 늘어나고 있다 하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예산심의가 국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행정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독립적인 제도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라는 최근 여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의 비효율성이라든가 또 난맥상, 심지어는 예산의 낭비요소가 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앞으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주의 예산이 본격화되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 원장님께 집중적으로 질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금액 차원에서 어떻게 집행되었고 그것이 회계적으로 맞느냐 하는 데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 목표, 그리고 그 달성전략에 대해서 사전에 정부가 내용을 발표하고 달성 여부를 측정함으로써 예산이 과연 효율적으로 쓰여졌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8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성과주의 예산의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뉴질랜드도 하고 있으며 기타 여러 나라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균형된 성과주의 예산법의 기본구상을 볼 것 같으면 감사원은 의회에 과거 3년간의 성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회에 예산집행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원이 없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 기능을 상당히 대행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張在植 위원장, 丁世均 간사와 사회교대)

또 미국과 같이 국회 내에 예산심의 전문기관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결산보고를 일일이 다 챙길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로 삼고 싶은 것은 감사원에서 이러한 성과주의 예산에 대해서 본격적인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에 착수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심의의 사각지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문은 우리가 교육교부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집행내용을 제대로 챙겨 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또 대규모 투자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대규모 투자사업도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얼마나 투입되고 있느냐 그 돈을 다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차원에서 평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물량이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같은 돈으로 투자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는 데 대한 평가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총액예산사업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총액예산사업의 규모는 각 부처마다 요새 유행적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총액예산사업에 대한 내용도 사실 사전에도 국회에서는 잘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후의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그 성과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정부투자기관과 공기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경영평가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투자기관, 공기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화가 빨리 촉진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지금 사회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국민들로부터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엄중한 성과주의 평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정부에 기금이 지금 6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 난맥상, 이런 것도 기금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금은 운용규모가 190조에 달하고 조성누계가 277조에 달해서 제2의 예산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심의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기금의 성과 평가라고 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투자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분석이 되지 않았다 하는 비판이 있었을뿐만 아니라 또 부처 간에 횡적인 연계가 부족하다 하는 비판을 받음으로 해 가지고 국무총리실에 통합 운영체제를 갖추어서 이것을 사전에 전부 조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연구기관의 자율성이 저해된다 이런 비판이 있는가 하면 또 자율성을 너무 확대해 줌으로 해 가지고 낭비성이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연구투자비중이 GDP 비율로 따져 보면 세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의 전체적인 순위는 28위로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의 효율성, 연구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구기관의 자율성도 확보하면서 어느 정도의 통제기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과주의에 의한 평가제도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감사는 회계검사뿐만이 아니라 정책감사에 많은 비중을 지금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책감사에 대한 평가방법이 사실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관되게 다년간에 걸쳐서 정부의 예산집행평가를 국회에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감사는 외국의 경우에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행정부에 있는 감사원의 기능은 국회에다가 충실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원에서 성과주의 예산의 진행에 따르는 평가보고서를 만드셔서 국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원장님은 감사원의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셔서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결산위원회가 상설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가 상설화가 되기로 결정이 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에 따르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운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아직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하루속히 시정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상설화에 따르는 실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의 견해를 제가 종합해본 바에 의하면 상반기 중에는 결산심의에 치중하고 하반기에는 예산심의에 치중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제시된 걸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기결산체제를 구축해서 지금 9월2일까지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내게 되어 있는 것을 6월30일 정도로 앞당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결산체제를 하루빨리 구축해서 6월 달에는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이 되고 국회에서 결산심의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부의 제도적인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우리 예결위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하루빨리 결정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朴鍾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李根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李根鎭委員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

고양시 덕양을 출신의 李根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수출보험기금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 말 현재 수출보험기금은 총 1조1,552억원으로 보험책임잔액 16조4,084억원의 14분의 1의 수준에 불과해 선진국 평균 10분의 1 수준 및 금융기관 BIS 자기자본비율 12분의 1에 비해 기금의 담보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수출보험에서의 궁극적인 보상책임은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하더라도 운용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적극적인 보험지원을 회피하고 위험이 낮은 거래만을 선택적으로 인수하는 경향이 초래되는 반면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폭넓은 보험인수와 신속한 보상이 요구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금규모 자체가 직접적인 담보능력의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로 극심한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수출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최근 수출보험기금이 대폭 확충되었지만 99년 수출보험

이용률이 19.5%로 일본의 이용률 36%에 비하면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보험공사의 담보력은 92년 공사 설립 이후 크게 개선되었지만 외국 수출보험기관과의 담보력을 비교해 보면 아직도 우리 수출보험의 담보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보력이 취약한 상태에서는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 보수적 운영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수출보험이 고위험 미개척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선도적 수출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수출위험은 증가하는 데 반해 수출업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수출보조금 지원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수출보험 업무는 수출업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수출보험기금의 담보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외국인력 대체고용지원사업의 집행 실적 부진과 반복되는 이월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IMF 사태 이후 심각해진 내국인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에 내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 임금을 보조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211억6,6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99년 12월 지자체의 동절기 실업예산으로 30억원이 전용되고 예산현액 181억6,000만원 중 14억8,400만원만을 집행하고 92%에 달하는 166억7,6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미집행 비율이 무려 92%에 달한다는 것은 추경을 편성한 목적을 좋게 보더라도 효과 측면에서는 낙제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000년도로 이월된 예산도 경기호전에 따라 이월예산 대비 38.6%만 집행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외국인력 대체고용 지원사업이 추경편성 시부터 내국인 근로자의 3D업종 기피현상과 국내 노동시장의 현실을 간과했기 때문에 발생한 명백한 실패사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견해와 이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문제에 대해서, 중소기업

업 정책자금은 만성적인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게 장기 저리의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만을 위한 별도 재원을 조성하여 낮은 수준의 금리로 장기간 안정적인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초 20여 개에 불과하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강화 및 지원수요 증대로 말미암아 현재는 79개로 대폭 증대하였고, 2000년에는 12개 정부부처에서 총 4조8,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처별로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총괄부서인 중소기업청이 전체 지원 규모의 51%인 2조4,00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기청, 산자부, 과기처, 정통부 등 4개 부처가 차지하는 비중은 81% 수준입니다. 아울러 직접적인 자금 지원 형태는 아니지만 중소기업 신용보완을 위한 보증보험에 투입되는 재정지원 규모도 1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의 지원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90% 이상이 융자 형태로 지원되고 있으며 보조금 출연 또는 출자 형태는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금유형별로는 시설자금이 61%, 운전자금이 19%, 기술개발자금이 20%로 각각 구성되어 있어 시설 및 운전자금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설자금의 비중이 감소되는 대신 기술개발 및 창업 그리고 신제품 사업화 등의 용도로 지원되는 자금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와 함께 98년, 99년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융자사업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채권발행의 계획 대비 실적은 각각 1조8,930억원과 전년 대비 70.8% 증가한 3조2,330억원으로 차질 없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 등 융자재원 조달에 따른 채권발행시 조달금리와 대출금리 간 이차를 재정보전으로 상기 기금에 출연하여 98년 및 99년에 전액 집행된 중기청의 세출예산 반영액은 각각 1,122억 및 1,537억원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정책자금의 운용실태를 평가해 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 및 수익 제고에 상당히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화, 정보화를 통한 구조고도화 및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그 지원규모가 급속도로

팽창함에 따라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양한 정책수요에 따라 정책자금이 다기화, 세분화되면서 부처 내, 부처 간 중복문제가 야기되었고, 그 결과 중소기업들이 지원내용을 쉽게 파악하지 못해서 국가재정 관리의 비효율 및 정책효과의 저하 문제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일반금융의 활용과 접근가능성이 높아진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이 아직도 정책자금 지원의 대종을 유지하는 반면, 공공성이 높고 외부효과가 큰 기술개발자금 등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실정입니다.

셋째, 정책자금 지원절차가 공급자 중심의 다층구조로 되어 있는 까닭에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불편,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의 집행상황 및 성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가 거의 부재하여 예산편성 및 정책자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민간금융분야의 자금배분 기능 활성화 및 경쟁여건 조성, 시중금리의 하향안정화 추세 유지, 직접금융 조달경로의 확충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정책자금이 금융자금을 구축하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책자금 운용에 관한 발전적 논의와 함께 결산과 관련하여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출예산의 불용률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98년, 99년에만 20 내지 60%대의 불용률을 보인 것은 IMF 경제상황 등 배경을 감안하더라도 이차보전율이 일정한 상황에서 대출금 잔액 추이에 따른 이차보전예산의 시기별 배정이 다소 불합리하게 보입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발전이 부품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 등을 통한 전체 산업의 중장기 발전 및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2000년 예산부터 중소기업지원 예산이 없어지는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용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적 예산지원 강화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정경제부장관께서는 본 위원의 이러한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산국립암센터와 관련하여 일산국립암센터는 병원동 7,500평, 연구동 2,000평, 부속동 1,280평의 총연건평 1만780평에 대하여 부지매입비 155억원, 시

설부대비 223억원, 의료장비비 115억원 등 총 사업비 493억원을 들여 91년에서 94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91년 건립부지 매입 이후에 10여 차례에 걸친 공사계획의 변경, 운영방침의 변경 및 운영주체 미확정에 따른 의료장비 미투입, 공사중지 등으로 사업기간의 연장 및 총 사업비가 조정되어 99년까지 1,389억원의 총 사업비를 들여 올해 12월 시범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매년 남자 291명, 여자 173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입원율도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완치 가능한 조기진단율이 15%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암관리와 암연구의 상호 연계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암을 정복하고자 국립암센터의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95년 암연구소를 오송 보건의료과학기술단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연구동 건립비가 감액되어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다시 계획을 바꾸어서 2000년도에 일산 암센터 내에 건립할 예정으로 79억원으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2002년이나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즉 보건복지부가 충분한 사전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운영방침을 확정하지 못함으로써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암연구동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 초기부터 암관리와 연구의 상호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암 정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제부터라도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서 암센터 건립추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李根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孫泰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孫泰仁委員** 한나라당 부산 해운대 출신 **孫泰仁** 위원입니다.

99년도 예산은 현정권이 처음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것입니다. 현정권의 경제운용 철학과 재정정책의 방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99년도 결산은 그러한 의미에서 현정권의 재정

운용에 대한 첫 번째 평가이며 향후 정부운영의 방향타입니다. 또한 2001년도 예산편성의 시금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99년도 결산을 보면 곳곳에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정권 차원의 과시에 불과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회계법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심지어는 위반하면서까지 마음대로 그리고 힘있는 부처 우선으로 배정, 지출하였습니다. 이 정권의 3불인 불법, 부정, 부도덕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우선 본 위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에 따른 제도적 보완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국회 결산심의를 매우 형식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100조원에 달하는 방대한 정부 결산을 감사원에서는 모든 직원들을 완전 가동하에 1년 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복잡한 결산시스템 등으로 인해서 국회는 단 이삼일 만에 통과의례처럼 결산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안이한 자세에도 문제가 있지만 국회 내에 전문적 결산 조직이 없는 제도적인 원인도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현대 국가는 행정의 전문화를 이유로 행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권 분립을 전제로 하는 대통령제하에서도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 기능은 고전적 의미의 입법권보다 대정부 견제기능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결산심의와 더불어서 국정감사 및 조사권의 효율적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연례적 통과행사에 그치고 있는 결산심의와 국정감사의 견실화를 위해서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산결산의 심의와 국정감사를 구체적으로 연계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의 예·결산 전문화를 위해 미국의 의회예산처와 같이 독립된 전문기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정부 예산을 편성단계부터 결산까지 정확하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97조에 의해 현재 감사원이 가지고 있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과 회계검사 기능은 국회로 이관하여야 합니다. 행정부의 예산집행 결과를 검사하는 회계검사기관이 바로 그 행정부의 수반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재정권의 분립과

견제라는 기본원칙에도 어긋납니다. 국회 예결위 상설화에 맞춰 감사원의 결산 및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시켜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결산 및 회계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법 제21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비비 지출의 근거를 예측불가능한 상황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정부의 예비비 지출은 예산회계법의 정신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마음대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예비비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99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조 5,300억원으로 세출예산액 대비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결산액은 1조 9,619억원으로 세출결산액 대비 2.4%였습니다. 이는 선진국의 예비비가 1% 내외에 그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비율로서 국민의 세금을 방만하고 자의적으로 지출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의 잘못된 관행과 무분별한 집행이 예산회계법을 위반하였으므로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법이 아닌 대통령훈령이나 대통령령에 의해서 무계획적으로 신설된 조직의 운영경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대통령 소속의 삶의질향상기획단과 반부패특위는 법에 근거한 조직이 아니라 대통령이 편의적으로 설치한 조직입니다. 이러한 법외조직을 위해 8억 2,947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법적 기능을 가진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특히 반부패특위는 대통령 직속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실에서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출한 것은 대표적인 행정편의주의에 기인한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기획예산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의 확정권을 가진 국회에는 한마디 보고도 없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예비비를 지출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통령의 해외순방 경비를 예비비로 과다 배정하고 과다 불용하는 것은 대통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비록 국가기밀

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철저한 계획하에 시행되고 있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입니다. 더구나 APEC 정상회의나 ASEAN+3 회의는 정례회의로서 예측불가능성은 억측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통령 행사라는 이유로만으로써 예비비 120억 342만원을 지출한 것은 예산회계법 위반입니다. 국가의 최고위직으로서 국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한 대통령과 관련된 예산집행이 해마다 법을 위반하는 것은 대통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해외순방 비용은 예산편성 시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여 예비비가 아닌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낭비라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99년은 2월 실업률이 8.6%였고 연평균 실업률이 6.3%를 기록할 정도로 국민적 고통이 최고점에 다다랐던 2월이었습니다.

전국의 지하철역, 지하보도 등 바람만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 간에 노숙자가 가득 차 있던 때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야 배를 굶든 추위에 떨든 아랑곳없이 대외과사용 행사에만 치중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업들이 바로 새 천년 행사입니다.

새 천년 행사라는 이름이 붙은 사업에만 76억 3,632만원, 기타 제2건국운동 다짐대회, 한국방문의 해 기획단 등을 포함하여 87억 9,393만원이나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87억 9,393만원은 110만명의 실업자에게 1,000원짜리 식사를 8끼 이상 줄 수 있고 400원짜리 라면 2,200만개를 공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노숙자는 얼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일몰일출행사가 필요했었던 것인지 문화관광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획예산처에서 매월 예비비로 지출한 4,240억원의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는 당연히 국가정보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어야만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이 대북협상의 대표로 그리고 밀사로 활약하는 이 정권에서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숨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권유지용 예산이기 때문입니까?

매월 지출되고 있는 예비비라면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비밀리에 사용하려 하지 말고 국가정보원의 일반경비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측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행정편의, 국가기밀, 국가안보 등의 갖가지 이유로 해서 예산회계법을 위반하면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국민을, 국회를 귀머거리, 병어리로 만드는 그러한 행위라고 봅니다.

만약 이것이 관행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치부를 한다면 나쁜 관행은 개선해야 하고, 특히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 배정과 지출과정에서 예측불가성이 전제되지 않은 예비비는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와 관련하여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목적예비비인 재해대책비는 국방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비 예비비 사용은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고는 있으나 관행이라는 고정된 사고의 틀을 벗으면 예비비로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가령 5년 또는 10년간 재해피해액, 복구비 등의 평균을 산출하여 소요 부서에 일반회계로 계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독도 관련 예산집행에서도 굴욕적인 이 정부의 외교적인 태도가 보였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99년도 해양수산부는 해양과학기지 구축예산으로 이어도 9억원, 독도 1억원을 계상하여 이어도는 계획대로 집행하였으나 독도의 1억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99년7월 외교통상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11개 부·청이 합동으로 발표한 99해양개발시행계획에 따르면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71억9,000만원으로 독도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여 독도 인근해역에 대한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세계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해상활동과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독도 영유권 문제 야기시에 우리 측에 유리한 국제여론 조성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 따라 98년에 이미 1억원의 예산으로 독도 현장 해양조사를 하였고 99년에는 설계 및 작업조건 산출을 위한 예산으로 1억원이 배정되었으나 불용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는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이미 책정된 독도 해양과학기지 설치예산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외교통상부는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총 18건의 독도 관련 연구용역을 위해서 2억6,598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전혀 공표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정권이 일본에게 어떠한 빚을 지고 있어 독도 이야기만 나오면 설설 기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인지, 배정된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고, 연구된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리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외교통상부장관은 독도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孫泰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裴基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裴基善委員 경기도 부천 원미읍 출신 裴基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1999년도 결산을 하는 마당에 저는 우리 국민과 함께 금년도 국정운영의 마무리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산에 있어서 구체적인 좋은 말씀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실천을 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해하건대는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시고 또 21세기 새로운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또 국민과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당신의 소신을 몇 가지 목표와 또 이념적 체계로 정리해서 이미 국민한테도 표명하셨고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이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 하는 간곡한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 정부의 3대 목표는 참여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원리 그리고 생산적복지 이 3대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21세기에 새로운 국정의 토대를 잘 쌓아보자, 따라서 지난 산업화시대의 패러다

임을 이제 지식정보화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잘 바꾸어 보자는 목표를 제시하셨고 또 그것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써 4대 구조조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정부의 노력들이 상당한 수준에서 성공을 하고 있고 또 제대로 되어 가는 측면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을 하고 있고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반성을 하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1000년의 로마를 이끌어 왔던 여섯 가지의 지혜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시민에 의해서 움직이는 로마입니다. 대한민국 국정이 국민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이 국가의 희망과 미래의 새로운 전략적 방향이 국민의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정운영을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부부처를 4개팀으로 나누어서 시스템플레이를 하자고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시스템플레이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로마는 출선수범하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천년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지금 출선수범하는 것입니까?

21세기 새로운 문을 여는 이 마당에 지도자들은 자기의 개인적 이익보다, 당리당락보다, 아니면 부처이기주의보다 먼저 국익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개혁을 할 때에는 점진적 개혁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보지식사회가 우리에게 바람직한 전략적 방향의 목표지만 하루아침에 정보지식사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의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어나가는 그 피나는 노력과 그리고 산업사회에서 오늘의 불륜을 만들어낸 시스템 그리고 체질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의 중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혁이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국민과 더불어서 토론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점진적인 추진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대통령께 페이퍼 워크로 에이플러스를 받는 보고서는 올리시지만 정작 함께 가야 할 민생의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하룻밤을 같이 지새워 보고 그리고 농성하는 현장에 하룻밤을 같이 가서 주무셔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우자동차가 지금 구조조정을 못 하겠다고 버티는 노조와 함께 하룻저녁을 가서 주무시면서 한번 마음껏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제 우리는 점진적 개혁을 통해서 보다 완벽한 국정의 효과를 얻어내는 정말 국민을 참여시키는 이러한 실효성있는 개혁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헌신적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안에서 부족한 것을 외부에서 채워넣는 외부의 에너지를 우리는 동원해 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많은 외국의 지혜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IMF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많은 부족함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부의 것을 온전하게 배울 수 있는 정말 정직하고 그리고 겸손한 자세를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아낌없는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과연 IMF시대에 1달러를 아끼더라도 아낄 것은 아끼고 반드시 써야 될 천달러, 만달러는 과연 없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어떤 투자를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금반지까지 빼서 또는 훈장까지, 정부의 간절한 요청에 부응했던 국민들의 이런 참여가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국민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을 함께 이해하고 참여해주고 자발적으로 동

조해줄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해내기 위한 그러한 노력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의약분업의 추진과정이나 또는 국민연금 그리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기업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구조조정과정에서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의 입장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생각들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바로 우리 국정운영에 있어서 현장의 중요성과 그리고 소위 고객마인드라고 하는 국민의 입장에 서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이런 국정운영의 철학이 더욱더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많은 공기업 노동자들이 국가 운영에 있어서 본인들의 억울하고 그동안에 제대로 받을 것 다 받지 못했던 이런 과거의 계산서를 우리 정부에 제시하면서 구조조정의 이견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고 이들에게 어떻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과 생각을 가다듬고 정말 그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국가를 생각하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다시 한번 고통을 스스로 감내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여러분 스스로가 몸을 던져서 만들어 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이 지금 조직이기주의 입장에서 지금이 나라의 법을 적당하게 무시해도 좋다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민들이 고속도로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연일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공익의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조직의 이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함께 반성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정부는 국가기강을 확립하고 우리 공직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법치의 기강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법무부장관님께 특별히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21세기의 새로운 국가목표를 달성해 내는데 국민의 창조적 에너지와 우리 공무원들의 보다 다양한 에너지를 모아낼 수 있는 그런 유연성과 탄력성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유연성과 탄력성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

가 공권력의 뼈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 뼈대의 기반이 튼튼했을 때만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장점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법무부장관께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국가기강을 세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감사원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 에너지를 우리 국정에 또는 복무에 반영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열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산업화시대의 낡은 기준을 가지고 1mm가 틀렸느니 2mm가 틀렸느니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을 전혀 움직이지 않도록 만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이제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21세기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틀을 획득해 내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국민속에 다시 한번 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그런 각오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우리 국회도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공적자금의 처리문제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조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을 하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裴基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權琪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琪述委員 한나라당 울산 출신 權琪述 위원입니다.

99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 제안을 할까 합니다.

먼저 재경부장관에게 묻습니다.

9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83조6,851억 원이었으며 수납액은 84조2,806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예산액의 115%인 96조4,415억 원이었으며 불납결손액이 5조3,395억 원, 미수납액이 6조8,214억 원이었습니다.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세입예산액의 14.5%인

12조1,609억원이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98년도보다도 5,792억원이 또 증가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95년도에 비해서는 무려 2배 이상 늘어났으며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된 원인은 지난해와 한치의 변함도 없이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이 99.8%, 시효완성, 납부의무자의 사망 등이었습니다. 또한 미수납액은 98년도보다도 1,89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95년도에 비해서 180%가 늘어났습니다.

미수납된 원인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이 전체의 22.4%, 징수유예 15.1%, 납기미도래 22.4%, 통관진행중, 기타 40.1%였습니다.

94년 이후 98년도까지 5개년간 평균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율은 4.1%인데 비해서 99년도의 불납결손율은 7.1%였습니다.

또한 최근 5개년간 평균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6.88%이지만 99년도 미수납액은 7.1%였습니다. 불납결손율과 미수납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세입예산의 15% 수준인 12조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을 축소를 해야 합니다.

이 정부에서는 그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조원의 불납결손과 미수납액은 영세상공인이나 서민들의 소액체납이 원인이 아닙니다. 수억원, 수십억원의 거액 체납자들이 원인제공자입니다.

근로자, 농어민 등 서민들과 영세상공인들은 밥을 굶거나 빚을 얻어서라도 몇 만원 몇 천원까지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망을 피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거액을 탈세한 자들은 정부를 비웃으면서 호화사치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억 이상 거액 불납결손과 미수납자를 공개하고 징수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정부에서 불납결손처리한 금액이 최근 3년간 무려 13조3,844억원에 달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불납결손의 내용입니다.

99년 일반회계 국세세입 중 불납결손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상속세입니다. 부가세와 법인세의 불납결손율은 4%인데 비해서 상속세의 불납결손율은 9.1%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세정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에도 징수결정액의 7.7%가 불납처리되었습니다. 특히 신고분 소득세의 경우 99년 징수결정액 중에서 무려 24%가 불납결손처리되었습니다.

반면에 원천징수분 소득세는 징수결정액의 0.56%만이 결손처리되었을 뿐입니다. 봉급생활자 세금은 포착된 세액을 100% 거두어들인 반면 자영업자 등의 사업소득세는 4분의 1을 징수포기한 것입니다. 조세행정이 분배의 정의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조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과표 현실화율은 50%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징수결정한 세금의 24%를 또 불납결손처리한다면 부족한 세금을 누가 내야 합니까? 돈없는 근로자와 봉급생활자가 부담해야 합니까?

거액체납자의 재산을 철저히 추적해서 불납결손액을 줄이고 서민의 세금부담을 경감해야 합니다.

99년 불납결손액 중에서 99.8%가 재산이 없거나 거소불명이라는 이유로 결손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은행연합회가 신용정보 확인을 위해서 국세청에 국세체납 및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국세청이 지난 5월26일 26만명의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자 2만3,000여명이 부랴부랴 1,955억원을 납부했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못내겠다고 버티던 사람들이 금융기관 거래가 정지될까봐 밀린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한 것입니다.

재경부장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불납결손액을 어떻게 줄일 계획입니까? 특히 신고분 소득세나 상속세의 결손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해서 불납결손액을 축소해야 합니다. 또한 거액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해서 탈세한 돈으로 해외에서 호화사치생활을 할 수 없도록 철저히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재경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묻습니다.

9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현액은 84조4,984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의 95.3%인 80조5,099억원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었으며 예산현액의 1.7%가 이월되고 3.1%가 불용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일반회계 평균집행률 96.3%에 비해서 집행률이 1%씩이나 낮아졌을 뿐 아니라 이월액은 전년도보다도 6,032억원씩이나 대폭 늘어났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 1.8%에 비해서 99년도 불용률 3.1%는 두 배 수준입니다.

9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153조9,920억원인데 집행액은 142조 1,805억원에 불과합니다. 집행률이 겨우 92.3%입니다. 예산현액의 2.2%가 이월되고 5.5%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99 세출예산 현액의 7.7%인 11조8,115억원이 이월·불용되었습니다. 예산의 당해연도 집행원칙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예산회계법이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투자가 부족해서 불편을 당하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많으며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부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운 국민의 세금 12조원을 활용하지 않고 이월·불용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98년도 결산 당시에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는 과다한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월·불용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또 12조원의 이월과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입니까? 예산집행을 소홀히 한 것입니까? 만약 예산절감 운동으로 불용이 발생했다면 그동안 불요불급한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해서 절감 없이 예산을 낭비해 왔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이상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개선책을 기획예산처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예산회계법에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동일가액의 다른 국유재산으로 변환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금에 의한 계상방식을 취하고 있는 예산제도와는 달리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97년11월 IMF발생 이후 99년말까지 정부에서 현물출자한 11건 중에서 9건 10조 2,069억원은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서 투입된 것입니다.

(丁世均 간사, 張在植 위원장과 사회교대)

공적자금 110조이외에 10조2,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거나 또는 부실채권 정리기금에 용자 지원해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기

위해서 출자했던 것입니다.

공적자금에 의한 지원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5,000억원에 해당되는 한전주식을 한국산업은행에 현물출자해서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정리기금에 용자 지원했습니다.

3,200억원에 해당되는 담배인삼공사 주식을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출자해서 자기자본 비율 제고와 자본충실화를 도모했습니다. 또한 같은 목적으로 한전과 담배인삼공사 주식 1조5,000억원을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각각 7,500억원씩 출자했습니다. 한전과 담배인삼공사 주식 3,699억원을 한국수출입은행에, 포철과 담배공사 주식 7,000억원은 한국산업은행에, 1조5,000억원은 중소기업은행에 각각 출자를 했습니다.

도로공사 주식,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출자 증권 3조3,670억원을 한국산업은행에, 도로공사 주식 4,500억원을 한국수출입은행에,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담배공사 주식 1조5,000억원을 한국투신, 대한투신, 산업은행에 출자해서 투신사의 경영여건 개선과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이상의 정부 현물출자는 예산회계법이 예외규정으로 인정한 예산의 현물출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동일가액의 다른 국유재산으로 변환시킨 현물출자가 아닙니다. 동일가액을 회수한다는 보장도 전혀 없습니다.

공적자금 대신 투입한 현물출자는 금융구조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또한 동일가액의 국유재산으로 변환시키는 현물출자 이외의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외의 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공적자금과 동일한 현물출자를 국회의 동의도 없이 집행한 이유가 됩니까? 현물출자분 10조2,069억원의 전액 회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앞으로의 개선책과 함께 재정부장관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9회계연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조7,092억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가 2조5,300억원이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가 1,792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조9,622억원이 지출되었으며 854억원이 이월되고 6,616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의 72.4%가 집행되고 27.6%가 이월, 불용되었습니다. 더욱이 특별회계 예비비는 겨우 3억원이 지출되고 99.8%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백지위임한 자금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비의 규모는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99년도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의 2.4%로써 인근 일본의 0.5%에 비해서 5배 정도로 규모가 너무나 방대했습니다. 따라서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 특히 안전보장 활동비까지 예비비에서 지출되고도 28%가 불용된 것입니다.

99년도 예산심의 당시에도 본 위원은 과다한 예비비의 편성은 정부에서 국회의 백지위임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수준이었던 예비비가 98년도에 3.5%, 99년도에는 2.4% 수준으로 계속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불용액 또한 1개 부처의 예산총액 수준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불용률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99% 이상인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편성하지 않고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의 경우에도 일반예비비는 폐지하고 규모가 큰 사업은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예비비를 집행할 때에는 상설화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지적과 제안에 대한 예산처장관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중에서 국가안전보장활동비로 지출되는 예산이 연간 4,000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국가안전보장활동비로 집행된 예산이 모두 1조 2,559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활동비는 국가의 안전에 관련되는 국내외 정보의 수집처리 또는 반국가적 범죄의 수사를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예산을 언제까지 예비비 등에 분산해서 위장할 계획입니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예산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입니까?

99년의 경우 일반예비비 7,200억원 중에서 4,230억원이 국가안전보장활동비로 지출됐습니다. 98년도에 일반예비비 6,850억원 중에서 4,250억원을 국정원이 사용했습니다. 일반예비비의 60.3%를 국정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활동비는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 추산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사용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해 총액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안전보장

활동비를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은 예산회계법 정신에 위배됩니다. 독립된 국정원 예산으로 편성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지적과 제안에 대한 예산처장관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충질의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민련의 金學元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學元委員** 충남 부여 출신 자민련 소속 金學元 위원입니다.

오늘 99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경제지표의 호전이 진정한 경제적 호황을 의미하는가? 이 점에 관해서 재경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질 경제성장률이 98년 마이너스 6.7%에서 99년도에 10.7%로 급속히 호전되었습니다. 실업률도 99년2월의 경우 8.6%에서 99년말에는 4.2%로 완화된 등 경제여건이 급속히 호전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기호전은 지속적인 호황국면이 아니라 대규모 재정투입에 따른 수요확대 등 일시적 지표의 개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인식을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재정역할의 과신으로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가져온 계기도 되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중전의 긴축적인 재정정책 프로그램에서 재정정책 포기의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재정역할이 증대되어서 결국 국가부채 등 재정적자의 확대를 이루고 공적자금의 무리한 확대투입 그리고 보조금, 지원금 위주의 예산편성, 대북지원의 확대 등 이러한 정책을 쓰게 되어서 이와 같은 정책은 무리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 경제적 지표의 개선과 이와 같은 무리한 정책과의 관련에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순수한 경제 자발적인 능력을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며 그 경제적 지표의 개선책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입세출 외의 현물출자와 금융구조조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97년11월 IMF 사태 이후 99년12월까지 이루어진 현물출자 내역을 보면 총 11건에 10조6,159억원의 현물출자 중에서 2건을 제외한 9건에 10조2,069억원의 현물출자가 모두 금융구조조정을 위해서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세출예산 또는 공적자금에 의한 지원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정부가 그동안 국민에게 알려진 공적자금 투입규모도 기존의 110조원보다도 최소한 10조원이 더 추가된 120조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한 금융감독위원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현물출자는 현금출자와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금융구조조정 문제의 일관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예산제도로의 편입 또는 이 분야의 재원집행시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한 의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기타기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기금은 이른바 정부의 호주머니라고 불리워질 만큼 방만하고 부실하고 변칙운동 등의 대표적인 재원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의 예에서도 보지만 정부는 부처예산의 정당한 편성을 통한 사업추진보다는 기금 등의 행정편의적 방식을 통한 예산의 대폭 증액, 국회동의를 기피, 예산절차의 불투명성 이런 것들을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것이 예산 외의 제도로서 이를 예산제도화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우선 기타기금을 공공기금화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 기금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기타기금을 대부분 공공기금화해서 국무회의 심의와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국민혈세의 자의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준비해 놓고 있는 바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기타기금 운용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정부의 기금제도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고 또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 및 집행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정부는 99년 내에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축소를 위해서 재정적자감축법 제정을 공언해 왔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언상태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또 정부회계방식을 현행의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실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부터 1년 전인 99년 이전에 재정적자 감축 관련법안을 만들겠다고 공청회까지 개최한 이후 현재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재정부장관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부채도 작년말 108조원에서 올 상반기에만 해도 113조로 늘어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도 18조원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기업 부채는 국가부채 규모의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고 기금운용의 난맥상, 특별회계의 난립 등으로 현재의 단식부기의 정부회계방식으로는 자산·부채 등이 이동, 변경, 증감하는 이러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가 힘든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식부기제도의 조기도입을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각종 정책자금 집행시 카드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구비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 정부의 거의 전 부처에 걸쳐서 지금 각종 정책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동 예산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등이 문제가 되어서 사후에 부당 불법 예산사용의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9년에 감사원의 정보통신진흥원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의 결산과정에 대해서는 연구목적 외 사용이나 연구의 중도포기에 따른 회수자금 그리고 연구과제 수행 후 집행잔액 등이 주요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자금은 무엇보다도 동 자금의 본래의 지원목적에 충실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사전·중간·사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항상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밑빠진 식의 정책자금 지원은 회수가능성 없는 공적자금 투입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관련법 제도 등의 강화 등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선 동 재원을 집행하는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관련예산 사용시 카드이용을 의무화한다고 그러면 자금의 흐름과 집행내용을 별도의 번잡한 점검과정 없이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기획예산처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분야별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무부에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에 총 349억5,400만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서 83억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사법개혁추진회의 운영비 8억5,100만원, 특검제운영소요경비 18억4,300만원, 가계지원비 지급에 따른 인건비부족액 14억2,500만원, 그리고 검찰청운영공공요금부족경비 30억8,500만원 정도. 그런데 사법개혁추진회의 운영비나 검찰청운영공공요금부족경비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시에 당연히 예견 가능했던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년 이와 같은 예비비 문제로 여러 위원들의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이와 같은 것들은 본예산에 반영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부에 대해서 남북협력기금에 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 기금의 총 운용규모를 당초 2,244억원에서 5,619억원으로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실적을 보면 비료지원 339억, 그리고 이산가족 통합정보센터구축사업 4억원, 모두 343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기금규모를 이와 같이 대폭 확대했을 때는 그 산출근거가 되는 사업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 기금의 집행실적을 볼 때 통일부에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고사하고 그 산출근거조차 의심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이 금액을 산출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여러차례 밝혔습니다.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변화해 가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면서 온 국민이 이를 위해서 지지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막대한 돈을 퍼부으면서 표면적인 화해와 협력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데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 통일부의 대북정책을 보면 남북경협지원 등을 확대하겠다는 생각만으로 예산을 이와 같이 크게 확보를 해놓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은 북측의 요구에 따라서 그때그때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99년 통일부가

기획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60조를 보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나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투명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 사전심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통일부에서 국민적 동의 없이 국민 1인당 만원씩 해서 5,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종 인두세를 신설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외교통상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남미농업이민장려 등의 명분으로 아르헨티나에 야따마후까 농장의 개발을 비용과다를 이유로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비용이 매년 2만 달러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이는 명백한 정책실패로 볼 수 있는데 관련자들에게 책임여부를 물었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국방예산의 핵심인 방위력개선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96년에서부터 2000년까지 그 비율이 점차 감소하더니 드디어 2001년에는 마이너스 2.4%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방예산에서 방위력개선비가 감소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나라의 안보의 위협과 또한 대북에 관한 여러 가지 무력감퇴의 원인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군이 지상군 위주의 전쟁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적은 예산으로 고효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력증강사업 계획시에 전쟁억지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기체계의 도입시에 전쟁억지력 및 전력증강이 얼마만큼 이루어질 것이라는 계수화된 비교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이와 같은 작업을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부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정부 출범 이후 국가부채의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부채가 지난해 말 18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마구잡이식 건설로 인해 가지고 지방재정이 아주 말이 아닌 형편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도 무계획한 선심성 행정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북 진주시 교육청의 경우 예산을 절감한다고 도심지 초등학교 내에 중학교를 설립하자고 했으나 시에서 학교편중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평등을 이유로 해서 불허해 가지고 설계용역비 4억5,000만원 날렸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경우에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화장실 콘테스트에서 우수상을 받은 천지연 폭포옆의 화장실을 철거하고 새로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경우 배과수원의 근처의 도로변에 벚나무 심었다가 벚나무가 배 병해충을 옮긴다는 미국의 울산배 수입사로부터 항의를 받고 심은 지 2년 밖에 안 되는 가로수를 모두 교체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낭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18조원의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상환하기는 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도를 낼 경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간이 되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金容鈞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鈞委員 존경하는 위원장,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산청·합천 출신 金容鈞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민생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공직자,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 절약하면서 무너진 경제를 일으키기 위하여 피땀을 흘려야 될 때입니다.

고통을 참다 못한 농민과 근로자들이 전국적인 규모의 시위를 하고 있고 시장과 증시가 붕괴 직전에 있으며 환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혁신과 자성 속에서 종래의 타성적인

국가경영 관행을 탈피해야 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출을 축소 절감하며 고통을 분담하는 새로운 공직 기강과 의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작년도의 예산결산심사에 임해서 정부는 매년 예산액을 올리는 방만한 관행을 답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99년도의 세출예산은 84조5,000억이고 80조5,000억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의 본예산은 92조로서 8조 가량 증가되었다가 다시 추경예산으로 95조로 올라갔습니다. 지난 7월22일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은 추경으로 금년 예산을 95조로 올리는 것은 혹시 내년도 예산을 100조 이상으로 하기 위한 숨겨진 의도가 아닌지를 물은 바 있습니다.

과연 정부는 내년 예산을 101조로 인상 책정함으로써 금년 본예산의 9.8%를 더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의 경제성장률을 8.5%로 보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3에서 6%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타성적 예산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공적 자금이 40조 이상 소요되는 현실입니다.

감사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작년도의 결산심사에 있어서 정부 운영의 회계적 측면과 함께 공무원의 의식과 기강 이완된 타성에 대하여 감사한 바가 있는지, 감사원에서 평가하기를 과연 이러한 타성적 예산 책정과 매년 자동적으로 5%에서 10%씩 예산을 올리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관행이 이 비상사태를 대처하는 데 올바른 태도인지를 점검해 보았는지를 묻습니다.

다음은 재경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국세체납액에 대해서 징수 가망성이 없다면 이를 국세청이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부도기업 등에서는 세금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에 의하면 결손처분한 후 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장관 결손처분을 한 이후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여 엄정징수 노력을 하려 한 경우가 있는지 어떤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예산집행상에서 미집행금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관심사안이 되지 못한 것은 예산편성을 국회의 심의만 받은 후 실제 집행은 행정부가 하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념과

그동안 국회가 예산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제도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결산위원회가 상설화되었기 때문에 행정부의 예산집행과정 자체도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감시할 수 있는 예산결산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부의 예산집행 자체에 대해서 국회가 제대로 정보를 파악해서 그것을 심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새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에 대응해서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국회에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 재정부장관은 어떠한 개선책과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결산서가 서로 형식이 달라 가지고 사업분석이 어렵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장·관·항·세항·세세목·세세항·목으로 구분하고 그 산출내역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서에는 장·관·항·세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단위 구분인 세세항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안과 결산서를 같이 놓고 분석하게 되면 예산에 있던 구체적 내역이 결산에서 어떻게 나오게 하는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현행 예산회계법 43조2항은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해서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안과 결산서의 형식을 통일할 용의가 없으신지 기획예산처장관과 재정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현물출자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행 예산회계법 제18조2항 단서를 보면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단서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현물출자는 세입세출예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금 계상이 아니라 동일가액의 다른 국유재산의 변환이라는 것이 그 근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9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루어진 총 11건, 10조6,000억원의 현물출자를 보면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댐 사용권과 시설관리 권을 제외하고 9건, 10조2,000억원의 현물출자가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 전부 다 투입되었습니다.

출자목적은 보면 BIS비율 개선을 통한 신인도 제고, 부실채권 조기정리, 자본 충실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공적자금과도 유사한 성격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즉 예산과 유사한 성격으로 사용되는데 불구하고 현행 법 조항에 의해서 세입·세출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

러나 현실적으로 세출예산에서 현금출자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이는 예산에 포함시키거나 최소한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방송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물이 많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 주로 노인들입니다. 이들이 실제 내는 금액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 노후안정에 문제가 없다, 국민연금제도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대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은 현재의 납부자들이 연금을 많이 내고도 실제로 적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이 한국통신의 주식을 대단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로 인한 손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은 국민연금에 대한 주식 및 채권보유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문제점을 공개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약분업 이후 오히려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병원을 다녀보면 분업 이전보다 실질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과 약국이 사실상의 담합을 하여 특정 약국과 특정 약품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보건복지부장관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파악을 하셨다면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열린금고사건은 동방금고사건의 재판과 같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권력형 부정대출의혹이 있는 한빛은행사건과도 매우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허다한 불법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지 못하고 불신만 가중시키고 의혹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는 이런 계속되는 사안에 대해서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습니까? 또한 특별검사법을 보면 특별검사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해서 지불하되 법무부소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우리나라 사회정의의 실현자요, 국가기강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 검찰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당연

히 특별검사를 요구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법무부장관은 특별검사에 필요한 예산을 앞으로 법무부의 상용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이러한 특별검사의 활용을 통해서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고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을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질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속개해서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식사까지 겸하였으므로 오후 8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의시간에 늦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20시19분 계속개의)

○委員長 張在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院長 李種南 감사원장입니다.

먼저 李在昌 위원님, 孫泰仁 위원님께서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결산검사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李在昌 위원님께서 국무총리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도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와 회계검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은 각 국가의 정치제도와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 각각 달라서 행정부 소속형, 의회 소속형, 독립기관형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과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 등에 대한 회계검사기능은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의 결산검사 및 회계검사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문제는 헌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생각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행 헌법하에서도 감사원은 정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및 회계검사결과를 수시로 국회에 보고하여 왔고, 국회의 효율적이고 질 높은 결산 및 회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감사원 기능 가운데 회계검사기능만을 분리하여 국회에 이관할 경우 국회가 실시하는 회계검사와 행정부 자체에서 실시하는 직무감찰의 분리로 인한 감사업무의 중첩으로 수감기관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폐해가 우려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회의 예산과 결산심의에 보다 기여하는 감사원 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金文洙 위원께서 서면으로 답변요청하신 공기업의 보험가입관련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감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앞으로 정부투자기관 및 주요 공적단체 등 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할 때 당해기관의 재산에 대한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리베이트의 내용과 사용실적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일반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종합적인 보험리베이트 실태파악과 함께 그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朴鍾根 위원님께서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과 감사원의 대규모 성과감사 실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정부예산은 품목별예산편성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부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 중심으로 정부운영시스템을 혁신하는 목적으로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금년도부터 국립국악원 등 16개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운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그동안 정부예산에 대한 합법성 감사를 실시하는 외에 정부 주요정책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감사기법을 도입하여 경부고속전철사업,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집행실태나 정부투자기관 등의 경영평가와 구조조정실태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실태 등에 대한 감사 시에는 일반적인 적법성 감사와 아울러 3년 내지 5년 정도의 일정기간에 걸친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비교 분석하고 필요 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으로 예산집행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의 효율성 감사 내지 성과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감사결과를 연도별로 결산

검사보고서 또는 감사연보 등의 형태로 국회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원은朴 위원님의 고견을 명심하여 정부예산이 성과주의예산제도로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예산집행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더욱 폭넓고 심층적으로 실시되고 국회에 보고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주요감사활동 시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金容鈞 위원님께서서는 정부의 타성적 예산편성과 관련된 회계검사과정에서 관련공직자에 대한 타성적 예산편성이나 방만한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점검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감사원은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편성과 그 집행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는지, 또는 예산사업의 방만한 계획과 추진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예산이 낭비된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성적 예산편성이나 낭비적 예산집행이 반복되는 사유는 예산편성 시 소요액을 막연히 추정하거나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고, 또는 예산획득이 용이한 비목으로 예산을 확보한 후 방만하게 집행하거나 또한 예산을 불용처리할 경우 차년도 예산획득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불요불급한 용도라도 당 연도에 예산을 남기지 않고 집행하려는 관행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산 낭비사례에 대하여는 관련 공직자를 문책하고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중단시키거나 개선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점에 더욱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李在昌委員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지금 검사 또는 감사기능이 소극적인 그런 내용밖에 사실 국회에 보고가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정책적인 감사까지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국회에 결산보고서를 내실 때 부록으로라도 각 정책감사를 하신 그 내용을 부속서류로 보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監査院長 李種南 예, 저희가 감사한 사항을 빠뜨리고 보고 드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李在昌委員 아니 이용이 어떻다, 전용이 어떻다, 불용액이 어떻다 하는 그런 계수위주의 그런

결산감사내용이 아니고 적어도 주요정책사업이든지 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것을 해서 앞으로 결산보고를 하실 때 부속서류로 그것을 반드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監査院長 李種南 예, 알겠습니다.

○金文洙委員 아까 제가 질의한 가운데서 한국자원재생공사 吳亨根 사장의 보험 리베이트관련 비리를 적발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인 자원재생공사 吳亨根 사장은 감사원의 김영빈 부감사관과 문답한 그 진술 내용, 자기하고 문답하고 자인한 도장을 찍은 내용에 대해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과정에서 시종일관 “그것은 잘못된 말이다, 당시에 착각과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찍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회의를 오래 끌고 공전된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감사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문답을 할 때 마지막에 진술을 하고 난 다음에 도장을 찍을 때 강압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 서류에는 잘 읽어드리고 확인하고 도장찍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본인은 전면부인을 하고 있는데…….

○監査院長 李種南 저는 사후에 보고 받았습시다. 마는 감사라는 것은 어디 수사처럼 밀실에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사무실 또는 그 청사에 방을 하나 빌려서 하기 때문에 강압적인 조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면 강압적인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이 감사원장님 답변이시지만 본인의 주장은…….

○監査院長 李種南 이사장이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해서 저희가 감독기관인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인사조치도록 인사에 반영하도록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런데 인사에 반영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가운데 본인이 자술하고 도장찍은 것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監査院長 李種南 그것은 어떤 범죄사건의 경우에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부인하고 무죄라고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면 감사원장님께서 실제로 올해 6월14일부터 7월7일까지 다 감사를 해서 부당한 것을 지적을 하고 다 본인 자술 받았는데 지금 와서 다 부인하고 사표 안내면 장관이 해야 될 일



을 안 하고…….

○監査院長 李種南 그것이 사표 대상인지 아닌지는 환경부장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金文洙委員 어떤 문책도 없다 그러면 가만히 있다?

○監査院長 李種南 아니요. 저희가 해임을 통보하는 수가 있고 이 경우는 아까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인사조치하도록 그리고 아까 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잘못된 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친척을 동원해서 자격이 없는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했다든지, 그러면 보험법 위반이니까요. 자기는 자기 친척이 동생인가 누가 와서 부탁을 하기에 합법적으로 도와줘라 하고 지시는 했다, 그러나 그것이 불법인지는 몰랐다 이렇게 변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렇습니다.

○監査院長 李種南 그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가 해임요구를 한 것은 아니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인사조치를 하도록 통보한 것입니다.

○金文洙委員 아무 인사조치가 안되고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 감사가 끝난 것이 7월7일에 끝났으니까…….

○監査院長 李種南 7월7일에 끝났어도 저희가 통보한 것은 아마 8월 이후에 갔을 겁니다.

○金文洙委員 8월 이후에, 그러면 녀 달이 지나고…….

○監査院長 李種南 팔구월쯤 갔을 텐데 사후에 저희가 꼭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환경부로부터 어떤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金文洙委員 원장님 이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나 하면 저희 국회는 독자적인 무슨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현장에 나가서 서류를 검증하고 이런 과정이 별로 없거든요.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한다든지 또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국정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놓고 볼 때는 감사원이 감사해도 아무 변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다시 지적하고 또 안되니까 상임위때 또 이야기하고 계속 기회있을 때마다, 오늘 또 예결위에서 계속 해도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이 정부의 굉장히 큰 문제가…….

○監査院長 李種南 어떤 결과가 있을 겁니다. 좀

기다려 봐주십시오. 제가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고 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이 문제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감사원이 감사를 했으면 그 사후에 과정을 점검을 해서…….

○監査院長 李種南 사후에 반드시 점검을 합니다.

○金文洙委員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계속 그 감사결과서를 보고 우리는 국회에서 또 떠들고 떠들어도 변화가 없으니까 계속 반복하게 되고 이 국력의 낭비가 얼마나 이겁니다.

○監査院長 李種南 감사해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사후에 확인을, 조치가 됐는지 안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조치가 안됐으면 왜 안됐는지 저희가 또 챙기고 안되면 그 다음 번에 감사 나가서 반드시 또 문책하고 책임을 추궁합니다. 더욱 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열심히 그런 것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결과를 정기국회 끝나기 전에 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院長 李種南 알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감사원장께서는 아까 우리 李在昌 위원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 중심의 감사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꼭 국회에 부록이라도 붙여서 통지해 주도록 위원장으로서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재정경제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李在昌 위원님이 주신 질의입니다.

국내 여건으로 볼 때 경제위기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시면서 정부는 국민에게 솔직하게 경제의 실상을 설명해 주고 협조를 구하면서 그 동안의 구조조정대책의 성과 그리고 현 경제위기상황에 대한 극복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상황은 어렵습니다. 저희 경제2기팀이 8월에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거시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좋습니다마는 거시경제지표를 받치고 있는 이른바 기초부문에 해당하는 분야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금융구조조정이 아직 마무리 안되어 있고 대우자동차를 포함한 부실기업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고 특히 지역간 산업간 소득계층간 격차가

차이가 벌어짐에 따라서 지표경제와 실물경제의 괴리현상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가 4대 부문 개혁정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유가가 계속되고 있고 반도체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또 대만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자금시장, 외환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는 외부여건에 추가해서 국내적으로는 4대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회의가 아직 남아 있고 특히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증권시장이 침체되고 경제불안심리가 증폭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와 같은 상태로 방치했을 경우 내년 1/4분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되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고통스럽더라도 정부가 국민한테 약속한 4대부문 개혁 특히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을 금년내 마무리짓고 내외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체감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을 쓰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판단하에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997년 IMF 당할 때와 지금과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고 다만 저희가 방심하고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하고 구조조정을 소홀히 할 때에는 그와 같은 위기를 다시 맞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구조조정성공에 대해서는 보시는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3년 동안 모든 국민들이 합심 노력해서 우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단순히 지표상으로 성장, 물가, 고용, 외환보유고, 국제수지 이런 지표뿐만 아니라 우리 체질이 많이 강해졌고 특히 시장의 힘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힘에 의해서 금융과 기업이 퇴출되고 살아남고 하는 인식을 넓혔다고 하는 것도 민주적 시장경제 운영의 큰 성과라고 저희는 풀이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어떻게 하면 남은 기간 동안에 특히 빠른 기간 동안에 뿌리 내리도록 함으로 해서 우리 경제에 시장경제기능이 확실하게 바로 서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을 높이는 데 매진해야 되겠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정책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李在昌 위원님은 사회기강 해이현상 특히 금융부문의 여러 가지 사고와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동방금고 이후 최근에 일어난 열린금고 등 이른바 금융기관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여기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적시된 부문에 대해서는 철저한 금융감독원의 자체조사를 거치고 필요하면 바로 검찰과 협조해서 일벌백계하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동시에 이것을 그때그때 사고가 났을 때 뒤치다꺼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예방적인 철저한 감사와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현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공적자금관리특별조치법과 같은 법적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동안 공적자금 사용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적기시정조치제도에 따른 엄격한 요건과 민간회계법인에 의한 자산부채실사 등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조성·집행하고 있고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공적자금백서를 통해서 투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인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될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적자금의 투입요건을 아주 투명하고 명료하고 객관화시키고 투입된 공적자금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회수노력에 획기적인 제도와 운용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철저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적자금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관련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제정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내에서 정책협의를 통해서 법의 제정에 대한 기본입장은 합의하셨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어서 공적자금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확보하면서도 공적자금 운영에 탄력성을 같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좋은 법안이 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결산심의를 위해서 조기결산체제를 구축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총리께 질

의를 주셨고 朴鍾根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산서를 국회에 조기에 제출해서 심도 있는 결산심의가 이루어지고 바로 다음해 예산편성과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재정경제부는 결산서의 작성수단인 재정정보시스템의 운영안정화를 도모하고 있고 2001회계연도 결산부터, 그러니까 2002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를 국회에 조기제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저희는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또 감사원의 감사과정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과 협의해서 최대한 결산서 제출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해서 결산과 예산의 연계심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국회의 결산감사 기능강화와 관련해서 국무총리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국회로 이관하는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총리께 주신 질의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각 소속부처에서 독립해서 자율성을 갖고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정부정책에 대한 연구와 평가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회로의 이관문제는 연구기관의 연구활동범위, 연구기관의 자율성 등의 측면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 균형재정달성이라는 저희 재정계획의 차질없는 기능과 국가채무축소를 위한 방안,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상환 사용명문화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申榮國 위원님께서도 국가채무감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으므로 같이 묶어서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이후 높은 경제성장에 의한 세수증대 및 재정긴축기조에 힘입어서 재정적자규모가 예상보다도 빠르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98년에 GDP에 대한 적자규모가 4.2%로써 18조8,000억원이었습니다. 99년도에는 경기가 활성화되고 세입이 순조로움에 따라서 적자규모는 98년도 18조8,000억원에서 13조1,000억원으로 줄었고 GDP에 대한 적자비율은 4.2%에서 2.1%로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시 적자규모가 10조 이하, GDP에 대한 적자재정비율은 아주 낮은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와 같은 실적에 힘입어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재정적자규모를 1조원 적자, 그리고 GDP에 대한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0.2% 마이너스, 사실상 거의 균형수준으로 가도록 하는 전제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정건전화 노력을 계속하면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공적자금 회수노력을 최대한으로 기울여서 공적자금으로부터 오는 최종적인 재정적자의 부담을 극소화하는 노력도 같이 경주해 나갈 생각입니다.

세계잉여금 사용문제는 국가채무의 축소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습니다만 경제의 상황에 따라서 재정수요의 충족과 건전재정 조기회복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적절히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축소로 바로 법제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일문일답에서도 주셨습니다만 金文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참고로 작년도 세계잉여금 2조4,000억원 중 추경재원으로 사용을 승인하여 주신 8,000억원을 제외한 1조6,000억원 전액은 우선 국가채무 상환, 이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할 것으로 기획예산처와 협의했고 내일 국무회의에 그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서 시민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세자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예산편성 시 총사업비 5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먼저 하고 사업을 추진했고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예산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회계관계 공무원이 법령이나 예산을 위반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제기하신 납세자소송제도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결론을 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鄭哲基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채권국과 채무국 중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총리께 주셨습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말 기준으로 지방정부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것입니다. 107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22.3%이며 국가채권의 규모는 134조1,000억원으로 GDP의 2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 107조7,000억원에 비해서 작년말 현재 국가채권은 134조1,000억원으로서 순채권은 26조4,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ECD가 발표하는 OECD회원국 국가채무에서는 우리는 핀란드, 노르웨이와 함께 3개 국가재정채권국으로 구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정부의 경기예측이 부정확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이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세계화의 진전, 국제자본이동 등으로 인해서 대내외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경기예측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솔직히 보고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예산편성할 재작년 11월·12월에서 세계 국내외 어느 연구기관 쳐놓고 정부가 제안한 2%의 실질성장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기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거시경제 즉 재정과 금융정책의 추진을 통해서 최소한 2%의 실질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받았습시다마는 작년에 2%의 경제성장이 무려 10.7%라는 그런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거시경제종합점검회의를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으면서 가능하면 국내외 연구기관을 통해서 보다 더 정확한 경제예측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 2001년 경제전망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출연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또 기타 관련 금융기관으로 구성되는 팀을 만들어서 총량경제예측반 또 재정금융반, 산업반, 사회복지반 이렇게 반을 구성해 가지고 이미 저희가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경제전망을 가능하면 현실에 맞추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鄭哲基 위원님께서서는 간접세 비중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간접세 비중을 낮추는 세제개편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간접세 비중이 98년에 비해서 99년에 증가한 것은 98년의 경우 고금리에 따른 이자 소득세의 증가로 직접세의 세수가 증가한 반면 99년에는, 작년에는 금리가 안정되고 특히 봉급생활자에 대한 좀더 과감한, 1조4,000억원에 이르는 세부담 경감조치 등으로 인해서 직접세가 감소한 반면 경기회복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관세 등 간접세가 증가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도 간접세 비중의 축소조정 등을 통해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해 상속증여세 과세를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 실시 등을 통해서 직접세 비중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가전제품 등 대중 소비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폐지 등을 통해서 간접세의 비중을 축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무채산으로 인한 국세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현재도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서 채납자의 재산을 엄격히 조사하고 있고 무채산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는 징수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국세청 조직을 전면 개편하면서 전국 세무서에 채납정리와 징세를 진담하는 조직을 기존의 1,600명에서 2,500명으로 확대한 바 있고 지방국세청의 은닉재산추적을 위해서 채납추적전담반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징수액 비율이 98년 14.8%에서 99년에는 14.1% 그리고 금년에는 1월에서 10월까지의 실적입니다마는 10% 수준으로 낮추어 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철저한 재산조사를 통해서 징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申榮國 위원님이 에너지예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에너지절약 비축 및 대체에너지개발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부처인 산자부장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申榮國委員 산자부장관 답변은, 오늘 산자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했는데 전년대비 10%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가 작년에 한 150억불 소비가 되어 외화가 나갔는데 금년에는 350억불 정도가 예상되는데 그러면 작년도보다 배가 더 지

금 에너지 외화가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좀 적극적이고 범정부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산자부 자체만 가지고는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가 아까 재정부장관에게 아무래도 범정부적으로 해서 작년대비 외화가 배로 나갔는데 예산은 그런 비율로 한다면 예산도 배가 되어야 되는데 10%는 그 수치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에너지절약대책 또 비축대책, 대체에너지개발대책 이것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알겠습니다.

고유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석유비축과 에너지절약 특히 대체에너지개발 등 에너지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시 특히 석유비축, 유전개발, 에너지 절약 등 고유가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의 배정에 중점을 두었고 이와 같은 그러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내년도 에너지특별회계예산을 전체 평균 재정증가율의 두 배수준인 12.9%를, 약 13%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에너지수입금액의 급속한 증가에 비해서는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申榮國委員 그것 말고 본 위원에 대한 답변차례입니까?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예.

○申榮國委員 그러면 빠진 것 같은데, 아마 장관이 안 계실 적에 질의해서 몇 개 빠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장관께서 금고가 줄줄 새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죄송스러운 말만 가지고 되지를 않고 무엇인가 내일 모레 또 그런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생기지 않게끔 한다든지 금융감독원이 저것이 있으나 마나한 감독원이니까 차라리 정부 공무원으로 해서 금융감독청을 만들든지 이렇게 좀 책임이 있어야 되지, 사고 나면 목숨 끊고 또 사고 나면 해외로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런 감독원이 있으나 마나해서 장관도 보셨겠지만 을지로 6가에 봉제하는 사람들이 이자 몇 푼 더 받으려고 열린금고에 넣었다가 열린금고가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내 돈 내놓으라고 막 소리 지르는 장면 텔

레비전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장관과 가까운 사람들도 거기에 상당수 있다고 보았을 적에 1,000만원, 1억, 2억, 이 목숨보다 더 귀한 돈들을 갖다가 나라를 믿고 또 재정부장관을 믿고 감독원을 믿고서 열린금고에다 예금을 해놓았는데 갑자기 저렇게 되어서 돈을 못 찾고 자기도 부도나게 생겼고 이런 것이 동방금고가 있고 또 이번에 열린금고가 있으니까 한달 후에 또 무슨 닫힌금고가 나올는지 누가 이것을 아느냐, 그냥 사과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고 고민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제가 사과만 드린 것이 아니고요. 오늘 점심 때 그렇지 않아도 금융감독원장하고 이 문제 때문에 같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특히 무늬만 벤처인 사람들이 금고를 인수한 그러한 신용금고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밀착조사를 함으로 해서 잘못된 점은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적시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금융감독원의 역할과 기능, 특히 건전성 감독에 대한 그러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자체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에 대해서는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특별팀이 마련되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도 같이 강구해 나가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申榮國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금융감독원장하고 점심을 드시면서 얘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점심을 드시기 전 2개월, 3개월 전에도 금융감독원에는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손을 놓은 사람이 오늘 재정부장관하고 점심 먹었다고 해서 내일부터 달라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은 간판을 내리고 그것을 갖다가 행정부처로 해서 감독청을 만들든지 아니면 금융감독원을 빼놓고 재정경제부가 직접 그 감독역할을 하든지 해야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에 몇 달 되었는데도 다 사고 났는데도 해결 못한 것을 다시 또 금융감독원보고 감독하라고 해봐야 어느 국민이 믿고서 하겠느냐?

차제에 아예 금융감독원을 개편을 해서 정부산하의 어떤 청으로 만들든지 공직자가 목숨을 걸고 감독을 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지 공직자도 아니고 하다가 유명을 달리고 해외 떠나버리고…….

그날 누구입니까? 金 누구 부행장보인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장면 보니까 아주 얼굴 번들번들하게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 그런 감독원으로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점심 먹고 한 것 가지고 내일부터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질 것 같으면 벌써 달라졌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독원장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재정경제부장관 나아가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내일부터는 똑같은 사건이 생기지 않게끔 책임지고 하겠다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예, 알겠습니다.

○申榮國委員 금융감독원장 와 있어요?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안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오늘 점심 때 만난 것은…….

○申榮國委員 그것 얘기할 상대가 안 되고 여기 와서 얘기해 봐야 내일 모레 또 할 테니까 재경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정부가 책임을 지고서 금고가 금고답게끔 국민이 금고에다 돈을 안전하라고 넣어 놓았는데 전부 질질 다 새 버리고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점심 때 만난 것은 첫째로 제가 많은 예금하는 분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빈발하고 있는 금융사고에 대해서 너무 허탈해 하고 실망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제가 금융감독원장 하고 몇 사람하고 같이 기자간담회 형태로 해서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계류되어 있는 문제를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고 철저하게 추궁할 것이냐 또 제도개선 전이라도 이것을 어떻게 사전에 예방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한테 소상하게 밝히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신용금고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국무회의에 올라 갑니다마는 신용금고는 신용금고법을 고쳐 가지고 저축 형태로 운영해서 좀더 일정 규모 이상의 신용금고 저축분에 대해서는 사외이사제도 도입 의무화 등을 포함해서 제도개선작업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정부는 관계기관 간에 협의를 해서 이와 같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적 또 사후점검적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申榮國委員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노력한다는 의지는 이제 제가 상당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정도의 재경부장관의 의지라면 좀 안심해도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단기적인 대책은 내일부터 금융감독원장과 재경부장관 공동명의로 수습을 해주시고 장기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을 개편해 가지고 정부조직안으로 해서 청을 만들든지 공직자가 하계끔 그렇게 해주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다음에는 李根鎭 위원님 주신 질의입니다마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세출예산의 불용률이 높다고 지적하시면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한 선별적 예산지원 강화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중소기업청장이 좀더 생생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權琪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입니다.

불납결손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축소계획을 물으셨고 신고분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등 결손비율 증가이유와 불납결손액을 축소하기 위하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99년 중 국세 결손비율은 6.3%로 외환위기 이래 경제적 어려움으로 징수노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98년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적하신 신고분 소득세의 결손비율이 증가한 것은 자영사업자의 부도, 폐업의 증가에 기인하고 상속세의 경우는 그동안 적체된 장기미결자료를 작년엔 대폭적으로 정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불납결손을 축소하기 위해서 지난해 국세청 조직을 전면 개편하면서 체납정리와 징세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했고 체납자 및 결손자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는 등 금융기관과 국세청 간의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소액체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납부, 카드론납부 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고 결손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는 은닉재산을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경매방법의 다양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면서 성과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지방국세청에

채납추적전담반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출국금지 조치도 같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불납결손 비율이 지난해 6.3%에서 금년 10월까지 3.9%로 대폭 축소되고 있습니다.

고액채납자 명단공개는 납세의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해서 전면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채납자에 대해서 신용정보기관에 통고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등 채납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물출자를 세입·세출예산에 포함시키거나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金學元 위원님 또 金容鈞 위원님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한꺼번에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시장 안정과 출자기업체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현물출자법, 금산법 등 관계법률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가 추진되었으며 이는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제도로 운용되는 현금출자와는 달리 현물출자법에서는 예산 외로 현물출자를 운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현금출자는 재정자금을 신규로 투자하는 데 비해서 현물출자는 기존의 국유재산 규모의 변동 없이 재산의 구성만을 변동시키는 것으로 출자성격이 다르고 예산에서는 편성시점에서 출자액을 현금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출자시점보다도 통상 1년 정도 앞서는 편성시점에서 출자대상 재산의 가격과 수량을 정확하게 평가·산정하여 계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서 현물출자를 예산 외로 허용하고 있는 현행 현물출자법령에 따라서 출자를 한 것입니다.

현물출자시 사전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국회동의 절차가 필요한 국가채무부담행위, 채무보증행위 등은 신규로 국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것임에 반해서 현물출자는 단순히 국유재산의 구성만 변동시키는 것이므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물출자분의 회수와 관련해서는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에 대한 출자분은 회수목적이 아니며 증자를 위한 것이고 부실금융기관 출자분은 향후 경영정상화를 통해서 최대한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權琪述 위원님께서 한국…….

○權琪述委員 잠깐요, 장관님!

지금 현물출자 관계 장관님 말씀이 예산회계법이나 현물출자법이나 다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현물출자한 것은 공적자금을 가지고 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해준 것하고 성격이 같기 때문에 현물출자 성격이 일반 다른 때의 현물출자하고 조금 다릅니다.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출자재산의 변동이 없으면 그것은 현물출자로서 국가재산이 동일가격이고 국유재산이 변환한 것이니까 그것은 현물출자가 가능하지만 이번 공적자금 투자와 같이 부실금융기관에 지원해준 것은 같이 취급을 할 수가 없다, 국가에 출자한 것도 아니고 개인 금융기관, 앞으로 출자회수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도 예측할 수 없는 개인 금융기관에 이것을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 국가에 출자한 상황과는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같이 취급하지 않고 앞으로라도 이러한 상황이 올 것 같으면 국회의 동의를 받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유념하겠습니다.

權琪述 위원님 다음 질의는 한국전기통신공사…….

○金學元委員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현물출자가 그냥 현물출자가 아니라 지금 자그마치 10조2,069억원의 현물출자가 금융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투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공적자금 투입규모와 같이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0조원을 그동안의 공적자금 투입규모로 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120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金學元 위원님, 10조 2,000억원의 현물출자는 공적자금 백서상의 110조에 이미 반영을 시켜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金學元委員 그러면 109조 몇천억이라는 그 속에…….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그렇습니다. 그 속에 10조2,00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金學元委員 10조2,000억의 현물출자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그렇습니다.

○**金學元委員** 예, 알겠습니다.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통신사업특별회계, 한국 전기통신공사의 차등배당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균등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한전의 경우에는 정부지분에 대한 차등배당을 함으로 해서 한전의 막대한 설비투자 재원조달을 바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 그리고 가스공사나 담배인삼공사의 경우는 주가가 하락했을 때 소액주주에 대한 다소의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차등배당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權琪述 위원님 말씀처럼 가능한 한 주주에게 균등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金學元 위원님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경제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등 무리한 재정정책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경청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1999년도 우리의 재정운영은 참 성적이 좋습니다. 경제살리기에 앞장서는 예산을 쓰면서도 중소기업 살리고, 실업자 대책 쓰고, 사회복지체계를 구축하면서도 경제가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재정적자는 당초 예정보다도 대폭적으로 줄어서 이른바 공적 자금 투입, 경기회복의 활성화, 세수 증대, 그래서 국가채무 증가의 절감 이런 선순환구조를 가지고 운용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걱정하신 이른바 건전재정의 중요성, 그리고 재정 개혁을 통한 재정의 조기 건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그와 같은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學元委員** 그와 같은 선행지표가 나오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호황적인 국면에도 원인이 물론 있겠지요. 저도 그 점을 전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재정적자 확대라든지 공적 자금의 무리한 확대를 통해서 약간 무리하게 진행된 결과로 나온 수치지 그 수치 하나만 갖고 경기가 호황이라고 그 경기를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로……. 따라서 앞으로 자활적인 능

력을 가지는 경기 발전을 이룩하려면 무언가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을 묻는 것입니다.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자생력을 갖는 시스템과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전제되는 것이 역시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불확실성은 제거하고 하루 빨리 우리의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금시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면서 수많은 국내 투자자들에게 좀더 안정된 심리를 갖도록 하는 요체라 생각하고 그 분야에 역점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金學元委員** 너무 초기에 극약적 처방을 하다 보니까 자활적 능력이 자꾸 쇠퇴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알겠습니다.

재정적자감축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면서 후속조치가 없는 것이 아니냐, 국가채무와 함께 공기업 부채에 대한 대책을 같이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재정적자감축관련 특별법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합의해서 제정 추진하기로 했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기본구상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채무의 감축에 대해서는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공기업 부채와 관련해서는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채를 제외한 정부투자출자기관의 부채가 2000년 금년 6월 현재 93조 원입니다. 그 중 대부분은 도로 댐 발전소 산업공단 등 국가 기간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써 불가피하게 증가된 면도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전력산업 민영화 내지는 발전계획을 개편 추진하는 것도 한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채 규모가 31조가 넘습니다.

이대로 전원사업을 한전이 내외로부터 돈을 빌려서 운영한다면 2006년 되면 52조, 2011년 되면 거의 80조, 90조로 한 회사의 부채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전구조조정에관한법률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하고 있고 한전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투자출자기관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 토지 등 부동산 매각과 수익성 강화 등을 통해서 부채를 상환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시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정부도 보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회계제도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이미 금년 6월까지 실시했고 금년 2월부터 정부 및 민간부문의 재정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정부회계기준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 회계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 검토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정부회계 기준안 마련, 자동회계처리시스템 개발, 회계공무원 교육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거쳐서 당초 계획대로 2003년부터는 새로운 정부회계 제도가 차질 없이 도입되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金容鈞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申榮國委員 조금전에 재정부장관께서 존경하는 金學元 위원님 질의에 작년 99년도 경제는 선순환했다, 중소기업도 많이 지원되었고 여러 면에서 99년도는 상당히 성공한 선순환한 것처럼, 오늘 국회와서 상장이라도 달라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아까 장관께서 모두에 지금 경제가 어렵고 내년 1/4분기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전제를 한 다음에……. 만약 그렇다면 왜 장관 말씀따라나 99년도 작년에 선순환해서 잘 했더라면 오늘 이렇게 되지 말았어야 되지요. 작년에 잘못했기 때문에 금년 경제가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어제 잘못된 것이 오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장관 말씀따라나 국회 와 가지고 99년도 선순환했고 잘 되었다, 상장이라도 달라는 것처럼, 장관! 그렇게 잘 되었더라면 금년에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렵습니까? 작년에 IMF 극복한다고 해서 팽창예산 쓰고 재정적자 일으키고 중소기업 한다고 해서 벤처기업 거품 일으켜 가지고 30만원짜리 주가가 지금 1만3,000원 가는, 이래가지고 전부 국민들이 거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장관이 국회에 와 가지고 작년도에 선순환하고 잘 한 것이라고……. 논리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제가 말씀드릴까요?

○申榮國委員 예.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金學元 위원님 질의는 작년에 재정운영이 문제가 많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작년에 재정운영 아주 잘 했고 결과적으로 재정에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 운영하다 보니까 경제성장이 당초 예상보다도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여기서 세수가 많이 증대되어서 결과적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재정을 통한 경제 살리기, 경제의 예상보다도 더 빠른 회복, 세수의 증대, 재정적자의 감축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가져온 점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그랬는데 왜 금년 지금 3/4분기, 4/4분기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경제가 어려워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우문제가 작년도 7월에 터져서 8월부터 워크아웃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체적인 경제에 주름살을 많이 주었고 작년에 우리 경제가 너무 빠른 속도로 회복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통분담 하려고 하는 긴장감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해야 할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을 적시에 마무리짓지 못한 그러한 여파가 금년 상반기까지 넘어오고…….

○申榮國委員 알았어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지금 작년에 경제성장 속도가 너무 빨랐다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팽창예산을 하고 팽창재정을 하고 소위 거품경제를 일으키고 또 99년도 예산을 하반기에 쓸 것을 상반기에다가 육십 몇 프로 갖다 쓰고 이런 것 때문에 거품경제가 생겨서 이제 거품이 없어져서 이런 모습이 나온 것 아니냐 그런 것을 가지고서 아까 우리 金學元 위원 말씀따라나 자생적으로 클 수 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거품을 일으켜 가지고 오늘 경제가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지금 장관 말씀따라나 재정정책이 잘 되고 재정이 그렇게 성공했다면 오늘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단지 대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그것은……. 대우만 아니라면 이런 일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국회에 와 가지고 재정정책을 잘 세웠는데 경제가 이렇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여기 있는 위원들이나 많은 분들이 볼 적에 듣는 사람의 생각을 하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경제현상은…….

○申榮國委員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는, 장관이 보는 관점은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와 가지

고 위원들이 그렇게 보면 아, 그런 부분도 있다 이래야지 거품을 일으켜 놓고서는 재정정책을 잘해서 정부에서 잘해서 그렇다, 그러면 작년에 정부에서 재정팽창 해 가지고 거품 일으켜 놓고 지금 거품이 꺼지니까 30만원 짜리 주가가 1만3,000원까지 가는 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보십시오.

작년에 예를 들어서 벤처가 거품을 일으켰다고 말씀하시는데 벤처나 일반 소비가 재정정책을 통해서 작년에 민간소비를 이렇게 부추긴 것은 아닙니다. 벤처도 현재는 일부 얼룩, 무늬만 벤처인 사람들이…….

○**申榮國委員** 알았어요.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재정정책 관계없이 저절로 경제성장이 되면 재정정책으로 성장의 속도를 낮추어야 되지요. 그래야 국가경제가 안정성장 할 것 아닙니까?

장관 말마따나 재정정책이 없어도 경제성장이 잘 된다, 그렇다면 재정정책을 오히려 더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잘했다고 자랑하면 됩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저도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벤처문제를 놓고도 전부 거품이다, 잘못되었다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현재 벤처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간 조정계획 결재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일부 무늬만 벤처인 사람들이 벤처家を 위장해 가지고 금융과 연계된 그런 문제는 엄청나게 큼니다. 그러나 벤처산업은 우리의 새로운 성장 내지 우리 발전의 엔진으로서 건설한 벤처는 계속 육성시켜야 합니다.

○**申榮國委員** 그러니까 작년도에 벤처를 육성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한 말씀 있어 가지고 지금 전체 벤처 등록이 8,000개입니다. 무늬만 벤처 모자를 씌워 가지고 벤처도 아닌 것을 벤처 모자 씌워 가지고 정부에서 전부 지원해 주어 가지고 지금 1만 3,000원짜리가 30만원까지 가 가지고서 전부 다 그렇게 거품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벤처다운 벤처만 지정을 해 가지고 벤처만 키워야 되는데 무늬만 갖다 붙이고 벤처 모자만 씌워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30만원짜리가 1만3,000원짜리로 되어서 퇴직금 2억, 3억 받는 사람이 30만원에 했다가 지금 1,000만원

으로 거지가 된 사람들, 지금 이런 방송을……. 지금 장관 답변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申榮國 위원님!

실리콘 벨리의 경우도 벤처산업이 일어날 때는 꼭 몇 번씩 겪어야 할 과정입니다. 그것을 일부 무늬만 벤처인 사람이 나쁜 짓 한 것을 생각하고 우리 벤처산업정책 자체가, 전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申榮國委員** 벤처산업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 등록된 8,000개 벤처기업 중에서 실제로 벤처다운 벤처기업은 숫자가 얼마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벤처 근처도 못 간 사람을 모자를 씌워 가지고 정부에서 벤처 벤처, 각 부처 또 대통령, 모든 정부에서 전부 벤처 벤처 하니까 전부 다 1만 3,000원 짜리밖에 안 가는 것을 30만원을 주고 사 가지고서 이렇게 벤처 열풍을 일으킨 것 아니냐, 그러면 벤처다운 벤처를 발굴해 가지고 키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벤트화, 전시화,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갑자기 벤처 벤처 해 가지고 벤처답지 않은 것을 8,000개씩 등록해 가지고서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바람에 국민들은 정부에서 하는 것을 믿고서 소위 코스닥에 투자를 했다가 거지된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委員長 張在植** 장관!

申 위원도 이제 그 정도 말씀하셨고 또 장관도 의견을 냈으니까, 시간은 없고 그 다음 답변으로 들어갑시다.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네.

金容鈞 위원님이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후 다른 재산이 발견된 경우…….

○**尹榮卓委員** 위원장! 申 위원 답변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 마치 지금 경제가 나빠지는 것이 생각지 못한 대우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고 있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대우문제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정부가 대우에 대한 대처방법이 잘못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 부분을 이야기 안 해요?

또 작년 이때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IMF는 극복했다 한 것 아닙니까? 외화 일부만 차입되어 가지고 외화 부분만 극복했지, 전 경제부문이

극복이 안 되었어요.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지 않고 다 잘 되어 가는데 대우가 일어나 가지고 경제가 잘못 되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요. 대우문제는 솔직하게 우리 정부의 대처방법이 줄릴했다 이 말입니다.

대우 매각에 대한 실패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고 이렇게 넘어가야지 위원 질의에 전부 잘했다고 그러면 뭐하러 이런 밤늦게까지 정책질의하고 답변합니까?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우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다는 말씀이 아니고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이 제때에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이 지연이 되게 된 데는 대우문제도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점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후 다른 재산이 발견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한 사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채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후 결손처분자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합전산망에 수록된 부동산 및 소득자료를 분기별로 확인하고 필요 시 금융기관에 금융자산 유무도 확인하는 등 재산 발견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결과 99년 중 1,742억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147억원의 현금을 징수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의를 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에 대응해서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국회에 제공하는 방안이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는 예산집행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국회에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현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 우선 재정정보시스템이 안정화되는 대로 감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정부 결산서를 국회에 조기 제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정부 결산에 대한 분석·평가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정부회계제도 개편작업과 병행하여 현행 9종의 정부결산서를 1종으로 통합 재편성하는 등 재정집행 실적에 관한 정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보

편화되어 제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결산 시 형식의 불일치에 따라서 결산심의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예산회계에 관한 기본법 제정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예산회계법령상 예산의 형식은 입법과목인 장·관·항과 행정과목인 세항·목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국회에서 의결되는 세출예산명세서에서도 이러한 형식으로 구분되어 있고 예산배정 및 집행 또한 동 형식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서의 작성은 이와 같은 예산의 형식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결산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회계에 관한 기본법 제정 문제와 별도로 빠른 시간 내에 앞당기도록, 늦어도 2003년부터는 앞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李在昌委員** 장관께서 아주 여러 가지 소상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마감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고 또 국민들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불신을 가진 원인은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도 일관성도 없고 또 투명성이 없고 그런 가운데 의혹이 부풀려지고 이런 반복과정에서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우선 과거에 추경 안 한다고 하다가 추경을 했습니다. 또 공적자금 문제도 더 이상 필요없다, 분명하게 국회에 나와서 또 그랬습니다. 또 현대건설에 대한 이번 처리과정에도 정부의 원칙이 도대체 뭐가, 구조조정의 원칙이 뭐가, 우리 장관께서 사실상 현대 계열사들을 전부 독립시키도록 방침을 정해서 구조조정 하면서, 그래서 서로 상호 지원을 사실상 하지 못하도록 정부정책을 밝혔으면서도 이번에 현대건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오히려 그 쪽을 지원해 주어라 이런 식의 연명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라든지 또 퇴출기업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런 정책을 썼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서 한마디로 국민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믿지 못하고 또 정부에서 개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데서 여러 가지 도덕적인 해이, 그로 인해서 사회가 이렇게 서로 뭉칫기에 분분하고 그런 가운데 어떤 경제정책을 쓰더라도 국민 속에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운 바탕이 바로 그 안에 3년 동안 나타난 소

위 부정적 효과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장관께서는 이런 정책을 써서 이렇게 잘 되었고 하지만 그러나 총체적으로 봐서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장관께서 아까 기자회견 언제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빠른 시간 내에 날짜를 잡을 것입니다.

○**李在昌委員** 그러면 이때에 정말 이번 예결위 회의를 통해서 여러 위원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셨으니까 그간에 이렇게 해서 사실 열심히 했지만 이런 점에서 이렇게 잘못되었고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 시점에서 한번 내년도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국민에게 진솔하고 또 국민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회복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위원님 말씀에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李在昌委員** 말씀하세요.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다른 문제는 제쳐놓고 현대 처리문제 이것은 내외투자자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건설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현대건설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의 입장은 일관성을 계속 준수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자구노력에 의해서 문제를 풀지 않으면 현대건설도 언제든지 부도가 날 수 있고, 부도 낼 수 있다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건설 관련 회사 간의 협력문제는, 부당내부거래는 정부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계열분리원칙이라는 정부의 재벌 구조조정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제가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미 공정거래위원장한테 지금 정부의 재벌구조조정 정책과 상충되는지, 부당내부거래가 있는지 바로 조사에 착수해서 그 결과를 발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방침을 왔다 갔다 하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李在昌委員** 그간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장관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부에,

대한 것이야 물론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정말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경제정책이나 재정정책을 확고하게 정부가 밝힘으로써, 앞으로 4대 개혁에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張在植** 다음은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統一部長官 朴在圭** 통일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소관 99년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와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金學元 위원님 한 분만 질의를 주셨습니다.

金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상 각종 사업금액 산출근거, 사업내용 및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통상 전년도에 수립하는 관계로 수립 당시에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곤란하며 기 확정된 사업계획도 남북 관계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99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정부는 남북한 교역 및 경험 지원에 50억 원을 계상하고 대북비료 지원 등 인도적 사업 지원을 위하여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 경상지출 항목에 494억원을, 대북경수로 건설 본공사 대출을 위하여 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 대출 항목에 3,20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99년도에는 대북 경험기업들의 기금 지원 신청이 없었고, 비료 지원도 서해교전으로 잔여 10만t의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예정보다 축소되어 집행되었으며, KEDO와 수출입은행간 용자계약이 당초 예정보다 높은 99년 말에 체결되고 올해 들어와서 발효됨에 따라 자금 대출이 99년에는 이루어지지 못하여 기금 집행실적이 저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學元委員** 그러면 99년 기금 형성할 당시 기금이 2,244억이었지요?

○**統一部長官 朴在圭** 예.

○**金學元委員** 그런데 그 후에 3,400억원 가까이 증액시켜서 5,619억원을 증액했다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북협력기금 3,200억원이 실제와 차질을 빚음으로써 이런 차이가 생겼다 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나머지 5,619억에 대한 자세한 산출규모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금액을 다 합해 보아도 5,600억원은 어렵도 없는데요.

○**統一部長官 朴在圭** 지금 잔여 유용기금이 2,600억 있습니다.

○**金學元委員** 그러면 실지 집행이 전부 합해서 343억 된 것은 맞지요?

○**統一部長官 朴在圭** 작년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學元委員** 그리고 앞으로 이 기금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統一部長官 朴在圭** 금년도에 기 지급되고 나머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60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金學元委員** 앞으로 이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말이지요. 나머지 있는 금액은…….

○**統一部長官 朴在圭** 이 기금은 금년도에 추가되는 기금과 합해서 기금으로서 내년도에 지출하고 또 남는 것은 기금으로…….

○**金學元委員** 내년도에 지출 예상되는 내역들은 무엇입니까?

○**統一部長官 朴在圭** 항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수는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왕래 지원과 문화학술교류 지원, 교역 및 경제 협 사업자 자금대출 및 손실보조, 금융기관 지원자금,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 그것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인도적인 지원사업과 당국 간 합의사항입니다.

○**金學元委員** 그 중에서 주요한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統一部長官 朴在圭** 첫 번째는 당국 간 합의사항입니다. 경의선 철도 도로 등등이고, 두 번째는 이산가족 방문 등등을 포함한 인도적인 지원입니다.

다음은 金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남북협력기금 사용 시 국민적 합의 도출과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국회의 사전 심의와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출연금으로 재원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치고 있으며 사용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기금 사용 시마다 국회동의를 받게 되면 남북관계의 상

황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여 적절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는 중요한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통일외교통상위와 앞으로 구성될 남북관계특위에 사전 사후로 보고하는 등 긴밀히 협조하면서 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북협력기금은 국회동 의와 효력이 동일한 예산 심의를 거쳐 조성되며 국회에서 제정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국회에 운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은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해 국회동 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金學元委員** 국회동 의는 몇 년도부터 얻기 시작했습니까?

○**統一部長官 朴在圭** 국회동 의를 얻는다고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金學元委員** 그러면 국민 1인당 1만원씩 5,000억원 재원 마련한다고 발표하신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統一部長官 朴在圭** 답변 올리겠습니다.

金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통일부에서 국민적 동의 없이 국민 1인당 1만원씩 5,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다고 발표한 것은 신중 인두세를 신설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 5,000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이는 남북한 교류협력 및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도에 예상되는 남북 간 철도 도로 연결, 임진강 공동 수해방지사업, 북한식량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돕기 위한 비료지원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 1인당 1만원씩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출연 규모를 산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별도의 세금을 신설하거나 국민적 부담이 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계획도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金學元委員** 국민 1인당 1만원씩 5,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다고 발표한 사실이 없습니까?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

○**統一部長官 朴在圭** 내년도에 기금이 5,00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1인당 얼마씩 배당한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 張在植 통일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務部長官 金正吉 법무부장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在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 위원님께서서는 최근의 대형 금융비리 사고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또 金容鈞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제는 우리나라와 사법체계가 같은 미국만이 채택하였던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시행한 이러한 특별검사제도는 그동안 시행해 본 결과 막대한 예산낭비와 수사지연에 따른 비효율성이 지적 되었고,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심각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6월30일 근거법이 실효되어 자동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달리 검사가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또한 준사법기관으로 법률상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검사제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 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론적으로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존 형사사법체계의 이원화를 초래할 수가 있고 오히려 사건을 실제적 진실보다는 여론에 따라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 끊임없는 의혹의 제기로 정쟁과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론 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별검사제도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법무부가 상용 예산을 편성해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容鈞委員 특별검사제도가 미국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고,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것이

옷로비사건 그리고 파업유도사건에서 특별검사를 활용해 가지고 상당한 수사의 진전이 있었고 특히 파업유도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검사의 조사 자체가 매우 진실하고 공정하고 실제적 진실에 접근한 것이다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후 옷로비사건에 관해서는 특별검사의 활동이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가 그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서 그 전모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서 수사를 잘못해 가지고 그 잘못된 수사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소를 한 결과 법원에서의 판결은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정한 것이고 진실에 접근한 것이라는 것이 판결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례만 보아도 우리나라에서 주요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가치는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옛날 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별검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얼마가 들건 10억이 들건 20억이 들건 이 제도를 운영해서 국민의 의혹이 풀리고 이 땅에 정의가 선다면 그 예산은 우리 국민이 인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근래 옷로비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특별검사의 수사내용과 일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장관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務部長官 金正吉 지금 옷로비사건에 있어서는 1심 판결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일부 증인에 대해서 유죄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시면 특별검사에서 한 증인에 대해서 세 번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영장을 신청한 그 자체가 안 맞다고 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는 같은 법원에서 다른 반대되는 사람의 증언을 추신해 가지고 그분의 진술은 맞다고 해서 그분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판결을 받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 사람의 증언에 대해서 그때 영장을 세 번 신청했는데 그 사람 증언이 오히려 맞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같은 법원에서 오히려 거꾸로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李在昌委員 지금 장관께서는 특별검사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시면서 우리나라에는 그것이 적합한 제도가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우리나라라

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검사의 역할과 국민들의 신뢰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냐, 옷로비사건뿐만 아니라 87년인가 88년 부친 성고문사건 때에도 검찰이 다루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특별검사를 임용해서 성고문사건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상황이 검찰이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고 또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면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준사법기능을 가진 검사의 미비한 부분을 그런 제도로 보완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왔고 또 국민들의 그러한 사법적 처리에 대한 여망이 아니냐 이렇게 보았을 때 법무부장관께서는 그것을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얘기가 국민 가운데에서 나오며 또 이것이 한두 번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정치공세가 아니라 국민들의 여망을 너무도 많이 접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장관께 그러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장관께서는 일종의 정치적인 의미에서 공세를 취하는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시지 마시고 정말 법과 정의를 실천하는 장관으로서 겸허하게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하고 또 특별검사제보다 더 좋은 보완적인 기능이 있다면 그것이 좋겠지만 현행 우리가 채택한 것으로는 특별검사제가 그래도 검증된 하나의 보완기능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장관께서는 잘 이해하시고 하여튼 검찰이 공정하고 또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데 국민으로부터 추호의 의구심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보다 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務部長官 金正吉** 사실 저도 검찰에 있어 보았고 또 떠나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검찰이 공정해야 됩니다. 그 점은 저도 백 번, 천 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의 충고대로 저희 검찰이 정말 잘 하도록 각별한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李在昌委員** 알겠습니다.

○**金學元委員** 그리고 장관께서 정일순 씨에 대한 영장신청을 했을 때 당초에 세 번이나 기각되었는데 그 후에 같은 법원에서 정일순 씨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났다 이 점에 대해서 대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 점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정일순씨의 영장신청문제는

정일순씨에 대한 혐의유무, 다시 말하면 유죄 무죄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일순씨의 신병을 구속수사하느냐 불구속수사하느냐 하는 법원의 지침을 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뒤에 정일순씨에 대한 재판결과가 유죄로 나왔다고 하는 사실은 그것하고 상호 하나도 상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금 검찰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무죄로 생각하고 있고 특검에서는 유죄로 생각하고 이렇게 자꾸 뒤집어지는 마당에 있어서 불구속수사원칙을 대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수사원칙상에서 볼 때 영장을 신청해서 기각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하고 나중에 판결에 있어서 유무죄가 되는 문제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불구속원칙과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 이 당시 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혐의사실을 이 사람 말이 오히려 맞는 것 같다는 취지의 기각사유가 나왔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든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불구속을 하는 형태의 영장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委員** 영장을 발부한 법관하고 나중에 재판부의 법관은 어떻습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슨 실체가 아니고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말들이 다른 점, 그것이 위증으로 해서 국회에서 고발이 들어와서 검찰이나 특검이나 그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 말이 맞느냐 하는 점이 재판의 전제가 된 사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委員** 그래서 본 위원 말씀은 그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이유를 가지고 그 후에 판결한 재판부의 내용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검찰에서 항소를 제기한다는 것이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法務部長官 金正吉**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불구속 구속의 여부를 가렸던 것이 아니고 그 혐의사실이 맞느냐 안 맞느냐와 같은 답이 소명이 부족하니까 기각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에서는 승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항소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판결을 받아봐야 옳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容鈞委員** 잠시 장관께서 생각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영장이 세 번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지방법원의 제도 때문에 영장담당판사가 따로 있어요. 같은 판사한테 자꾸 올라갑니다. 한번 기각시켜놓으니까 두 번째 오면 체면이 있으니까 또 기각시키고 세 번째 또 같은 판사한테 올려 또 세 번째 기각시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영장담당판사의 경우에는 재판부와 같이 부장급이나 이런 노련한 중견법관이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법원에서 젊은층, 지식과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한 법관에게 영장을 담당시킨 것 자체가 앞으로 제도 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기는 하겠습니까마는 동일한 판사에게 계속 신청을 하니깐 이것이 특별검사와 어떤 영장담당판사의 기의 싸움, 이런 형식으로 그 문제가 발전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과연 이 나라에 특별검사가 필요하나 안 하나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法務部長官 金正吉**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판사 한 사람이 기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영장판사가 둘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한 번 기각하고 두 사람은 돌아가서 두 번 기각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金貞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 위원님께서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정의 방향과 원칙에 대해서 총리님께 물으셨습니다.

총리님으로부터 답변을 위임받았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엄정한 법집행과 공직기강의 확립을 통해서 이완된 사회분위기와 공직분위기를 쇄신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쟁력 있는 국가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정부패의 척결 등 국가기강과 사회기강 확립대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가기강 확립대책은 단순히 공직자들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의 차원을 넘어서 공직사회의 내부적인 자정활동을 강화하고 대다수의

선량한 공직자의 사기진작 등을 통해 함께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자율적 능동적으로 이에 참여를 하여 사회 전 분야의 도덕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기강을 확립합니다. 결국 이러한 것은 국민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총체적인 발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金** 위원님께서서는 검찰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하여 검찰수뇌부의 자진사퇴나 퇴임을 권고 또는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를 총리님께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총리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또 **申榮國**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저에게 하셨으므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제가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貞淑委員** 아침에 제가 질의를 할 때 총리께 이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사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정을 지금 누가 누구를 한단 말입니까?

지금 위에서부터, 청와대부터 무엇이 잘못되어가지고 지금 온통 부정부패에 얼룩져서 온 국민이 불행을 느끼고 의혹에 빠져있는 현실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사정을 합니까? 이래서 총리께 질의를 했습니다.

대통령부터 그 주변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국가통치의 심장부요, 청와대가 어디입니까? 심장부 그리고 또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 청와대 직원들에게서 먼저 부정부패가 나오고 거기에 또 친인척도 걸려있고 거액의 뇌물수수하는 이런 일들이 백일하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검찰은 또 어때요? 검찰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지금 누가 검찰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땅에 떨어진 이 마당에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정을 하려면 먼저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 답변은 슬그머니 빠져나가시고 그 다음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총리로부터 답변을 위임받았다고 하니깐 여기서 답변하세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대통령께 대국민사과를 하시도록 건의를 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렇지 않고 누가 누구를 지금 감히 사정을 합니까? 국민들이 용납 않습니다.

또 공직자들 몇 사람 또 희생양으로 삼겠지요. 또 정치권에서도 몇 사람 희생양으로 삼겠지요. 그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일에 안 속  
아요. 그러니까 이것 답변하시고 그 다음 질의에  
답변 넘어가도록 하세요.

○**法務部長官 金正吉** 그 부분은 제가 총리님으로  
부터 답변을 위임받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총리  
님으로부터…….

○**金貞淑委員** 그러면 답변하지 마세요. 일체 다  
하지 마세요. 위임을 받지도 않아 놓고 왜 와서 엉  
뚱한 말씀하고 시간 낭비하세요. 하지 마세요. 답  
변하지 마세요. 총리께 직접 들겠어요. 이 답변 안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지도 못하고 위  
임도 받지도 못해 놓고 무슨 답변을 합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아니 그 부분, 건의하실 부  
분에 대해서 위임…….

○**金貞淑委員**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이 질의의  
핵심이에요.

법무부장관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자꾸 엉뚱  
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렇  
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국회에 국민들 대표로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국  
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실력이나 인격을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다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책임있는 자리에서 책임있는 답  
변을 하셔야지 위임받았다고 해놓고 그것도 위임  
안 받았다고 그것은 또 무슨 태도입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그 말씀이 아니라…….

○**宋錫贊委員** 장관님, 지금 金貞淑 위원님께서 청  
와대 친인척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친인척  
이 누구인가 소명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法務部長官 金正吉**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  
번…….

○**宋錫贊委員** 지금 金貞淑 위원님께서 청와대 친  
·인척이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  
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친·인척이 누구인지 소명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  
요.

○**金貞淑委員** 본 위원이 지금 청와대를 얘기를  
자꾸합니다. 그것은 가깝게는 아침에 제 질의에 나  
왔어요. 8급 기능직 청소원 얘기 했습니다. 8억 뇌  
물수수했다가 걸려서 구속되었지요. 또 제가 지난  
번 국정감사 때도 운영위원회에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언론보도나 또 여러 가지 수사상에, 신문에 여러

번 났습니다. 무슨 친척이다, 무슨 친척이 연루되  
었다 하는 사건들이 줄줄이 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지 최근에 난 청와대 부정부패사건  
에 친척이 관련되었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  
다.

이 정부 들어와서 모범을 보여야 될 핵심부의  
친·인척이나 가까운 거기 밑에서 일하고 있는 직  
원들부터 자꾸 이런 불순한 일에 자꾸 연루가 되  
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에서부터 막아야 돼요. 하여튼 주변관리를 잘  
못한 것도 그것은 국민 앞에서 사과를 해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는  
데 그것도 제대로 답변 안 하시면서 총리한테 무  
엇을 위임 받아가지고 나왔다고 지금 답변을 하고  
계세요? 저는 답변 안 들은 것으로 하겠어요. 총리  
한테 다시 제가 마지막날 답변 들겠습니다.

○**法務部長官 金正吉**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총리님께 물으신 질의는 金 위원님께는  
제가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金貞淑委員** 답변하지 마시고요. 답변 들어 봐야  
우리 법무부장관께서는 핵심있는 답변을 하실 위  
치가 아닌 것 같아요. 전혀 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 안 들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 묻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이것은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검찰총장하고 차장, 우리 당에서 탄핵소추 냈어  
요. 그날 밤에 국회의장이 정상적으로만 사회를 봤  
으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저지로,  
여당의 물리적인 저지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것  
은 사실상 국민적 심판이 내려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검찰에서 사정한다고 그래요.  
그 사정을 누가 믿겠느냐고요. 따라 가겠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검찰이 제대로 서  
고 신뢰를 받으려면 검찰총장, 차장이 스스로 용퇴  
를 하거나 아니면 법무부장관께서 이 분들의 사  
퇴를 권유를 하거나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면 대  
통령께 해임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그 답변은  
법무부장관이 꼭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답변  
을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法務部長官 金正吉** 그 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申榮國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저에게 질  
의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16대 총선과 관련해서 선거사범을 처리  
함에 있어서 소속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에 따라서 엄정히 처리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의혹이 제기되는 각종 사건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편파시비나 또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의혹을 제기하여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준사법기관으로서 법률상 신분이 보장된 검사들이 법률상 명백한 책임 없는 사유로 물러난다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이나 검찰총장의 임기를 규정한 검찰청법 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합니다.

검찰권 행사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영향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퇴하라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은 앞으로 검찰이 보다 더 잘해서 하라는 좋은 충고의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검찰이 더욱 잘해서 국민으로부터 전폭적으로 진실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金貞淑委員** 그러니까 사퇴를 건의할 용의는 없군요.

지금 계속 검찰이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일을 잘했다고 지금 계속하시는데요. 국가기강 확립을 할 때 검찰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옷로비사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재판 안 끝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고급옷로비사건 있지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번 4.13 총선 부정선거 수사를 편파적으로 수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또 한빛은행 최근에 다 도망보내고 조사 제대로 못 하고 있지요? 또 동방금고 정현준사건, 얼마나 검찰이 불공정하게 그동안에 수사를 해왔고 때로는 무능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에 국민의 불신이 아주 증폭되고 있어요. 아무리 법무부장관이 잘하고 있다고 옹호를 해도 믿어주는 국민이 없습니다.

이런 판에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려고 또 사정을 하려고 그래요? 사정이 효과를 보려면 이대로 놓아두고 사정을 하면 사정의 정당성 없습니다. 누가 따르겠어요? 거기에 굴복하고 따르는 국민들이 많아야 사정의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아주 냉소적인 분위기가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잘 지도만 하고 그냥 가시겠다, 그것이 올바른 우리 법무부 총수로서 하실 수 있

는 말씀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되시는지 참 유감입니다.

(張在植 위원장, 丁世均 간사와 사회교대)

○**法務部長官 金正吉** 그동안 불신임받은 점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치유를 해야 되고 저는 앞으로 지도·감독을…….

○**金貞淑委員** 있다면이 아니라 있지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있지요.

○**法務部長官 金正吉** 제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법무부장관으로서 우리 검찰을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검찰로 만들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金貞淑委員** 신뢰받을 수 있는 검찰로 되는 길은 지금 현재까지 가장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검찰총장과 차장 스스로 용퇴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아니면 강제로 사퇴를 시키든지 그 두 가지 방법이 아니고는 검찰의 위상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꼭 참고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法務部長官 金正吉** 또 金 위원님께서도 검찰이 MCI코리아 부회장 진승현에 대한…….

○**申榮國委員** 장관님, 아까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마저 같이 좀 질의를 할게요.

장관, 어떤 사람이 1만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구멍가게에 가서 1,000원짜리 열장으로 바꿔주세요 하니까 안 바꿔 주더라고요. 왜 안 바꿔주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 믿지 못해서 안 바꿔준대요.

만원짜리 갖다 주고 천원짜리 열장 바꿔달라는데 안 바꿔주거든요. 왜 안 바꿔주느냐 그 사람 못 믿는 사람이라서 이 만원짜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서 안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소위 정의냐 불의냐를 재는 자입니다. 나라의 정의, 불의를 검찰에 가서 딱 재보면 정의냐, 불의냐, 감옥 갈 사람이나, 감옥 안 갈 사람이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도 검찰은 검찰이 재는 20cm 자는 변하면 안 됩니다. 열 받아도 변하면 안 되고 추워도 짧아지면 안 되고 정확한 자라야지 정의가 쉽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 답변을 봅시다. 네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첫째, 정치권에서 말하는 선거사범 수사는 검찰 나름대로 공정하게 했다 억울하다 두 번째, 최근 일련의 게이트 사건들은 검찰당국도 신속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정치권에서 그렇게 보느냐 그 다음에…….

○**委員長代理 丁世均** 잠깐만요.

○**申榮國委員** 그 다음에 임기…….

○委員長代理 丁世均 잠깐 들어 보세요.

지금 申榮國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시는 내용은 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부터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원래 보충질의하실 내용, 그러니까 원래 질의하신 내용 그것에 국한해서 좀 해주셔야지 지금 시간이 10시15분 아닙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榮國委員 여당 위원장님이니까 그런 말씀 당연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방금 법무부장관께서 申榮國 위원의 질의에 답변합니다 하면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렇게 했노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20cm 자로 재도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임기내 라고 하는 것은 임기내에도 잘못되면 그만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이 정치적으로 근거도 없이 하는 것은, 탄핵에 대해서는 승복할 수 없다 그러면 만약에 그날 여당이 국회의장을 감금 안 하고, 만약입니다. 만약에 그날 탄핵안이 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아, 국회에서 한 것은 전부 정치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불복하겠다는 얘기로밖에는 안 들립니다. 가결이 되었든 부결이 되었든 국회에서 하는 것은 전부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승복 못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法務部長官 金正吉 제 말씀을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은 16대 총선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고 일부 요즈음에 나오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확실한 근거도 제시함이 없이 의혹만을 제기해서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패유감스럽다는 얘기를 제가 했고 세 번째는 지금 검사들이 명백한 법률상 책임없는 사유로 물러날 수는 없지 않느냐, 신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없습니다.

○申榮國委員 아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물러나면 아까 우리 金貞淑 위원…….

○法務部長官 金正吉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의 임기를 규정한 검찰청법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고 검찰권 행사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영향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申榮國委員 알았습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法務部長官 金正吉 신분이 보장된 검사는…….

○申榮國委員 그 말씀은 저도 알아 들었으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범죄를 저지른다고든가 이런 경우 아니고는 사표를 우리가 받을 수 없는데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꾸 사표를 내라고 하면 이것은 중립성에도 훼손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申榮國委員 다시 말씀드리면 확실한 증거라든가 이런 것, 승복을 못하는데 ‘정치적으로’ 그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국회에서 탄핵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정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듣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러면 검찰이 한 것은 다른 행정부 같으면 감사원에다가 감사받아 보면 틀림없이 옳고 그른 것이 나오는데 검찰이나 법원이나 국회에서 한 것은 차상급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국민들이 그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됩니다. 그래서 검찰은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일어난 검찰의 처사에 대해서 아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국민들이 믿어주는가 안 믿어주는가 이런 여론조사 같은 것 해본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장관이 말한 것하고 내가 듣는 것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공정하게 하고 신속하게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하게도 많은 국민들은 검찰을 못 믿겠다 또 국회에서도 특검제를 뒤라 이랬을 적에는 검찰이 한번 내일이라도 여론조사를 해가지고서 ‘진짜 검찰이 억울하다, 국민이 보기에 검찰을 못 믿습니까’ 이렇게 여론조사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지금 여론조사는 저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요. 아까 의혹 의혹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申榮國委員 아니 사건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요. 알았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사건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앞으로 검찰이 나라를 갖다가 지키는데는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믿고 있는가 여론조사를 한번 해서 그

것을 공표를 하십시오. 그러면 아하, 검찰이 진짜 믿을 수 있는데 국회에서 엉터리로 정치적으로 오해를 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옷을 벗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나라가 앞으로 기강이 서느냐 안 서느냐, 정의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한두 사람의 자리 옷 벗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자손만대가 살 이 나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검찰권 정의가 바로 서야 되고 20cm 자가 이것은 정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마는 가까운 시일 내에 검찰에서 한 두 개, 세 개의 여론조사기관을 시켜가지고 최근에 국민들이 검찰을 믿는 퍼센트가 몇 %나 한번 나오면 그것을 한번 신문에 발표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국민들이 아하, 검찰이 저렇게 정직하고 저렇게 공정하고 저렇게 깨끗한 것을 우리 국민이 잘못 알았구나, 우리가 잘못 했습니다 하고 아마 검찰한테 사과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치권 저 자신도 그렇게 나오면 내가 법무장관한테 다음 번에 사과를 할테니까요.

○法務部長官 金正吉 예, 좋습니다.

○申榮國委員 이상입니다.

○法務部長官 金正吉 또 金貞淑 위원님께서는 검찰의 MCI코리아 부회장 진승현에 대한 검거활동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6일 금감원으로부터서 진승현이 한 주가조작혐의 등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았습니다. 받은 즉시 진승현에 대해서 출국금지조치를 했고 또 지명수배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검거반을 편성해서 검거활동을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변인물들을 통해서 자수를 권유하는 등 여러 가지 각도로 조속한 검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金위원님께서는 이른바 열린금고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열린금고 불법대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서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여올 경우에는 즉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철저히 수사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裴基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裴 위원님께서는 최근 우리 사회의 집단적 이기주의에 편승한 불법행동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법질서와 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각 분야에서 자신들의 주장이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집단적인 불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아주 빈발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사회의 기강이 흐트러지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적법절차에 따른 합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보장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집단이기주의적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분이나 직위여부를 불문하고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에 따라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국민들이 자유롭고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金學元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위원님께서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업무성격상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하였는데 이는 예산편성 및 예비비 사용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99년도 회계연도 도중인 99년5월7일에 발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년도 본예산은 98년12월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99년5월7일에 발족한 이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를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예산편성권이 없는 관계로 법무부 검찰국에서 예비비를 편성하여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金위원님께서는 검찰청 공공요금 규모는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충당한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검찰청 운영 공공요금이 매년 부족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 충당하여 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부에서는 매년 예산편성 할 때마다 가급적 예비비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반영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의 재정형편상 소요액 전부를 일시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필요한 소요액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장관님, 아까 제가 공안대책협의회 올해 들어와서 한 182회에 대해서 회의록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내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안대책협의회는 관계 장·차관 회의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정부시책에 대해서 관련부처 실무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결과는 참석자들 간의 논의나 결정된 사항 가운데서 사회안정과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자료나 회의자료 내용 중에는 사건 수사 관계도 있고 또 재판과 관련되거나 개인의 명예와 관계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나 유관부처의 고유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자료나 회의록 자체를 제출해 드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文洙委員** 그 점은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제가 이번에 공안대책지역협의회와 공안대책협의회 개최현황을 보니까 99년8월부터 2000년10월 10일까지 총 전국 54개 청에서 총 182회인데 이 중에 대검찰청이 11회를 했는데 이 대검찰청 11회 중에 1회는 언제 어디서 했는데 이것은 곤란하다든지 2회는 괜찮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울은 또 20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하나를 이것은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안 된다든지 해주셔야지 182회 일괄적으로 전혀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 이것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 관한법률의 위반인데 만약에 장관님이 제출하지 않으시려면 국가의 무슨 대공업무라든지 또 외교상 큰 문제가 되든지 이런 것 이외에는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조폐공사파업유도청문회에서도 알다시피 그때도 40회의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했는데 그 중에 70%, 28회가 노사관계공안대책협의회였습니다. 대간첩공안대책협의회는 1회도 없었습니다. 단 한 회도…….

제가 무슨 대공관계나 대외적인 이런 것을 제출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부분이 제가 파악하는 범위 내에서는 주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올해 4월18일에 개최된 공안대책협의회는 서울 지역협의회인데 이것은 농·축협 통합 관련 동향, 의료보험 통합 관련 전국직장의보노조 및 전국의료보험노조 총파업 동향대책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국가기밀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온 분들이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가정보원, 농림부, 서울지방경찰청 또 그다음에 각 검찰청 이런데 이게 무슨 대외비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또 올해 6월22일에도 보면 롯데호텔 관련된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관광부, 서울시청,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검, 이것이 무슨 비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7월3일에 공안대책실무협의회 개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대검찰청하고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노동부, 경찰청, 서울지방검찰청, 한국노총의 총파업관련 대책, 전국금융산업노조 파업관련 사후처리대책 이게 무슨 국가비밀입니까? 그다음에 2000년7월10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주최한 공안대책실무협의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융산업노조 총파업관련 동향점검과 총파업 강행시 파업주도자에 대한 세부수사계획 확정, 노동청하고 경찰청, 검찰청 이것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10월16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면 유독 검찰은 제출하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검찰은 이 자리에, 국회에 일체 나타나지 않고 국회에서 요청한 자료도 일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이 입법부 위에 군림하는 자세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에 처하는 이런 사안이다. 법 아시지요?

○**法務部長官 金正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의자료 내용 중에는 사건수사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빼라. 이러이러한 것은 사건수사에 있어서 빼라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한다 이말입니다. 그것까지 제가 내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182회가 전부 사건수사고 전부 대공회의고 이러냐 이말입니다. 아니냐 이말씀입니다.

○**法務部長官 金正吉** 제 말씀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182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검찰청, 대검 이렇게 모두 합해서 54개 기관입니다. 그것만 빼고 지방검찰청에서 결국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내에서의 집단불법행동이 나타나고 공공안녕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니까 경찰도 일선에서 하는 사람들이고, 노동 같으면 노동부도 나오고 또 다른 집단 행동 같으면 그때그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집단불법행위에 대해서 순리적으로 잘 합당하게 대처를 해가지고 할 것이냐. 그러면 그중에는 수사대상도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대상도 들어있기 때문에, 수사에 관한 문제는 또 재판에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에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들어있으면 수사나 재판관계라든지 또는 개인의 명예관계같은 것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지금 그 부분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金文洙委員** 한계는 인정한다니까요. 한계는 인정하는데…….

○**法務部長官 金正吉** 그런 부분이 아닌 경우에 회의개최일지 같은 것이라든지, 말하자면 몇 월 몇 일 제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제가 알아봐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아까와 같은 그런, 검찰이 회의할 적에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사관계라든가 재판에 직결된 관계라든가 그럼으로 해서 그사람의 명예훼손에 관계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국회법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출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에 얘기를 해서 지시를 해가지고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요구한 것이 99년8월부터 2000년10월10일까지니까 적어도 두 달 또는 1년2개월 이상, 1년4개월 이상 지난 사안입니다. 그래서 당장 무슨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또 재판에 계류 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머지 부분, 예를 들면 182회가 전부, 제가 봐도 하나도 관련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 장도 안 내고 한 예도 내지 않는 검찰의 그 자세가 문제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서 최대한 내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으로 빨리 내셔서 내일 아침까지는 제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法務部長官 金正吉** 또 하나만 이해 있으실 것은 182회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서 그

렇습니다. 여기 한 기관에서 182회를 동시에 연이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文洙委員**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전부 검찰청 관내에서 주관하는 회의이고 검찰에서 하니까 그런 말씀이고 타 부처에 뭐 취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지금 검찰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아까 불신하는 주요한 이유가 이렇게 국회의원이 요청을 해도 단 하나도 내지 않는다, 또 검사는 절대 출석을 안 한다, 예를 들면 요즘에 한빛은행 관련된 국정조사를 한다고 증인요청을 해봐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더라도 검찰은 뭐 담당검사도 한 사람 안 된다, 어떤 검사는 굉장한 특권 어떤 성역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자꾸 불신을 받는데 예를 들면 제 이야기가 우리 鄭亨根 위원하고 저하고 국회의원들 열 명이 공동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뭐 한빛은행 관련된 불법대출과 관련한 검찰 수사기록, 이것도 이미 다 재판에 회부되고 검찰이 수사한 기록입니다. 또는 금융계좌추적 한 것, 구속자의 구속영장을 달라 또 공소장, 일체 내지 않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金文洙 위원님!**

○**金文洙委員** 구속영장이나 공소장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인데 이런 것도 일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委員長代理 丁世均 金文洙 위원님!** 법무부장관께서 자료제출을 좀 알아보시겠다고 하니까 지금 앞으로 답변하셔야 될 국무위원들이 열 분이 넘는데 시간이 한 시간 남짓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보충질의 성격을 넘어서 추가질의는 원래 전 위원님들이 15분 질의를 한 후에 다시 추가질의할 기회를 드리기로 그렇게 양당이 합의가 되었으니까 좀 웬만하면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열 분이 넘게 국무위원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한 시간 남짓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金聖順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金聖順委員** 지금 우리가 정치분야 대정부질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종일 거의 그것인데 99년 예산·결산과 관련해서 의문나는 점을 우리가 질의하는 것인데 이것 위원장이 좀 조

정해 주세요. 탄핵소추, 특별검사제, 사정은 누가 하느냐 사과해라, 검찰 수뇌부 자진사퇴해라, 청와대 8급, 옷로비, 노벨평화상……. 물론 이것이 예산·결산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 가지고 우리 이렇게 밤늦게까지 해야 됩니까? 내일도 또 이렇게 할 것입니까? 특히 보충질의의 경우 위원장께서 좀 의사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金文洙委員 신상발언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협조 좀 부탁하고 장관께서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金 위원님 협조 좀 해주시고요, 15분씩 다 한 번씩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질의를 10분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당이 합의를 해놓았으니까 추가질의 성격은 다음에 좀 해주세요.

○金學元委員 추가질의 나중에 하시지요.

○委員長代理 丁世均 그렇게 좀 합시다. 도와주세요.

장관 계속 답변해 주시고 金文洙 위원님 협조 부탁드립니다.

○金文洙委員 신상발언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그러면 신상발언 간단하게 해주세요.

○金文洙委員 아니, 그런데 어떻게 동료위원들께서 조금…….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제가 공안대책협의회 99년8월부터 시작해서 2000년10월10일까지 이 예산이 바로 18억, 99년 예산, 법무부의 예비비에서 18억4,257만원 전용을 한 것입니다.

합동수사본부를 위해서 2억6,200만원 총 21억500만원의 예산을 법무부에서 예비비 전용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이것이 왜 그러냐, 회의를 추적해 보니까 182회 회의를 했다 역사상 유례없는 공안대책협의회 최다 개최실적인데 이것은 과거 정권에도 없던 것입니다.

공안정권에도 없던 이런 일이 우리 대통령 아래에서 이런 일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고 하나도 추가질의한 것도 없습니다. 법무부가 다만 자료를 제출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산을 썼는지 회의자료라도 내달라, 단 한 줄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청하는데 무슨 그것이 추가질의이고 그것이 왜 의제외 발언이고 무슨 말씀이신지,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면서 그렇게 무책임한 공세를 퍼붓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위원장께서 좀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법무부장관께서 자료 제출토록 한번 확인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내일도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고 모레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장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봐 주시고 일단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계속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내일 한번 법무부장관께서 알아보고 말씀드릴 테니까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文洙委員 발언 주세요.

○委員長代理 丁世均 계속 답변합시다. 金 위원님, 협조 좀 해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金文洙委員 협조할 테니까 마이크 주세요.

○委員長代理 丁世均 말씀 다 하셨잖아요. 더 남아 있습니까? 신상발언하신다고 해서 신상발언하시게 했는데요.

○金文洙委員 아니, 위원장님도 자꾸 사실을 왜곡하면 저도 인격이 있고 저도 이 예결위원으로서 성실하게 예결 심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하는데 마치 무슨 제가 안 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시는데 아까 제가 분명히 질의할 때 그랬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 미제출된 자료를 내라…….

○委員長代理 丁世均 한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金文洙委員 관공비도 마찬가지로 내라 하는데 하나도 제출 안 하고 있어요. 자료를 제출 안 하기 때문에 결산심사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런데 동료위원들한테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제출하지 아니하는 장관에 대해서는 한마디 질책도 하지 않고 주의를 주지 않고 이것은 고발사건인데 왜 고발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장관은 무한정 마이크를 쓰고 있고 의제외 답변을 해도 되고 국회의원은 정당한 요구 이야기를 해도 발언을 못하게 마이크를 끄고 있고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金文洙 위원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서 알아봐서 가능하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제출이 되도록 장관님께서 잘

협조를 해주시고 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務部長官 金正吉 예, 답변은 끝났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법무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촉박하니깐요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長官 李敦熙 교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金貞淑 위원께서 99년도 실시한 동절기 실업대책 사업의 타당성 효과 및 예비비지출 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9년도 동절기 실업대책은 겨울철 계절적 요인에 따른 실업자의 구제와 사회안정화 도모 목적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99년12월부터 2000년2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실시로 대학도서관의 자료정비와 박물관의 유물정비가 앞당겨지고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과중한 업무의 경감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서관·박물관 인력지원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원해야 할 시급성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공감할 점이 없지 않습니 다마는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이루어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李根鎭 위원께서 미취원아를 제쳐두고 취원아만을…….

○金貞淑委員 잠깐요,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데 공감할 부분이 없지 않다는 말씀을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감할 부분이 없지 않다’ 이것은 심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100% 공감을 하신다고 해야지 ‘공감할 부분이 없지 않다’ 뉘앙스가 완전히 틀리지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십시오.

○教育部長官 李敦熙 예, 그 표현을 공감하는 바가…….

○金貞淑委員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거지요.

○教育部長官 李敦熙 공감하는 바가 있다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金貞淑委員 잘못된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정책을…….

○委員長代理 丁世均 공감하신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된다니깐요. 지금 시간 없어요.

○金貞淑委員 이런 정책을 이제는 고쳐 나가셔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教育部長官 李敦熙 예, 알겠습니다.

李根鎭 위원님께서 미취원아를 제쳐두고 취원아만을 학비 지원하는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과 유아 교육 확대라는 교육이념과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사에 의하면 만 5세아의 유치원 취원율이 43.2%이고 또 보육시설 지원율이 41%로서 나머지 유아들도 선교원, 사설학원 등에 취학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 미취원아는 아주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최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미취원 저소득층 아동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적은 숫자라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챙겨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존경하는 金貞淑 위원님, 孫泰仁 위원님께서 새천년준비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한 근거와 필요성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99년 새천년을 앞두고 세계 각국마다 고유한 축하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던 터에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이 위축되지 않고 새천년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새천년맞이행사가 요구됐습니다.

당초 새천년준비사업은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각각 추진했으나 그 결과 비슷비슷한 행사와 비슷비슷한 기념조형물 건립 등 중복사업이 많았고 일회성 내지 전시성 행사가 주류를 이룸으로써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통합·조정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를 총괄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99년4월에 뒤늦게 새천년준비위원회가 발족하게 되었으며 당해연도에 필요한 운영예산과 사업비는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편성·지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高珍富 위원님께서…….

○金貞淑委員 저는 문화관광부장관께 그 질의 하나밖에 안 했기 때문에 마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요점이 예비비로 지출할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따져 주셔야지 지금 다른 말씀을 계속하시는데요, 어떻게 행사 하나에 59억짜리가 있어요? 국민 생활상의 어려운 점 이런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새천년맞이준비사업 하나로 59억이 들었고, 제2건국 한마음다짐대회 개최경비가 9억3,1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큰 이벤트성 사업을 지금 정부가 나서서 했는데 제2건국 한마음다짐대회는 제2건국위원회는 민간주도라고 계속 해요. 민간주도라고 하면서 돈은 전부 정부가 댄다구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이 민간주도의 운동인데 행사 하나에 9억짜리를 정부가 돈을 다 대주면서 한다 그리고 그것도 예비비로 지출해 버린다, 민간을 가장한 관 주도형 행사라구요. 이런 점에서 반성할 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과를 하고 넘어가셔야지 다른 말씀만 지금 계속 하시는데요. 또 다른 것 많아요. 예비비로 한 큰 사건이 많은데 지금 제일 말이 안 되는 사업, 예비비로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개를 집었어요. 이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많습니 다. 전부 이런 사업들하고 시민단체들 앞세워서 무슨 사업하고 전부 그러는데요. 시민단체들도 그래요. 정부가 너무 많이 돈을 주다 보면 거기에 관이 끼게 되고 간섭하게 되고 시민단체 자율성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민단체가 제 기능을 못 하게, 불신의 늪으로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일을 해마다 150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새천년맞이준비사업도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마음다짐대회, 제2건국 지금 민간주도 아닙니까? 장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제2건국운동은 민간주도라고 정부가 계속 홍보하셨지요? 하도 홍보를 많이 하니까 본 위원도 민간주도인가 보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돈은 행사 하나에 9억원을 탁 대서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누가 제2건국운동을 민간주도, 민간인들이 나서서 자발적으로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인데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그럴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안 하겠다든지 그런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답변을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金貞淑 위원님 말씀은 새

겨들겠습니다. 그런데 새천년맞이행사 관련예산하고 제2건국 관련예산을 몽땅그려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새천년맞이행사 관련예산은 76억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76억원의 사용내역은 새천년맞이행사에 48억원, 새천년 D-100 일 행사에 10억원, 새천년준비위원회 운영 경상운영비에 10억원, 새천년미래비전제시 대토론회 등 개최비용으로 8억원 이렇게 해서 합계 76억원이 새천년사업으로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貞淑委員 새천년사업을 76억원을 쓰고 행사를 하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던가요? 76억을 쓸 만큼 그렇게 큰 행사였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金 위원님, 그 부분은 물론 평가하기 나름이겠습니까마는…….

○金貞淑委員 그것도 예비비에서 말이에요.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사실 상당수의 선진국들이 새천년맞이행사에 쓴 비용에 비하면 이 예산 전체가 불꽃놀이 비용에 지나지 않았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金貞淑委員 76억원어치 불꽃놀이를 하는 나라도 있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예, 그렇습니다.

○金貞淑委員 그것은 잘 사는 나라겠지요. IMF도 없고…….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그리고 영국이나 프랑스의 예를 보면 이 예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새천년맞이행사를 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는 크게 안 할 생각으로 당초에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는 데다가 다른 나라들이 새천년맞이행사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뒤늦게라도 우리도 어느 정도는 국민들의 사기를 생각해서 이 새천년맞이 자정에 뭔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정도의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貞淑委員 새천년을 맞으면 불꽃놀이를 76억원 어치를 해야 국민의 사기가 올라갑니까? 집안에서 마음가짐을 잘 가다듬고 하면 온 사회가 다 부정부패로부터 해방이 되고 서로 신뢰하고 부동켜안고 새천년을 맞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불꽃놀이 다른 나라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이런 발상을 가지고 불꽃놀이를 76억원어치를 하니까 사기가 막 충천해서 국민들의 사기가 올라갔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불꽃놀이를 70억원어치 했다는 말씀은 아니구요.

○金貞淑委員 너무나 지금 답변이 다른 나라에서……. 원래 조그맣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됐다, 다른 나라에서 막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정말 훌륭한 답변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잘 새겨 들겠습니다.

존경하는 高珍富 위원님께서서는 보조단체의 사업 취소 등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반납이 많은데 이를 위한 보조금 관리대책이 새롭게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사정 등으로 인해서 자체부담분의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건립부지 등을 확보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을 취소하게 됨에 따라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예산 중에는 3건에서 40억원에 이르는 보조금 반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 취소로 인한 보조금의 반납사례가 가급적 생기지 않도록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보다 철저히 검토해서 확실한 사업추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만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보조금사업에 대한 예산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高珍富 위원께서는 관광예산이 지자체 중심의 관광개발사업에만 지원되고 있는바 민간중심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관광예산은 그동안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며 이를 위해서 하드웨어 개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근년에 이르러서는 정부는 이러한 하드웨어 분야의 지원과 함께 소프트웨어 관광분야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통문화 재현사업, 한국역사문화체험관광코스 개발, 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기념품 개발, 전통문화 예술공연의 상설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개발사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소프트웨어 개발은 우리나라 관광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민간차원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高珍富 위원님께서서는 문화산업분야 지원예산의 70%가 게임과 영상분야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예산분배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도에 문화산업부문 지원예산 중 게임과 영상분야에 집중되게 된 이유는 영화진흥금고에 대한 지원과 게임종합지원센터의 설립을 위한 예산이 집중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첨단문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게임분야의 경쟁력이 2000년도에 대폭 향상되었고 국산영화는 시장점유율 40% 선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애니메이션과 음반분야에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타 분야 지원을 위한 예산을 균형있게 요청했으며 앞으로 각 분야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문화관광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部長官 韓甲洙 농림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高珍富 위원님께서 98년 이후에 농가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농가부채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21일 전국에서 농민들이 대회를 하고 또 일부 고속도로를 점거하는 등 이런 사태까지 야기가 되어서 농림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어민들에게 질서있게 대회하기를 당부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일부 불미하게 된 것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도 죄송스럽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농가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역시 지난 IMF의 경제위기가 농촌에 큰 충격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농촌과 농업은 산업처럼 무슨 기업체가 있어서 기업체가 몇만 개가 부도나고 그런 구체적인 숫자는 없었습니다마는 역시 농촌에도 자재값은 올라가고 농산물은

잘 팔리지 않고 해서 농업에 큰 몫이 든 것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농가부채의 제일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92년부터 98년까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하면서 42조원의 투융자사업을 실시했는데 투융자사업의 상환이 97년부터 도래하기 시작해서 상환되는 자금들에 의한 부채압박이 있었고, 부채압박으로 인해 부채를 상환연기해 주고 하니까 연기된 것이 또 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농가부채가 지난 99년 말 현재 호당 약 1,830만원 수준이 되어서 전체로 보면 약 25조6,000억이라는 막대한 농가부채를 안게 되었습니다.

98년 두 차례, 99년 세 차례에 걸쳐서 농가부채경감을 위해 다섯 차례의 대책을 강구해서 우선 IMF 충격으로부터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렵고 해서 상환기간을 1년이나 2년을 연기해 주고, 또는 일시에 상환하도록 한다든가, 상환을 1,000만원으로 제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원천적인 부채대책에 관한 해결이 되지 못해서 아직까지 농촌의 부채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3,000만원 이상의 고액 부채농가, 대개 이분들이 한 35세부터 45세까지의 농촌의 중추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부채로 인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부채의 부담에서 어느 정도 숨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채를 실질적으로 경감해 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부채의 상환능력을 키워주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정부에서는 이런 농가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농촌의 부채문제를 과거의 단기적인 상환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상환으로 돌려서 큰 부담 없이 농민들이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정책자금이 주로 2001년과 2002년에 집중적으로 상환이 돌아옵니다마는 이것을 장기상환으로 약 5년 동안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돌리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로 농민들이 영농자금으로 쓰고 있는 상호금융에 대해서 금융이 약 18조 됩니다마는 그의 일부를 저리자금으로 대환해 주는 계획도 세워 놓고 있고, 특히 농민들이 선호하는 자금이 경영개선자금인데 이 경영개선자금을 당초에 정부가 1조 8,000억을 계획했습니다마는 농민들의 신청이 3조

3,000억까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1조를 보태서 2조8,000억을 지원해 주면 상당수준 그것을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촌은 도시와 달라서 대개 선대부터 오랫동안 얼굴을 맞대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보증을 서로 서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증을 서 가지고 주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니까 보증 선 사람들이 채무에 시달리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차압까지 들어오는 문제로 해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런 대위변제와 관련해서 저리의 자금을 장기에 걸쳐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는 조치를 해서 자기가 직접 돈을 만져보지도 않고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에 대해 시달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치들을 정부에서는 농가부채특별조치라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하고자 했는데 지금 여야간에 특별법으로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장관의 생각은 이런 부채대책은 한시적인 재정금융의 조치이기 때문에 재정금융정책이나 금융의 시스템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옳지 특별히 법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여야간에 합의에 의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 주시면 이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논농업직불제라든가 또는 농업의 재해보험을 도입을 하는 것들을 내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유통개혁을 한다든가 과채류의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高珍富 위원께서 농업인 교육비 해소를 위해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현행 실업계 고교생에서 비실업계 고교생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0년도부터 영세농가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서 1ha미만 농업인의 실업계 고교 자녀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약 8만4,000명에 502억원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에 대한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수업

료를 면제하는 것은 농업인의 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인문고 고교생으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연간 한 860억원 가까운 추가재원이 필요하고 농촌 지역에 대해서 고교생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결과가 됨으로 교육정책 방향이나 정부의 재정여건 등 여러 여건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柳在珪 위원님께서 정부는 농촌문제를 미봉책으로 넘어가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황폐화되는 농촌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바꿀 수 있는 구상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농촌의 부채문제는 제가 高珍富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같음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농촌의 부채문제를 해소하면서 한편으로 농촌을 어떻게 하면 떠나지 않고 오히려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드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것인데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것은 농업소득을 올리는 것과 농외소득을 올리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규모화된 전업농 육성을 해서 소규모가 아니고 규모화된 최소한도 3ha 내지 5ha 정도 그러니까 9,000평 내지 1만5,000평 정도 되는 논농사로 해 가지고 규모화해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 그런 농가를 10만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쌀 소요량의 40%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영세 소규모농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을 해서 농약을 덜 쓴다든가 비료를 덜 쓴다든가 해서 가격차별화를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화훼나 채소·과수 또는 이런 특용작목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하고 있는 농업관측을 강화해서 농민들이 영농의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해서 과잉생산되거나 과소생산되지 않도록 저희가 영농지도를 시의적절하고 거기에 따른 가격안정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한편으로는 일본에 100억불이라는 엄청난 신선농산물시장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시장을 공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축산물에 대해서는 한우산업과 돼지산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산업의 생산기반을 다지기 위

해서 지금 한우의 사육두수가 줄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이번에 한우 생산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2002년까지는 적정수준으로 올리도록 하고 돼지도 역시 한동안은 가격이 내려서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가격이 회복이 되어서 적정가격이 유지되는 그런 축산산업을 끌고 나가도록 하면서 떠나지 않는 농촌을 만드는 여러 가지 농업소득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시에 농외소득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농외소득이 86%이고 농업소득은 14%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농외소득이 훨씬 농가소득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저희나라는 아직까지 농외소득이 지금 52%밖에 되지 못하고 농업소득이 48%를 점하고 있습니다. 대만만 해도 농외소득이 69%이고 농업소득은 31%입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갈 작정입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장관님, 좀 간략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農林部長官 韓甲洙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柳在珪 위원님께서 통합된 협동조합의 기능조정에 대한 신·경분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법 부칙에 의해서 현재 신·경분리에 관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발주 결과가 2002년에 나오면 국회에 보고를 드리고 신·경분리에 관한 결론을 지을까 합니다.

다음에 예산배정 시 농촌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 농림부보다도 기획예산당국에 주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99년 양곡 및 일반회계 세입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재특회계 세출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뭐냐, 그리고 벼직과 발작물용 농기계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데 따른 대책은 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세입 미납액 세출예산 불용과 관련해서는 양곡관리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99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1조6,221억원이며 이중 1조5,725억원이 수납되고 496억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방부와 보건복지부의 민·관수용 양곡대로서 국방부 것은 지난 4월에 수납이 됐고 보건복지부의 영세취로사업 및 생활보호용 양곡은 앞으

로 곧 수납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세출 중 특히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의 일환으로 98 하반기에 99말까지 도래하는 중장기정책자금을 2년간 상환 연기하기 위해서 재특자금 3,000억원, 농협자금 1조2,000억원 등 총 1조5,000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재특자금 3,000억원 중 1,36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가들이 부채를 상환해서 대환실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직과와 관련해서는 비직과 및 발작물 재배용 농기계 구입자금을 당초 시·도 요구에 따라서 배정하였습니까라는 농업인들이 새로운 직과재배보다는 기존 방식인 기계이앙재배방식을 선호함에 따라서 불용액이 약 7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농기계구입지원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사용용도 구분 없이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농림부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요점 위주로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資源部長官 辛國煥** 산업자원부장관 답변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高珍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高 위원님께서서는 99년도 석유비축예산 중 412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와 정부비축 60일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99년도 비축유 구입예산은 원유 400만 배럴과 제품 23만 배럴유에 해당하는 1,00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원유 200만 배럴과 제품 20만 배럴은 99년 중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99년 하반기부터 OPEC의 감산합의주문서라든가 아시아 지역 경제회복에 따라서 원유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구입할 경우에 고가로 구입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잔여분 412억원은 2000년으로 이월하면서 99년에 선도구입하여 계약은 확정하고 금액은 물량이 도착하는 99년으로 이월해서 지불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선도거래를 했기 때문에 2000년8월 평균 유가 28불89전에 비하면 12불4전이 절약될 수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

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6년 정부비축목표는 현재 29일에서 60일분으로 계획을 하고 일부 부족한 비축기지를 건설하고 또 비축기지에 필요한 원유와 제품을 충유하기 위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李根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李 위원님께서서는 수출보험기금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간 정부는 수출보험이 WTO체제하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수출지원제도임을 감안해서 기금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기금은 현재 1조4,500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확충은 수출보험이용률을 높여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어나는 수출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연차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수출지원과 플랜트 수출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해서 수출지원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보건복지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李根鎭 위원님께 국립암센터의 건립목적사업 추진에 대해서 염려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립암센터는 연구와 진료를 병행해서 국가 암관리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2001년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료기능을 위한 병원동은 준공되어서 암환자를 부분적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암연구소를 위한 연구동은 금년 7월에 설계를 발주해서 2002년 상반기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암센터 개원시 암연구동이 건립되지 않아서 암연구사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우선 병원동 건물을 활용해서 암 임상연구와 암 예방조기검진, 등록사업 등 국가 암관리사업관련연구를 우선적으로 수행할 계획이고 실험실적연구가 필요한 암세포주조직은행, 유전체 분석 등 연구사업도 병원동의 일부 시설을 이용해서 조기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根鎭 위원님께서서는 99년도 의약분업실시 준비

를 위한 의약품 분류, 유통정보화 등 관련 예산편성의 미비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93년12월에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서 99년7월부터 실시예정이었던 의약품업 준비를 위해서 96년12월부터 97년12월까지 의약품 분류연구를 실시하고 이것을 토대로 98년4월 의약계, 전문가 그리고 소비자, 언론 등 공익대표로 의약품분류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약품분류작업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의약품유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약품 물류센터 설립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의약품업은 의료이용관행을 일시에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로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대국민홍보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약품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의·약·정이 합의를 해서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약계가 서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와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업을 정착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丁世均 간사, 張在植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존경하는 金容鈞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金容鈞 위원님께서서는 국민연금구조의 왜곡으로 인해서 미래의 수급액이 현재의 납부액보다 적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주식 그리고 채권투자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민연금은 시행초기에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저부담 고급여체제로 설계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8년12월에 국민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서 현재의 보험요율과 급여수준을 유지할 경우에는 2048년경까지는 재정이 안정될 것으로 계산해서 설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재계산제도를 통해서 그 이후에도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88년 국민연금기금 설치 후에 금년 8월까지 약 20조2,859억원의 수익을 올려서 연평균 수익률 10.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에는 주식시장의 침체로 약 1조2,000여억원의 평가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99년말 정부 장부가와 비교한 것으로 앞으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기금의 안정성확보를 위해 주식의 경우에는 우량주 위주로, 채권의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 A 이상의 품목에 한해서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작년 11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기금 운용본부를 발족시킨 데 이어서 내년에는 펀드매니저 등 20명의 전문가를 증원하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위험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식과 채권보유현황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金容鈞 위원님께서서는 의약품업시행 이후 의료비가 증가했고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 등의 관련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7월에 9.2%, 9월에 6.5%의 수가인상으로 병·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진료비부담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약품업 실시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의 수준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서 본인부담금제도를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행위는 그 자체가 불공정행위일 뿐만 아니라 의약품업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금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건복지부와 시·도에 편성되어 있는 의약품업감시단을 활용해서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행위에서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합사례를 유형화해 가지고 법령에 구체화해서 담합행위가 사전예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환경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鄭哲基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 공단폐수종말처리장의 낮은 가동률은 환경부의 처리용량산출의 부적정에도 일부 책임이 있으므로 설치사업성 검토를 보다 엄밀히 해야 한다

고 말씀하시고 울촌산단 내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가 2년째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한 환경부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국 30개소 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가동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수의 시설에서 시설용량에 비해 유입량이 적어서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주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단지조성계획시 입주예정업체의 폐수배출량을 예측해서 처리장의 시설용량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된 입주업체의 입주지연, 입주된 업체의 업종변경 등으로 인해서 현 시점에서의 폐수배출량이 당초 계획과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계획 후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업체의 진도에 맞추어서 시설용량을, 예컨대 1기, 2기 등 단계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과다시설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촌산업단지의 경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를 95년도에 완료하고 시설 설치공사에 착공코자 했으나 산업단지 부지가 연약지반인 까닭에 시설 설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느라고 공사발주시기가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현대자동차 등 입주계획업체의 입주가 불투명해져서 사업이 지연된 측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조성이 원활히 추진되고 입주업체가 확정되면 적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 남해화학의 폐석고처리장에서 99년8월 석고침출수가 광양만으로 유출되어서 주변환경과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데 대해 환경부가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셨듯이 99년8월9일 남해화학의 폐석고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바다쪽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발생 직후 관할감독기관인 여수시는 즉시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99년8월16일 남해화학으로 하여금 2001년12월말까지 제방보강시설, 차수벽 등을 설치하도록 시설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여수시는 남해화학으로 하여금 시설개선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응급조치의 일환으로 매립장배수로 공사를 즉시 완료토록 8월21일자로 하고 매립장 주변에 관정 47기를 설치해서 땅속으로 스며드는 침출수를 회수 처리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변환경영향조사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부에서는 2000년2월 담당국장이 현장을 방문해서 폐석고매립장과 침출수 유출지점의 응급조치현장을 점검하고 폐석고매립장의 제방보강, 차수벽 설치공사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독려했습니다.

또한 감독기관인 전라남도과 여수시로 하여금 매립장의 제방보강 및 차수벽 설치공사의 진척상황을 매월 환경부에 보고토록 하고 이를 점검하는 등 계획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鄭哲基 위원께서 세 번째로 지리산국립공원내의 지뢰매설 여부에 대하여 군 당국과 정밀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뢰가 매설된 지역은 국립공원의 경우 오대산 내의 황병산 일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황병산 일대에는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등산객의 출입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지뢰제거가 곤란할 경우에 불의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우선 출입통제 표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을 국방부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지리산 국립공원내에 지뢰매설 여부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협조하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根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나 주셨는데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부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部長官 金允起 1999회계연도 건설교통부결산과 관련해서 鄭哲基 위원님, 高珍富 위원님, 宋錫贊 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鄭哲基 위원님께서 곡성·구례 개발촉진지구의 99년도 말 현재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한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개발촉진지구 2차지구는 97년도 10월에 곡성, 구례, 영월, 화천 등 7개 지구를 지정하여 98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9년도에 공사에 착수하였기 때문에 아직은 사업 초기단계로 추진실적이 다소 저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01년 이후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2001년도 개발촉진지구 2차 사업비가 금년도 수준에 미달하는 253억원이 반영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낙후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한 시급한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鄭哲基 위원님께서서는 일반하천 개수사업 예비비의 집행내역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시면서 동 예비비를 본예산에 계상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일반하천 개수사업재원 중 예비비는 수해복구사업비로서 동 사업비는 매년 수해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 사전예측이 불가능하고 또 본예산에 계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수해복구사업비를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 소요사업비가 본예산을 초과하면 별도의 예비비편성이 불가피하고 수해규모가 적을 경우에는 예산이 불용되는 등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측불가능한 수해복구비는 부득이 예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으나 동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예산집행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수해복구용 예비비편성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수해방지예산을 매년 증액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鄭哲基 위원님께서서는 여수공항 확장사업에 대해 계획된 공기 내에 차질 없는 완공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울촌공단 및 광양만개발 등으로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대처하고 안전운항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994억원을 투입하여 2003년 완공할 예정으로서 여수공항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산봉우리의 절취 등 용지매입이 주민반대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해, 설득 또 이주독려 등을 통

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鄭哲基 위원님께서서는 마지막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항만부분에 대해 교통세의 10%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항만부분에 대하여 교통세를 98년도에는 10% 배분하였으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금년도에는 1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물류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항만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현재 수립중인 중기교통시설 투자 계획안에서는 향후 5년간 항만에 대한 투자를 전체 투자규모대비 10% 이상이 되도록 계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高珍富 위원님께서서는 영월댐 백지화에 대한 주민지원대책, 동강보전대책 및 장래 물부족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24일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영월댐 백지화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댐건설 백지화에 따른 주민지원 대책으로는 농가부채의 완화를 위하여 저금리자금을 지원하며 정주기반시설확충 등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동강보전을 위해서는 환경부와 강원도가 긴밀히 협조하여 동강지역을 자연휴식지로 지정 관리하는 등 종합적인 보전방안을 수립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해서는 물수요관리와 함께 수력발전댐과 다목적댐의 연계운동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宋錫贊 위원님께서서는 첫째 개발제한구역조정을 위한 광역도시계획수립 추진현황을 물으셨고 두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피해를 지적하시면서 보상가액 산정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작업은 건설교통부와 시·도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추진방향은 환경평가결과를 토대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수도권을 포함한 6개 대도시권의 광



역도시권 지정을 완료하고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 계획 등 부문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보상가격산정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이용현황과 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각종 법령상의 일반적인 제한을 감안하여 평가가 되는 것이므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보상평가 원칙하에서 평가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宋錫贊委員 장관님, 宋錫贊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합리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광역도시계획을 추진해서 보전가치가 있는 곳은 재조정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은 당초 앞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대통령선거 당시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철저한 환경평가를 한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녹지공간은 그린벨트로 재지정하고 재지정된 그린벨트에 대해서도 사유재산권침해가 되기 때문에 보상입법을 만들어서 보상을 해 준다는 이러한 취지의 공약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우리나라의 개발제한제도는 1971년도에 영국에서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도입하면서 영국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지정 당시에 1947년에 지정을 함에 있어서 적어도 보상입법을 만들어서 약 3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다가 약 5,000억원이 넘는 이러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토지보상을 한 다음에 환경친화적인 이러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952년부터 영국에서는 이 국토의 개발권을 국유화해서 전국적인 규제를 평등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다른 토지나 다른없는 이러한 대우를 받아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보상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영국의 민주적인 제도적 절차를 무시한 채 오늘날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를 관리함으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난번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정부입장에서는 추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그렇게 추진함으로 인해서 이 그린벨트지역 주민들로부터 더 이상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별다른 녹지공간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임야가 약 67%가 되기 때문에 임야만 잘 보전하더라도 별도의 녹지공간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땅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그린벨트에 대해서 건축완화만 됨으로 인해서는 아주 난개발이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이 그린벨트에 대해서도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서 소방도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러한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다음에 어떠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완화만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 건축이 자행됨으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안 됨으로 인해서 빈곤화되고 어떻게 보면 난개발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러한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이 정부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建設交通部長官 金允起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면서 환경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조정을 해나갈 계획임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광역도시계획안이 작성이 되면 내년 1월부터 2월에 걸쳐서 공청회가 시작이 됩니다.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내용들이 심도 있게 심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學元委員** 지난번에 신도시 개발문제로 인해가지고 당정 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서로 대립이 되고 그래서 결국 신도시 문제가 일단 유보가 되어서 그 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사실상 신도시개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를 여기서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경기 활성화를 어떻게 하든지 일으켜 봐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에는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점을 위해서는 SOC문제에 대한 확충문제도 있고 또 하나 문제는 특히 강북지역에 재개발 대상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강북지역의 재개발을 정부에서 추진하면서 지원해 줄 그럴 용의는 없는지 그로 인해서 뭔가 건축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할 생각은 없는지, 검토해 본 적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建設交通部長官 金允起** 먼저 신도시 문제는 앞으로 3년 또는 4년 후의 주택수급을 위해서도 필요시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수적으로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국면에서 이것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서도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 지역주민들 또 이해관계인들 또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재개발, 재건축 또 뒷골목정비, 이와 같은 사안들도 저희들이 활발히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경기활성화, 그 중에서도 그와 같은 부분은 지역경기의 활성화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해양수산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孫泰仁 위원님께서 독도의 해양과학기지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부는 98년도에 독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념설계와 현장 해양조사 등 기본조사를 마쳤습니다. 2차 연도로 99년도에 역시 현장 해저면 상황조사 및 해저지층 탐사를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두었

다가 사업을 보류함으로써 이 예산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답변해온 해양수산부의 사업보류 이유는 이어도와 함께 서해·남해·동해, 이 세 군데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어도가 제일 먼저 사업이 진행되어서 99년까지 약 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해양과학기지는 관측장비의 선정이나 구조물 제작, 운영방법에 있어서 세 개가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먼저 이어도 기지를 구축하고 운영상황을 판단한 후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업을 유보하였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물론 해양수산부의 이 결정과정에는 해양수산부의 판단 외에 외교·안보 부처의 의견이 고려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孫 위원님께서서는 일본에 대해서 너무 저자세 아닌가, 일본에 대해서 무슨 빛진 것이 있어서 독도문제를 다루는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 조심스럽고 눈치를 살피느냐라는 질의를 아울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의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나 특히 우리 대통령께서 오랫동안 원칙을 가지고 정치를 해오셨고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의 위협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지켜오신 분이요 그래서 일본의 눈치를 살피거나 이렇게 해야 될만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정부의 태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독도문제가 그 전체적인 평가, 독도만이 일본에 대한 태도를 판단하는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 독도문제에 관해서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문제가 쟁점화되는 것을 회피하자는 그런 정책과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반대로 일본에서는 되도록이면 독도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분쟁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부각되기를 오히려 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빌미를 제공해서 그것이 쟁점화되는 것을 우리 정부 외교부서에서는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점이 아무래도 정부의 전략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자세의 문제라거나 또는 특별히 빚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단지 독도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전략상의 견해차이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곱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金貞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시스템 개선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신속한 작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밝히고 가급적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출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의 개선작업은 저희 처 주관으로 11월11일 특별작업반을 구성해서 개선시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하고 이 안이 마련되면 12월 중으로 민·관합동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연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경우에 따라서 법개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국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예비비 중 연례적이고 예측가능했던 경비는 일반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예비비의 경직적인 지출반영 해소와 무분별한 예비비지출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측가능한 경비는 해당부처의 사업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다음 연도에 경비지출이 어느 정도 예견되더라도 사업의 세부내역과 예산소요가 산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예산에 계상하기 곤란해서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측가능한 경비는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비비 예산규모도 과거 집행 실적 등을 감안해서 적정수준으로 편성하고 지출 또한 필요 최소한으로 억제함으로써 예산운용에 효율을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金貞淑 위원님께서 총리께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99년도 총리실 국정활동 수행경비로 5억4,000만원이 추가지출되어 당초보다 40%가 초과집행된 이유와 용도를 총리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99년도는 IMF위기 극복을 위해서 4대 부문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계 여론 수렴과 각종 현안업무 조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국무총리의 국정활동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불가피한 예산조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宋錫贊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방만한 운용 등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기금과 예산의 중복방지, 기타 기금의 공공기금화, 기금운용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 기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宋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정부도 宋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년 8월 기금제도가 도입된 지 40년 만에 최초로 기금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예산사업과의 중복문제라든지 또 기금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장·단기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조속히 개선이 가능한 사안인 방만한 사용의 경우에는 이를 억제토록 하고 예산사업과 중복지원을 차단하며 자산운영의 전문성 제고 등은 2001년 공공기금 운용계획에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43개 공공기금의 재정수지를 2000년 11조2,000억 적자에서 2001년에는 균형수준으로 대폭 개선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추가적인 유사기금의 통·폐합이라든지 기타기금의 공공기금으로의 전환문제, 기금운용에 대한 국회통제 강화 등 관계부처 등과 협의가 필요한 제도적 과제는 현재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宋 위원님께서 예비비 운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예산지출을 최소화하여 집행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예비비 규모에 대한 상한선을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별회계 예비비 제도의 폐지 또는 그 규모의 대폭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예산지출을 최소화해서 집행의 적법성을 높여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金貞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릴 바와 같이 예

비비 예산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편성하고 예비비 지출을 필요최소한으로 억제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예비비 규모의 상한선 설정문제에 대해서는 예비비는 예산회계법 제21조에 따라 예측할 수 있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재정의 신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바람직하며 일률적으로 상한선을 설정할 경우 대규모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추경편성이 불가피한 등의 문제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의 폐지 또는 규모 축소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의 경우도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비비를 편성해 오고 있으나 새로운 세출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가급적 기존사업의 전략을 통한 집행잔액 등을 활용함에 따라 예비비 집행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집행실적이 낮은 특별회계 예비비를 98년 예산의 0.9%에서 2000년과 2001년에 1년 예산안의 경우에는 0.1% 수준으로 축소편성함으로써 재원 배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柳在珪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2001년 농어촌 예산을 얼마나 반영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농림부와 해수부에서는 내년도 농어촌 예산을 금년보다 23% 수준 증액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율을 상향조정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필수적 증액 소요가 세출 규모 증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 농어촌 부문 예산규모는 금년 수준인 9조3,193억 원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농어민 의료, 농어촌 도로 등 농어민 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예산을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농어촌 지원예산은 5.1% 증가한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농어촌 부문 예산 내용 면에 있어서는 기계화, 용수, 배수개선 등 생산성 제고와 재해방지를 위한 투자를 확충하는 동시에 논농업 직불제와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그리고 어선공제료에 대한 신규지원 등 농어민의 실질적 소득안정에 기여하는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孫泰仁 위원님께서……

○委員長 張在植 잠깐, 미안합니다.

자정이 되었으므로 회의 차수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산회하고 다시 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 산회)

○出席委員(47人)

高 珍 富	權 琪 述	權 五 乙	金 景 梓
金 德 圭	金 文 洙	金 聖 順	金 榮 煥
金 容 甲	金 容 鈞	金 龍 學	金 龍 煥
金 元 雄	金 貞 淑	金 學 元	金 洪 信
羅 午 淵	閔 鳳 基	柳 三 男	柳 在 珪
朴 世 煥	朴 鍾 根	裴 基 善	孫 泰 仁
宋 錫 贊	宋 永 吉	宋 榮 珍	申 溪 輪
辛 基 南	申 榮 國	申 鉉 泰	沈 揆 喆
尹 榮 卓	李 康 斗	李 根 鎭	李 相 洙
李 良 熙	李 在 昌	李 漢 久	李 浩 雄
張 在 植	丁 世 均	鄭 宇 澤	鄭 哲 基
鄭 亨 根	咸 承 熙	黃 祐 呂	

○請暇委員(1人)

李 源 性

○委員아닌出席議員(4人)

金 武 星 安 商 守 吳 長 燮 韓 和 甲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員

수 석 전 문 위 원	金 光 琳
전 문 위 원	張 基 泰
입 법 심 의 관	李 鍾 澤

○出席國務總理및國務委員

국 무 총 리	李 漢 東
재 정 경 제 부 장 관	陳 稔
통 일 부 장 관	朴 在 圭
법 무 부 장 관	金 正 吉
국 방 부 장 관	趙 成 台
교 육 부 장 관	李 敦 熙
문 화 관 광 부 장 관	金 漢 길
농 립 부 장 관	韓 甲 洙
정 보 통 신 부 장 관	安 炳 燁
보 건 복 지 부 장 관	崔 善 政
환 경 부 장 관	金 明 子
노 동 부 장 관	金 浩 鎭
해 양 수 산 부 장 관	盧 武 鉉
기 획 예 산 처 장 관	田 允 喆

○出席政府委員

재정경제부차관      李 晶 載  
외교통상부차관      潘 基 文  
국방부차관          文 一 燮  
행정자치부차관      金 在 榮  
과학기술부차관      韓 錠 吉  
산업자원부차관      吳 盈 敎  
보건복지부차관      張 盈 錫  
환경부차관          鄭 東 洙  
건설교통부차관      姜 吉 夫  
해양수산부차관      洪 承 湧  
법제처장              朴 承 珠  
국정홍보처장        吳 弘 根  
국가보훈처장        金 有 培  
국가보훈처차장      金 鍾 成  
국세청장              安 正 男  
조달청장              金 成 豪  
통계청장              尹 英 大  
병무청장              吳 鈞 祿  
경찰청장              李 茂 永  
기상청장              文 勝 義  
문화재청장          徐 廷 培  
농촌진흥청장        李 銀 鍾  
농촌진흥청차장      朴 昌 正  
산림청장              申 洵 雨  
산림청차장          金 容 漢  
중소기업청장        韓 峻 皓  
식품의약품안전청장 梁 奎 煥  
철도청장              鄭 鍾 煥  
해양경찰청장        金 宗 佑  
관세청차장          李 大 榮  
특허청차장          劉 大 詳  
철도청차장          崔 吉 大

○法院行政處參席者

처                      邊 在 承  
차                      金 龍 潭

○監査院參席者

원                      李 種 南  
사무총장              李 秀 一

○金融監督委員會參席者

위원장              李 瑾 榮

○憲法裁判所參席者

사무처장              朴 容 相  
차                      徐 相 弘

○中央選舉管理委員會參席者

사무총장              孫 石 鎬

○中央人事委員會參席者

위원장              金 光 雄

○女性特別委員會參席者

위원장              白 京 男

○公正去來委員會參席者

위원장              李 南 基  
부위원장              金 炳 日

【報告事項】

○特別委員辭任및補任

委員會	辭任委員	補任委員	交渉團體
豫算決算特別	文喜相	宋錫贊	새천년민주당

(10월10일자)

○議案回附

1999년도세입세출결산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 9월2일 정부제출)

이상 2건 10월24일 회부됨

예산회계법중개정법률안(김홍신 의원 대표발의)

(10월13일, 김홍신·권오을·김부겸·김영춘·김원웅·맹형규·박원홍·손희정·심재철·안상수·안영근·원희룡·윤여준·이부영·이성현·이재오·전재희·정병국·정인봉·현승일 의원 발의)

10월14일, 관련위원회로서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까지 의견제시기간을 정하여 회부됨.

예산회계에관한기본법안(이강두 의원 대표발의)

(11월3일, 이강두·이한구·박종근·김무성·이재창·김홍신·김용균 의원 외 126인 발의)

11월8일 관련위원회로서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까지 의견제시기간을 정하여 회부됨.